최종보고서

충청남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정계획

2012. 2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제 출 문

충청남도지사 귀하

충청남도와 계약 체결한
「충청남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정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2. 2

충남발전연구원장

목 차

Ⅰ. 서론 ····· 1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3
2. 계획의 범위 ····· 4
3. 연구 진행 및 계획의 추진체계 ····· 8

Ⅱ. 지역경제 및 산업적 토지이용 현황분석 ····· 11

1. 지역경제 일반현황 ····· 13
2. 산업구조 현황 ····· 16
3. 제조업 현황 ····· 18
4. 산업단지 현황 ····· 32

Ⅲ. 산업입지정책 ····· 67

1. 우리나라 산업입지정책 ····· 69
2. 충남의 산업입지관련 정책 ····· 78
3. 산업입지정책의 최근 경향 ····· 83
4. 충남의 산업입지 정책방향 종합 ····· 93
5. 소결 ····· 97

Ⅳ. 산업입지 여건변화 전망과 과제 ····· 101

1. 경제적 여건변화 전망 ····· 103
2. 사회적 여건변화 전망 ····· 118
3. 산업입지 여건변화 전망 ····· 122
4. 소결 ····· 129

Ⅴ. 충남 산업입지 수요추정 ····· 133

1. 수요추정의 방법과 예측기법 ····· 135
2. 수요추정 자료와 결과 ····· 139
3. 소결 ····· 155

Ⅵ. 충남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정계획 ····· 157

1.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입지 공급 ····· 159
2.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충남 적용방안 ····· 162
3.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기본방향 ····· 166
4. 충남 산업입지 수급계획 ····· 168

표목차

<표 2-1> 지역별 GRDP(2005년 불변가격) ····· 14
<표 2-2> 지역별 1인당 GRDP(2005년 불변가격) ····· 16
<표 2-3> 산업별 부가가치액 변화(2005년 불변가격) ····· 18
<표 2-4> 지역별 제조업체 수(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 19
<표 2-5> 도내 시군별 제조업체 수(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 21
<표 2-6> 지역별 제조업 종사자 수(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 22
<표 2-7> 도내 시군별 제조업체 종사자 수(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 23
<표 2-8> 지역별 제조업 생산액(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경상가격) ····· 25
<표 2-9> 도내 시군별 제조업 생산액(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경상가격) ····· 26
<표 2-10> 지역별 제조업체 당 평균 생산액(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경상가격) ····· 28
<표 2-11> 도내 시군별 제조업체 당 평균 생산액(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경상가격) ····· 29
<표 2-12> 지역별 제조업 노동생산성(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경상가격) ····· 30
<표 2-13> 도내 시군별 노동생산액(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경상가격) ····· 31
<표 2-14> 전국 산업단지 유형별 현황 ····· 32
<표 2-15> 전국 산업단지 유형별 비중(지정면적 기준) ····· 33
<표 2-16> 충청남도 산업단지 지정 현황 ····· 34
<표 2-17> 충청남도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 37
<표 2-18a> 천안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 38
<표 2-18b> 공주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 40
<표 2-18c> 보령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 41
<표 2-18d>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 43
<표 2-18e> 서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 44
<표 2-18f> 논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 46
<표 2-18g> 계룡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 47
<표 2-18h> 당진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 48
<표 2-18i> 금산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 50
<표 2-18j> 연기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 51
<표 2-18k> 부여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 53
<표 2-18l> 서천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 54
<표 2-18m> 청양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 56
<표 2-18n> 홍성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 57
<표 2-18o>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 59
<표 2-18p> 태안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 60
<표 2-19> 충청남도 시군별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현황 종합 ····· 62
<표 2-20> 충청남도 유형별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현황 종합 ····· 63

<표 3-1> 우리나라의 최근 산업입지정책 개요 ····· 70
<표 3-2>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 및 법제 추이 ····· 72
<표 3-3> 산업입지법 및 산업집적법의 주요내용 ····· 75
<표 3-4> 전체 제조업(종사자 10인 이상)에 대한 산업단지의 비중(2009년 기준) ····· 77

<표 3-5> 산업입지법에서의 충남 산업입지 개발방향 ····· 79
<표 3-6>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상 공장부지 전망 ····· 79
<표 3-7>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상 산업단지 공급계획 ····· 80
<표 3-8>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상 발전전략 ····· 80
<표 3-9> 임대산업단지 제도 ····· 81
<표 3-10> 충남의 산업입지 지원책 ····· 82
<표 3-11> 새로운 산업공간의 특성 ····· 84
<표 3-12> 새로운 개념의 산업입지 특성 ····· 85
<표 3-13> 외국인전용공단 개발을 통한 직접고용 효과 ····· 91

<표 4-1> 산업별 국내 총생산 전망 ····· 108
<표 4-2>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 111
<표 4-3> 충남 주요 수출품목 ····· 114
<표 4-4> 충남의 유년 및 노년층 인구 전망 ····· 120
<표 4-5>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추이 ····· 122
<표 4-6> 수도권 정책 추이 ····· 125

<표 5-1> 부지면적에 대한 추세연장법을 이용한 충남 제조업 부지면적의 추세 ····· 141
<표 5-2> 부지면적에 대한 추세연장법을 이용한 충남 제조업 산업입지 수요의 기간별 연평균 증가(성장률) ····· 142
<표 5-3>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한 광역시도별 원단위 면적 ····· 144
<표 5-4>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자료를 이용한 광역시도별 고용 원단위 면적 ····· 147
<표 5-5> 연도별 공장용지(부지면적) 현황 ····· 148
<표 5-6> 분석의 기간을 20년(1990-2009)으로 한정한 충남 제조업 실질 생산액의 연간 증가에 대한 추정결과 ····· 150
<표 5-7> 충남 제조업 실질 생산액의 연도별 추정치 ····· 151
<표 5-8> 충남 제조업 실질 생산액의 기간별 연평균 성장률 ····· 152
<표 5-9> 분석의 기간을 20년(1990-2009)으로 한정한 권역별 제조업 실질 생산액의 연간 증가에 대한 추정결과의 요약 ····· 152
<표 5-10> 충남 제조업 부지면적(개별 입지 + 계획입지) 수요의 연도별 추정치 ····· 154
<표 5-11> 생산액 원단위를 이용한 충남 제조업 산업입지 수요의 기간별 연평균 변화와 성장률 ····· 154
<표 5-12> 충남 전체와 권역 및 시군별 계획입지(부지면적)에 대한 연간 수요 예측결과의 요약 ····· 155

<표 6-1> 충남 산업입지 공급의 추진전략 및 계획과제 ····· 173
<표 6-2> 권역별 산업용지 연평균 공급규모(수요추정 결과) ····· 175
<표 6-3> 향후 2020년까지 충남 권역별 산업용지 공급규모(수요추정 결과) ····· 176
<표 6-4> 향후 2020년까지 충남 권역별 계획입지 누적 공급규모(수요추정 결과) ····· 177
<표 6-5> 향후 2020년까지 충남 권역별 산업입지 공급계획 ····· 178
<표 6-6> 향후 2020년까지 충남 권역별 공급계획상 산업입지 누적 공급규모 ····· 178
<표 6-7> 권역별 산업입지 수급계획(계획입지) ····· 180
<표 6-8> 권역별 산업입지 수급계획(개별입지) ····· 180
<표 6-9> 기 수립된 수급계획에서의 권역별 산업용지 규모비교 ····· 181

●●●● 그림목차 ●●●●

<그림 1-1> 지역 구분 ····· 5
<그림 1-2> 연구의 진행 ····· 9
<그림 1-3> 연구의 추진체계 ····· 10

<그림 2-1> 산업구조 변화(부가가치액 기준) ····· 17
<그림 2-2> 충청남도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 36
<그림 2-3a> 천안시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 39
<그림 2-3b> 공주시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 40
<그림 2-3c> 보령시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 42
<그림 2-3d> 아산시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 43
<그림 2-3e> 서산시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 45
<그림 2-3f> 논산시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 46
<그림 2-3g> 계룡시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 47
<그림 2-3h> 당진시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 49
<그림 2-3i> 금산군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 50
<그림 2-3j> 연기군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 52
<그림 2-3k> 부여군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 53
<그림 2-3l> 서천군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 55
<그림 2-3m> 청양군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 56
<그림 2-3n> 홍성군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 58
<그림 2-3o> 예산군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 59
<그림 2-3p> 태안군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 60
<그림 2-4> 충남 시군별 산업단지 지정면적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 61
<그림 2-5> 충청남도 산업단지 시기별 누적현황 ····· 65

<그림 3-1> 산업입지 관련 법률 체계 ····· 73
<그림 3-2> 산업입지법 및 산업집적법의 목적 ····· 74
<그림 3-3> 계획입지의 종류와 관련 개별법 ····· 76

<그림 4-1> 지역별 생산액 증가율 및 점유율 변화 ····· 116
<그림 4-2> 각 시도별 노년층 인구비율 ····· 120
<그림 4-3> 충남 지역 지가변동률 추이 ····· 126
<그림 4-4> 지역별 에너지 부문 1인당 및 단위소득 당 온실가스 배출현황(2006) ···127

<그림 5-1> 공산품에 대한 생산자물가지수 ····· 136
<그림 5-2> 연도별 충남 제조업 부지면적 ····· 140
<그림 5-3> 충남 개별 시군의 계획입지 연평균 수요(㎢) ····· 143
<그림 5-4> 실질 생산액 원단위 부지면적과 건물연면적(㎡/백만원) ····· 145
<그림 5-5> 고용 원단위 부지면적과 건물연면적(㎡/명) ····· 146
<그림 5-6> 연평균 공장용지(부지면적) 증가(2004-2010년, ㎢) ····· 148
<그림 5-7> 고용 원단위 부지면적(㎡/명) 추세 ····· 149
<그림 5-8> 분석기간을 20년(1990-2009)으로 한정한 충남 제조업 실질 생산액 추세(백만원) ····· 151

<그림 6-1>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비전 및 목표 ····· 169

Ⅰ. 서 론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3. 연구 진행 및 계획의 추진체계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의 배경

- 충청남도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심에 해당하고 수도권에 인접하여 타 지역 기업들의 빈번한 유입과 창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역임
  - 이로 인해 지역의 경제적 여건은 급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 변화가 고려된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수정이 필요함
  - 특히, 기업들의 개별 입지를 최소화하고 계획 입지를 유도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업입지 공급을 원활히 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함
- 충남의 지역경제와 산업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변화에 대해 지역이 가진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 수도권 규제완화와 중앙정부 총량 규제 움직임에 따른 수도권 기업의 도내 이전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의 마련이 요구됨
- 공간적으로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은 지역경제의 성장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가운데 하나에 해당함
  - 이는 토지가 수요측면에서 적지성(敵地性)과 적시성(適時性)을 지니며 공급측면에서 부동성(不動性)과 부증성(不增性)을 지니기 때문임
  - 이러한 토지의 특성은 변화무상한 기업의 입지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함
  - 따라서 지역경제와 토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토지의 공급 및 수요 규모를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 있고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는 충청남도의 산업용지 및 산업단지를 포함한 산업적 토지이용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적인 측면에서 유도되어야 함을 의미함
  - 지역 차원에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장래 발생하게 될 산업적 토지나 택지 등의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용지 공급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특히, 지역경제의 환경변화와 계획 또는 집행 중인 충남도의 전략산업 육성정책 등을 충분히 고려한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 2008년 이후 절차 간소화 등으로 산업단지 지정이 급증하였으나 미분양 증가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중앙정부의 산업입지 공급관리정책이 총량 규제로 전환되었으며, 이의 일환으로 시도별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재산정 및 검증이 요구됨

2) 계획의 목적

-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계획은 충청남도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중·장기적 산업용지 및 산업단지 수급계획과 방안을 수립(수정)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함
- 이러한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기 계획된 충청남도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정 및 보완
  - 국토해양부의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산업용지 수요예측 및 합리적인 수급규모 제시
  -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는 중·장기적 산업용지 및 산업단지 조성방안 수립

2. 계획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충청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함
- 산업단지 및 산업용지에 대한 수요의 분석과 예측 및 이에 기초한 수급계획의 수립은 국토해양부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2008)'을 따름
  - 천안시는 두 개의 구로 구분되지만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함
  - 도내 각 시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행정구역은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음

<표 1-1> 지역 구분

"8개 시와 8개 군"

2) 시간적 범위

- 충청남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기준 연도 : 2010년(자료활용 기준년도)
  - 목표 연도 : 2020년

  - 본 연구에서 충남 도내 지역경제 및 산업입지 현황분석은 자료구득이 가능한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짐
  - 권역별 산업용지에 대한 수요예측 및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수립은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과 동일하게 2020년을 목표 연도로 하여 이루어짐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2008)'에서 제시하는 목표 연도는 2018년이나, 지침에서 '국토종합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연도와 단계별 개발방안 등을 감안하여 목표 연도의 끝자리는 0년 또는 5년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고 명시함

3) 내용적 범위

- 지금까지 설명한 계획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 5개 부문을 포함함
  - 충남 지역경제 및 산업적 토지이용 현황 분석
  - 충남 산업입지 수요 예측
  - 도내 산업단지 개발가능 규모 산정
  -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의 충남 적용방안
  - 충남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정계획 수립

(1) 충남 지역경제 및 산업적 토지이용 현황 분석

- 충남 지역경제 일반현황, 산업구조 현황, 제조업 현황, 산업단지 현황을 분석함
  - 지역경제 일반현황에 대한 분석은 지역 내 총생산, 지역별 1인당 GRDP 등을 시기별로 타 시도 수치와의 비교를 통해 이뤄짐
  - 산업구조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전산업을 3차 산업으로 구분하여 시기별로 전국과 비교함으로써 춤남의 산업구조변화를 파악함
  - 제조업 현황은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을 주로 이용하여 분석됨
  - 산업단지 현황은 단지유형별 조성 및 분양 현황을 주요 내용을 분석함

(2) 충남 산업입지 수요 예측

- 본 단계에서는 앞서 이루어진 현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래 충남의 산업입지 수요 변화가 예측됨
  - 산업입지 수요 변화의 예측은 국토해양부의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이루어짐

- 최소 20년의 부지면적에 대한 연도별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단순 추세법,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method), 그리고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 method) 등을 이용해 산업입지 수요를 예측함
- 더불어, 충남 제조업 실질 생산액 추정치와 실질 생산액 원단위 부지면적을 이용한 산업입지 수요 예측의 결과를 제시함

(3) 도내 산업단지 개발가능 규모 산정

-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법적 규제설정 여부와 더불어 GIS 분석을 통해 향후 도내에서 산업단지 및 산업용지 조성이 가능한 공급가능지를 분석함
  - 산업단지 개발가능 규모를 도내 시군별로 산정함으로써 향후 산업단지 공급계획의 지역 간 조정에 활용함

(4)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의 충남 적용방안

- 산업입지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상위 법제에서 충남에 해당하는 내용과 충남의 산업입지 관련 조례를 정리하여 제시함
- 국토해양부의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을 검토하고, 충남의 산업입지 특성을 고려한 이의 적용방안을 제시함

(5) 충남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 앞에서의 분석 및 예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함
-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앞서 제시된 수요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권역별 산업단지 조성 스케줄이 구체적으로 제시됨

3. 연구 진행 및 계획의 추진체계

1) 연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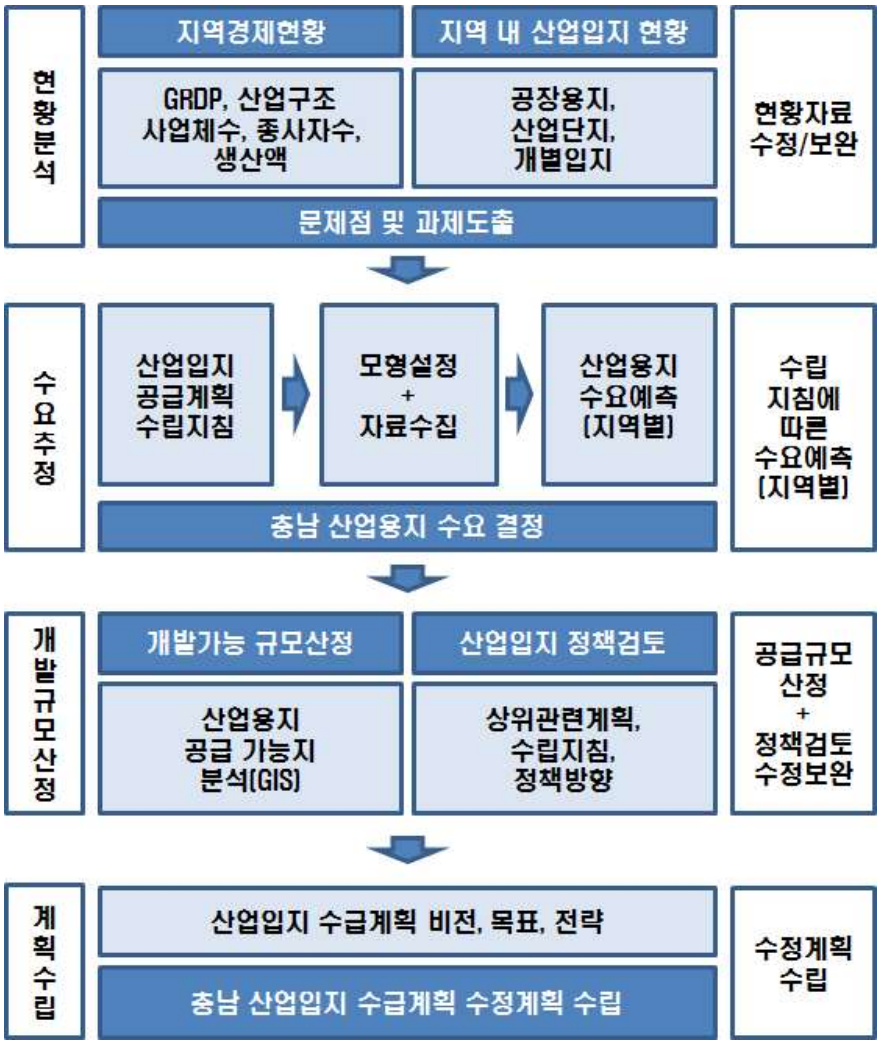
- 본 계획에서 다루어지는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구조는 다음의 (그림 1-1)에 제시된 바와 같음

- 제 1 단계 : 현황분석
  - 지역경제 및 산업별 생산, 토지이용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짐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충청남도가 당면한 산업입지의 문제점과 과제가 도출됨

- 제 2 단계 : 산업적 토지이용 변화 예측
  - 국토해양부의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대한 검토와 지침에 따른 충남 산업입지 수요예측이 이루어짐
  - 도내 각 지역별 산업입지 수요가 제시됨

- 제 3 단계 : 개발규모 산정
  - 앞서 이루어진 지역별 산업적 토지이용 변화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각 지역별로 산업용지 개발규모가 산정됨
  - 이를 위해 먼저 GIS를 이용한 공급가능지 분석이 이루어짐

- 제 4 단계 : 계획수립
  - 장래 충남의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정계획의 기본방향이 제시됨
  - 또한 공급가능지 분석 및 정책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충남 내 각 권역별로 산업입지 공급 스케줄이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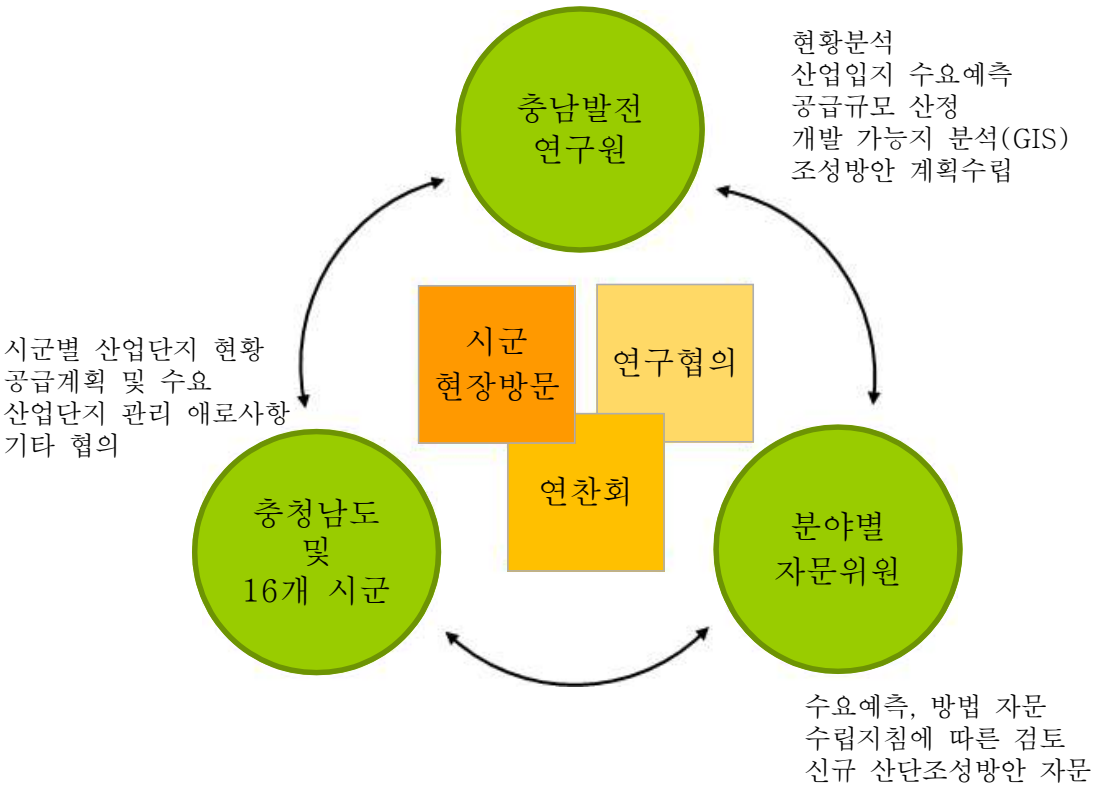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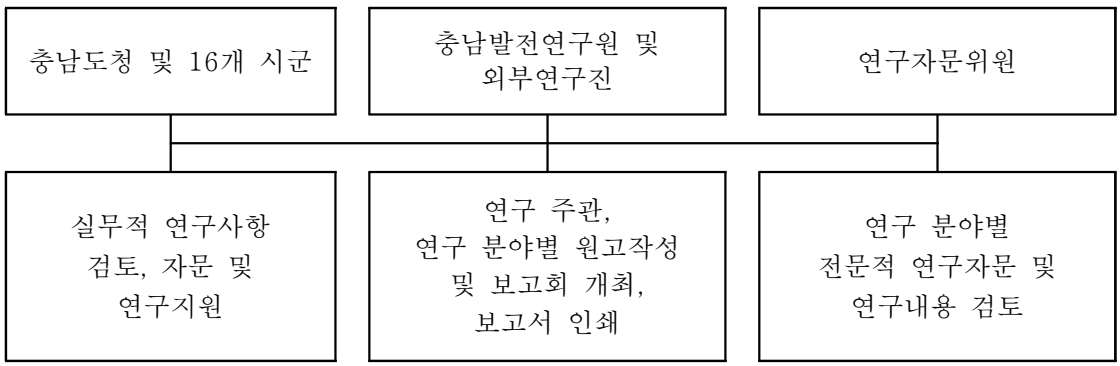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의 진행

2) 계획 추진체계

- 본 계획의 추진체계는 (그림 Ⅰ-2)와 같음
  - 본 계획은 충남발전연구원의 내부연구진을 중심으로, 충남도청 및 도내 16시군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연구협의 과정을 통해 연구가 진행됨
  - 또한 외부연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본 계획의 완성도를 높임
  - 이외 연구자문진을 통해 본 계획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함

Ⅰ. 서 론





(그림 1-2) 연구의 추진체계

Ⅱ. 지역경제 및 산업적 토지이용 현황분석

1. 지역경제 일반현황
2. 산업구조 현황
3. 제조업 현황
4. 산업단지 현황

1. 지역경제 일반현황

1) 지역 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2000년대 지역 내 총생산의 연평균 성장률은 충남이 가장 높음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2000년 691,468십억원에서 2010년 1,064,815십억원으로, 이 기간 연평균 4.41%씩 증가하였음
- 이 기간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전국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곳은 충남, 경남, 경기, 인천이며, 이외의 시도에서는 전국 수치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함
  - 시도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충남이 9.40%로 가장 높고, 대구가 2.24%로 가장 낮게 나타남

지역 간 경제규모 격차는 최근 들어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경제규모 격차는 2000년대 중반 좁혀지다가 2000년대 후반에 들어 다시 벌어지고 있음
  - 지역별 GRDP 규모의 변동계수를 보면, 2000년 1.0257에서 2005년 1.0146, 2010년 1.0289로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이러한 변동계수 값의 증가는 곧 지역 간 경제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나타냄
  - 수도권 지역의 경제규모가 전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7.72%에서 2010년 48.89%로 조금 증가함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지역 간 불균형은 개선되다가 최근 다시 심화되고 있음

<표 2-1> 지역별 GRDP(2005년 불변가격)

(단위 : 십억원,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연평균 증가율
	GRDP	비율	GRDP	비율	GRDP	비율	
서울	182,152	26.3	208,899	24.0	243,107	22.8	2.93
부산	39,277	5.7	48,069	5.5	53,957	5.1	3.23
대구	25,962	3.8	28,756	3.3	32,386	3.0	2.24
인천	32,788	4.7	40,398	4.6	51,133	4.8	4.54
광주	15,501	2.2	18,896	2.2	22,458	2.1	3.78
대전	16,128	2.3	20,030	2.3	23,210	2.2	3.71
울산	34,245	5.0	41,697	4.8	45,361	4.3	2.85
경기	114,996	16.6	169,315	19.5	226,400	21.3	7.01
강원	19,753	2.9	23,015	2.6	26,062	2.4	2.81
충북	22,060	3.2	26,721	3.1	33,834	3.2	4.37
충남	30,963	4.5	47,497	5.5	76,031	7.1	9.40
전북	21,773	3.1	25,221	2.9	29,959	2.8	3.24
전남	37,254	5.4	42,816	4.9	49,720	4.7	2.93
경북	45,333	6.6	61,757	7.1	68,890	6.5	4.27
경남	46,836	6.8	58,251	6.7	73,228	6.9	4.57
제주	6,448	0.9	7,966	0.9	9,080	0.9	3.48
전국	691,468	100.0	869,305	100.0	1,064,815	100.0	4.41
변동계수	1.0257		1.0146		1.0289		

주 : 변동계수 = 표준편차/평균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충청남도는 국민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지역이며,
지역경제의 비중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증대되고 있음**

- 특히 충청남도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선도하는 지역이며, 지역경제의 비중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증대되고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남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9.40%로 전국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충남 GRDP가 전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5%에서 2005년 5.5%, 그리고 2010년 7.1%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2) 지역별 1인당 GRDP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간 1인당 GRDP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1인당 GRDP는 2000년 14.5백만원에서 2010년 21.1백만원으로 이 기간 연평균 3.82%씩 꾸준하게 증가함
- 소득수준의 편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그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음
  - 지역별 1인당 GRDP의 변동계수 값이 2000년 0.3722에서 2005년 0.3642, 2010년 0.3639로 감소함
  - 즉, 지역 간 소득수준의 격차가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최근 완화폭은 감소하고 있음

충청남도의 1인당 GRDP 및 그 증가율은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

- 충청남도의 1인당 GRDP는 2000년 16.1백만원에서 2010년 36.6백만원으로, 이 기간 연평균 8.56%씩 증가하였음
  - 이러한 성장률은 전국 최상위권이며, 이에 따라 충남의 1인당 소득수준은 2000년 전국 평균의 1.112배에서 2010년 1.738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따라서, 지역경제의 전체 규모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1인당 소득수준 측면에서도 충청남도는 국민경제를 선도하는 지역임을 알 수 있음

<표 2-2> 지역별 1인당 GRDP(2005년 불변가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연평균 성장률
	GRDP	비율	GRDP	비율	GRDP	비율	
서울	17.665	1.219	20.546	1.153	23.574	1.118	2.93
부산	10.346	0.714	13.212	0.741	15.123	0.717	3.87
대구	10.285	0.710	11.451	0.643	12.894	0.612	2.29
인천	12.879	0.889	15.535	0.872	18.538	0.879	3.71
광주	11.299	0.780	13.480	0.756	15.439	0.732	3.17
대전	11.640	0.803	13.770	0.773	15.436	0.732	2.86
울산	32.921	2.273	38.337	2.151	40.274	1.911	2.04
경기	12.473	0.861	15.828	0.888	19.208	0.911	4.41
강원	12.705	0.877	15.210	0.854	17.036	0.808	2.98
충북	14.731	1.017	17.948	1.007	21.835	1.036	4.01
충남	16.113	1.112	24.201	1.358	36.632	1.738	8.56
전북	10.891	0.752	13.378	0.751	16.030	0.760	3.94
전남	17.485	1.207	21.765	1.221	25.916	1.229	4.01
경북	16.207	1.119	22.971	1.289	25.610	1.215	4.68
경남	15.136	1.045	18.431	1.034	22.254	1.056	3.93
제주	11.889	0.821	14.287	0.802	15.896	0.754	2.95
전국	14.486	1.000	17.820	1.000	21.079	1.000	3.82
변동계수	0.3722		0.3642		0.36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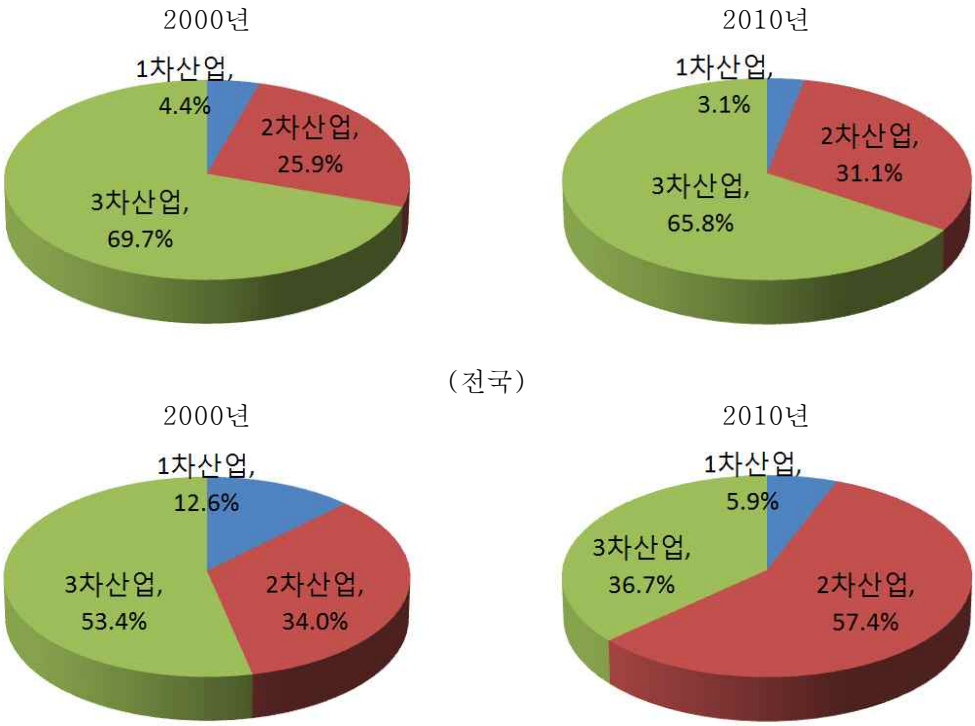
주 : 변동계수 = 표준편차/평균. 비율은 전국 평균을 1로 했을 때, 각 지역별 소득수준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냄.
1인당 GRDP = GRDP/지역인구수(주민등록인구)

2. 산업구조 현황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경우 이러한 추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액을 기준으로 한 산업구조는 3차 산업 > 2차 산업 > 1차 산업의 비중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체적으로 1차 산업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제조업(2차 산업)의 비중은 2000년 25.9%에서 2010년 31.1%로 증가하였음

- 서비스(3차 산업)의 비중은 2000년 69.7%에서 2010년 65.8%로 약간 감소함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그림 2-1) 산업구조 변화(부가가치액 기준)

- 충청남도의 산업구조를 보면 제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GRDP 기준 제조업의 비중은 2000년 34.0%에서 2010년 57.4%로 크게 증가함
  - 반면 1차 산업의 비중은 2000년 12.6%에서 2010년 5.9%로 감소하며, 서비스 부문의 비중 역시 2000년 53.4%에서 2010년 36.7%로 감소함
-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국 및 충남 각 산업의 생산규모(부가가치액 기준)는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차 산업의 연평균 부가가치액 성장률은 전국이 0.8%, 충남이 1.3%로 타 산업부문 및 GDP(GRDP) 성장률에 비해 크게 낮음

-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 전국의 성장률은 6.4%로 GDP 성장률 4.4%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충청남도 제조업 성장률은 연평균 15.2%로 충청남도 GRDP 성장률 9.3%를 크게 웃돌고 있음

제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와 충남 지역경제의 성장을 선도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제조업이 우리나라 국민경제와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성장을 선도하고 있음
  - 특히 국민경제를 선도하는 충남의 경우, 제조업 부문의 비약적 성장을 토대로 지역경제의 고속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2-3> 산업별 부가가치액 변화(2005년 불변가격)

(단위 : 십억원, %)

구분		2000년		2005		2010년		연평균 증가율
		부가가치	비율	부가가치	비율	부가가치	비율	
전국	전산업	623,719	100.0	780,093	100.0	960,828	100.0	4.4
	1차 산업	27,668	4.4	27,676	3.5	29,938	3.1	0.8
	2차 산업	161,241	25.9	213,858	27.4	298,784	31.1	6.4
	3차 산업	434,810	69.7	538,559	69.0	632,106	65.8	3.8
충남	전산업	28,029	100.0	41,315	100.0	68,291	100.0	9.3
	1차 산업	3,529	12.6	3,505	8.5	4,016	5.9	1.3
	2차 산업	9,535	34.0	17,790	43.1	39,192	57.4	15.2
	3차 산업	14,965	53.4	20,020	48.5	25,083	36.7	5.3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3. 제조업 현황

1) 제조업 사업체 수(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우리나라 제조업체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역별로는 충남, 광주, 울산이 특히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체 수는 2000년 51,148개소에서 2009년 57,996개소로, 이 기간 동안 연평균 1.41%씩 증가함

  - 충남, 광주, 울산은 각각 4.2%, 3.8%, 3.6%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

제조업체의 지역별 편중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 제조업체의 지역별 편중현상은 계속해서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변동계수를 보면 2000년 1.197에서 2004년 1.268, 그리고 2009년 1.299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증가함

<표 2-4> 지역별 제조업체 수(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단위 : 개소, %)

구분	2000년		2004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서울	6,663	13.0	5,693	10.4	5,093	8.8	-2.94
부산	4,134	8.1	3,902	7.1	3,825	6.6	-0.86
대구	3,025	5.9	2,971	5.4	2,869	4.9	-0.59
인천	4,523	8.8	4,712	8.6	4,281	7.4	-0.61
광주	760	1.5	946	1.7	1,066	1.8	3.83
대전	623	1.2	648	1.2	728	1.3	1.75
울산	908	1.8	1,081	2.0	1,244	2.1	3.56
경기	15,771	30.8	18,306	33.4	20,050	34.6	2.70
강원	679	1.3	756	1.4	762	1.3	1.29
충북	1,696	3.3	1,886	3.4	2,050	3.5	2.13
충남	2,004	3.9	2,429	4.4	2,901	5.0	4.20
전북	1,285	2.5	1,233	2.3	1,593	2.7	2.42
전남	1,151	2.3	1,182	2.2	1,331	2.3	1.63
경북	3,219	6.3	3,563	6.5	3,972	6.8	2.36
경남	4,576	8.9	5,349	9.8	6,075	10.5	3.20
제주	131	0.3	140	0.3	156	0.3	1.96
전국	51,148	100.0	54,797	100.0	57,996	100.0	1.41
변동계수	1.197		1.268		1.299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충남 내에서 북부지역의 제조업체 수 증가율이 충남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함

- 충청남도 내에서 북부지역의 제조업체 수의 증가율이 충남 평균 4.20%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 서산(9.59%), 아산(9.05%), 당진(8.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연기군의 경우 2000년에 비해 2004년 증가했다가, 2009년은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선 지역은 논산, 금산, 연기, 서천 지역이며, 연기군은 2004년 187개소에서 2009년 150개소로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연기군은 세종시에 편입되는 지역으로 일부 산업단지가 재정비되면서 업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일부 반영하고 있음

도내 각 지역별 제조업체 수 편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의 제조업체 수가 충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천안과 아산 지역의 제조업체 수는 충남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의 제조업체 수가 충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9.3%에서 2004년 62.7%, 2009년 67.5%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도내 각 지역별 제조업체 수의 지역 간 격차 역시 2000년에 비해 확대되었음
  - 변동계수를 보면 2000년 1.423에서 2004년 1.431, 그리고 2009년 1.428로 2004년에 비해 2009년은 조금 감소했으나 2000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도내 모든 권역에서 제조업체 수의 증가는 지속됨

- 비록 북부권에서의 제조업체 수 증가가 크게 나타나지만, 서해안권, 내륙권, 금강권 모두에서 증가가 지속됨

- 제조업체 수의 증가는 북부지역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나, 부여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도 제조업체 수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표 2-5> 도내 시군별 제조업체 수(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단위 : 개소, %)

구분	2000년		2004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천안	736	36.7	860	35.4	967	33.3	3.08
공주	102	5.1	99	4.1	107	3.7	0.53
보령	54	2.7	62	2.6	76	2.6	3.87
아산	305	15.2	463	19.1	665	22.9	9.05
서산	57	2.8	86	3.5	130	4.5	9.59
논산	151	7.5	159	6.5	157	5.4	0.43
계룡	6	0.3	6	0.2	7	0.2	1.73
당진	91	4.5	114	4.7	195	6.7	8.84
금산	108	5.4	118	4.9	113	3.9	0.50
연기	147	7.3	187	7.7	150	5.2	0.22
부여	53	2.6	40	1.6	52	1.8	-0.21
서천	51	2.5	74	3.0	69	2.4	3.42
청양	30	1.5	34	1.4	37	1.3	2.36
홍성	38	1.9	47	1.9	77	2.7	8.16
예산	64	3.2	67	2.8	86	3.0	3.34
태안	11	0.5	13	0.5	13	0.4	1.87
충남	2,004	100.0	2,429	100.0	2,901	100.0	4.20
변동계수	1.423		1.431		1.428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 제조업 종사자 수(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제조업 종사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종사자 수는 2000년 2,310.9천명에서 2004년 2,385.6천명, 2009년 2,452.9천명으로 증가하였음

충청남도 제조업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최상위임

- 시도별로 제조업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충남, 광주, 제주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00~2009년 기간동안 제조업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이 0.66%인 반면, 충남은 연평균 4.51%의 증가율을 기록함

<표 2-6> 지역별 제조업 종사자 수(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단위 : 명, %)

구분	2000년		2004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서울	179,643	7.8	155,051	6.5	131,797	5.4	-3.38
부산	153,326	6.6	136,900	5.7	125,567	5.1	-2.19
대구	108,749	4.7	98,286	4.1	95,272	3.9	-1.46
인천	181,353	7.8	172,456	7.2	155,996	6.4	-1.66
광주	41,873	1.8	50,523	2.1	56,909	2.3	3.47
대전	32,876	1.4	30,250	1.3	32,925	1.3	0.02
울산	128,811	5.6	137,232	5.8	138,377	5.6	0.80
경기	657,520	28.5	711,989	29.8	724,730	29.5	1.09
강원	28,070	1.2	27,676	1.2	28,023	1.1	-0.02
충북	98,373	4.3	104,925	4.4	116,892	4.8	1.93
충남	122,900	5.3	148,218	6.2	182,757	7.5	4.51
전북	67,378	2.9	64,570	2.7	73,721	3.0	1.00
전남	58,703	2.5	59,655	2.5	66,805	2.7	1.45
경북	193,600	8.4	209,647	8.8	210,827	8.6	0.95
경남	254,679	11.0	275,170	11.5	308,557	12.6	2.16
제주	3,051	0.1	3,009	0.1	3,725	0.2	2.24
전국	2,310,905	100.0	2,385,557	100.0	2,452,880	100.0	0.66
변동계수	1.064		1.118		1.113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계룡시와 태안군을 제외한 도내 모든 지역에서 제조업 종사자 수는 증가하였으며, 당진시의 제조업 종사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음

- 도내 시군별 제조업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당진시에서 10.0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당진시에 이어 아산시(8.74%), 홍성군(6.9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계룡시는 -7.94%, 태안군은 -3.78%로 나타남

<표 2-7> 도내 시군별 제조업체 종사자 수(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단위 : 명, %)

구분	2000년		2004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천안	46,952	38.2	56,840	38.3	59,849	32.7	2.73
공주	4,005	3.3	4,153	2.8	4,289	2.3	0.76
보령	1,778	1.4	2,121	1.4	2,742	1.5	4.93
아산	27,193	22.1	36,256	24.5	57,792	31.6	8.74
서산	7,967	6.5	9,151	6.2	10,386	5.7	2.99
논산	4,997	4.1	5,303	3.6	5,848	3.2	1.76
계룡	299	0.2	263	0.2	142	0.1	-7.94
당진	5,571	4.5	6,964	4.7	13,235	7.2	10.09
금산	4,244	3.5	4,430	3.0	5,287	2.9	2.47
연기	9,317	7.6	11,135	7.5	9,489	5.2	0.20
부여	2,304	1.9	2,247	1.5	2,510	1.4	0.96
서천	2,100	1.7	2,623	1.8	2,945	1.6	3.83
청양	1,511	1.2	1,562	1.1	1,770	1.0	1.77
홍성	1,411	1.1	1,479	1.0	2,580	1.4	6.94
예산	2,978	2.4	3,514	2.4	3,700	2.0	2.44
태안	273	0.2	177	0.1	193	0.1	-3.78
충남	122,900	100.0	148,218	100.0	182,757	100.0	4.51
변동계수	1.600		1.655		1.650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사업체 수와 마찬가지로 충남 제조업 종사자 수에서 천안과 아산의 비중은 64.3%에 달함

- 도내 시군별 제조업 종사자 수의 비중은 천안(32.7%), 아산(31.6%), 당진(7.2%), 서산(5.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3) 제조업 생산액(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제조업 생산액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액은 2000년 534,450십억원에서 2009년 1,121,973십억원으로, 이 기간 연평균 8.59%씩 성장하였음

제조업 생산액의 지역 간 격차는 완화되고 있음

- 제조업 생산액의 지역 간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완화되고 있음
  - 변동계수 값이 2000년 1.034에서 2004년 0.997, 2009년 0.960으로 감소함
  -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의 제조업 생산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6.6%에서 2004년 32.8%, 그리고 2009년 28.3%로 계속해서 감소함

충남의 제조업 생산액 규모 및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충청남도 제조업 생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14.38%로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음
  - 이외 경상남도, 전라남도,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11.55%, 10.80%, 그리고 10.26%로 전국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음
- 충남 제조업 생산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0년 7.2%에서 2009년 11.4%로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남

<표 2-8> 지역별 제조업 생산액(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경상가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0년		2004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생산액	비율	생산액	비율	생산액	비율	
서울	23,361,737	4.4	26,386,798	3.5	30,995,315	2.8	3.19
부산	17,092,295	3.2	23,558,308	3.1	36,045,222	3.2	8.64
대구	13,735,754	2.6	16,370,034	2.2	20,092,426	1.8	4.32
인천	32,440,382	6.1	40,881,545	5.5	51,573,339	4.6	5.29
광주	8,616,006	1.6	12,514,819	1.7	20,752,065	1.8	10.26
대전	6,971,857	1.3	8,920,921	1.2	11,628,592	1.0	5.85
울산	68,800,941	12.9	96,020,925	12.8	152,258,698	13.6	9.23
경기	139,816,120	26.2	178,581,214	23.8	235,326,127	21.0	5.96
강원	5,781,920	1.1	7,297,501	1.0	9,127,402	0.8	5.20
충북	22,052,584	4.1	30,008,306	4.0	43,113,489	3.8	7.73
충남	38,242,122	7.2	63,731,614	8.5	128,180,523	11.4	14.38
전북	15,094,182	2.8	20,136,567	2.7	30,166,192	2.7	8.00
전남	33,036,202	6.2	51,111,721	6.8	83,134,819	7.4	10.80
경북	58,417,083	10.9	96,611,356	12.9	133,542,284	11.9	9.62
경남	50,520,383	9.5	76,274,338	10.2	135,057,274	12.0	11.55
제주	470,712	0.1	669,418	0.1	979,324	0.1	8.48
전국	534,450,280	100.0	749,075,385	100.0	1,121,973,091	100.0	8.59
변동계수	1.034		0.997		0.960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도내 지역별 제조업 생산액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당진시, 아산시, 홍성군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도내 지역별 제조업 생산액 연평균 증가율은 당진시(21.42%), 아산시(20.64%), 홍성군(18.51%)에서 충남 전체 연평균 증가율 14.38%를 상회하고 있음
  - 반면, 계룡시는 연평균 증가율이 -0.21%로 생산액이 감소하고 있음

제조업 생산액 측면에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도내 각 지역별 제조업 생산액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고 있음
  - 제조업 생산액의 변동계수는 2000년 1.590에서 2004년 1.692, 그리고 2009년 1.764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표 2-9> 도내 시군별 제조업 생산액(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경상가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0년		2004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생산액	비율	생산액	비율	생산액	비율	
천안	11,250,904	29.4	22,854,849	35.9	28,714,194	22.4	10.97
공주	801,707	2.1	1,242,756	1.9	1,715,038	1.3	8.82
보령	250,509	0.7	465,335	0.7	808,205	0.6	13.90
아산	9,042,166	23.6	14,073,957	22.1	48,945,424	38.2	20.64
서산	9,521,516	24.9	13,890,539	21.8	26,009,758	20.3	11.81
논산	840,802	2.2	1,298,634	2.0	1,909,519	1.5	9.54
계룡	28,621	0.1	33,500	0.1	28,090	0.0	-0.21
당진	1,753,585	4.6	2,992,778	4.7	10,058,451	7.8	21.42
금산	630,816	1.6	1,181,682	1.9	1,787,991	1.4	12.27
연기	1,647,816	4.3	2,274,292	3.6	2,739,108	2.1	5.81
부여	464,410	1.2	553,249	0.9	880,288	0.7	7.36
서천	966,207	2.5	1,361,812	2.1	1,635,933	1.3	6.03
청양	397,327	1.0	476,700	0.7	780,293	0.6	7.79
홍성	161,465	0.4	244,573	0.4	744,455	0.6	18.51
예산	448,841	1.2	747,039	1.2	1,379,186	1.1	13.28
태안	35,430	0.1	39,919	0.1	44,590	0.0	2.59
충남	38,242,122	100.0	63,731,614	100.0	128,180,523	100.0	14.38
변동계수	1.590		1.692		1.764		

자료 : 충남통계연보, 각 년도

4) 사업체 규모 및 노동생산성

(1) 사업체 당 생산액

우리나라 제조업체 당 생산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제조업체 1개소 당 평균 생산액은 2000년 10,449백만원/개소에서 2009년 19,346백만원/개소로 약 2배가량 증가함

충청남도의 제조업체 당 생산액은 2000년 전국 평균의 1.826배 수준에서 2009년 2.284배 수준으로 증가함

- 충청남도 소재 제조업체 1개소 당 평균 생산액은 2000년 19,083백만원/개소에서 2009년 44,185백만원/개소로 약 2.5배 정도 증가함
  - 이에 따라 전국의 제조업체 1개소 당 평균 생산액을 1로 했을 때, 충남은 전국을 크게 상회하며 이러한 추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충남 제조업체 평균 생산액 규모는 2000년 전국 평균의 1.826배 수준에서, 2009년 2.284배 수준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함
    - 참고적으로 제조업체 평균 생산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으로 2009년 122,394백만원/개소이며, 충남은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충남 내 제조업체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

- 이러한 결과는 결국 대규모 제조업체들이 과거 경기, 경남 지역에 집중되다가, 이후 충남에 집적되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의미함

<표 2-10> 지역별 제조업체 당 평균 생산액(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경상가격)

(단위 : 백만원/개소)

구분	2000년		2004년		2009년	
	평균 생산액	비율	평균 생산액	비율	평균 생산액	비율
서울	3,506	0.336	4,635	0.339	6,086	0.315
부산	4,135	0.396	6,037	0.442	9,424	0.487
대구	4,541	0.435	5,510	0.403	7,003	0.362
인천	7,172	0.686	8,676	0.635	12,047	0.623
광주	11,337	1.085	13,229	0.968	19,467	1.006
대전	11,191	1.071	13,767	1.007	15,973	0.826
울산	75,772	7.252	88,826	6.498	122,394	6.327
경기	8,865	0.848	9,755	0.714	11,737	0.607
강원	8,515	0.815	9,653	0.706	11,978	0.619
충북	13,003	1.244	15,911	1.164	21,031	1.087
충남	19,083	1.826	26,238	1.919	44,185	2.284
전북	11,746	1.124	16,331	1.195	18,937	0.979
전남	28,702	2.747	43,242	3.163	62,460	3.229
경북	18,148	1.737	27,115	1.984	33,621	1.738
경남	11,040	1.057	14,260	1.043	22,232	1.149
제주	3,593	0.344	4,782	0.350	6,278	0.325
전국	10,449	1.000	13,670	1.000	19,346	1.000

주 : 비율은 전국 평균을 1로 했을 때, 각 지역별 평균 생산액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냄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충청남도 내에서 생산규모가 큰 제조업체 대부분이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에 집중되어 있음

- 제조업체 당 평균 생산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산시로 200,075백만원/개소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아산시 73,602백만원/개소, 당진시 51,582백만원/개소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의 세 지역은 충남 전체의 수치를 상회하는 지역임
  - 이는 충남 내에서 생산규모가 큰 제조업체가 세 지역에 다수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함

<표 2-11> 도내 시군별 제조업체 당 평균 생산액(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경상가격)

(단위 : 백만원/개소)

구분	2000년		2004년		2009년	
	평균 생산액	비율	평균 생산액	비율	평균 생산액	비율
천안	15,287	0.801	26,575	1.013	29,694	0.672
공주	7,860	0.412	12,553	0.478	16,028	0.363
보령	4,639	0.243	7,505	0.286	10,634	0.241
아산	29,646	1.554	30,397	1.159	73,602	1.666
서산	167,044	8.754	161,518	6.156	200,075	4.528
논산	5,568	0.292	8,168	0.311	12,163	0.275
계룡	4,770	0.250	5,583	0.213	4,013	0.091
당진	19,270	1.010	26,252	1.001	51,582	1.167
금산	5,841	0.306	10,014	0.382	15,823	0.358
연기	11,210	0.587	12,162	0.464	18,261	0.413
부여	8,762	0.459	13,831	0.527	16,929	0.383
서천	18,945	0.993	18,403	0.701	23,709	0.537
청양	13,244	0.694	14,021	0.534	21,089	0.477
홍성	4,249	0.223	5,204	0.198	9,668	0.219
예산	7,013	0.368	11,150	0.425	16,037	0.363
태안	3,221	0.169	3,071	0.117	3,430	0.078
충남	19,083	1.000	26,238	1.000	44,185	1.000

주 : 비율은 충남 평균을 1로 했을 때, 각 지역별 평균 생산액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냄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 제조업 종사자 1인당 생산액

우리나라의 제조업 종사자 1인당 생산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제조업 생산액/종사자 수)은 2000년 231백만원/명에서 2009년 457백만원/명으로, 이 기간 약 2배 정도 증가함
  - 2009년 기준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은 지역은 전남(1,244백만원/명), 울산(1,100백만원/명), 충남(701백만원/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2009년 기준 충청남도 제조업 종사자 1인당 생산액은 전국 평균의 1.533배 수준임

-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전국 평균에 비해 전남이 2.721배, 울산이 2.406배, 그리고 충남이 1.533배 수준임

<표 2-12> 지역별 제조업 노동생산성(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경상가격)

(단위 : 백만원/명)

구분	2000년		2004년		2009년	
	노동생산성	비율	노동생산성	비율	노동생산성	비율
서울	130	0.562	170	0.542	235	0.514
부산	111	0.482	172	0.548	287	0.628
대구	126	0.546	167	0.530	211	0.461
인천	179	0.773	237	0.755	331	0.723
광주	206	0.890	248	0.789	365	0.797
대전	212	0.917	295	0.939	353	0.772
울산	534	2.309	700	2.228	1,100	2.406
경기	213	0.919	251	0.799	325	0.710
강원	206	0.891	264	0.840	326	0.712
충북	224	0.969	286	0.911	369	0.806
충남	311	1.345	430	1.369	701	1.533
전북	224	0.969	312	0.993	409	0.895
전남	563	2.433	857	2.729	1,244	2.721
경북	302	1.305	461	1.468	633	1.385
경남	198	0.858	277	0.883	438	0.957
제주	154	0.667	222	0.708	263	0.575
전국	231	1.000	314	1.000	457	1.000

주 : 비율은 전국 평균을 1로 했을 때, 각 지역별 노동생산성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냄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표 2-13> 도내 시군별 노동생산액(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경상가격)

(단위 : 백만원/명)

구분	2000년		2004년		2009년	
	노동생산성	비율	노동생산성	비율	노동생산성	비율
천안	240	0.770	402	0.935	480	0.684
공주	200	0.643	299	0.696	400	0.570
보령	141	0.453	219	0.510	295	0.420
아산	333	1.069	388	0.903	847	1.208
서산	1,195	3.841	1,518	3.530	2,504	3.571
논산	168	0.541	245	0.570	327	0.466
계룡	96	0.308	127	0.296	198	0.282
당진	315	1.012	430	0.999	760	1.084
금산	149	0.478	267	0.620	338	0.482
연기	177	0.568	204	0.475	289	0.412
부여	202	0.648	246	0.573	351	0.500
서천	460	1.479	519	1.207	555	0.792
청양	263	0.845	305	0.710	441	0.629
홍성	114	0.368	165	0.385	289	0.411
예산	151	0.484	213	0.494	373	0.531
태안	130	0.417	226	0.525	231	0.329
충남	311	1.000	430	1.000	701	1.000

주 : 비율은 충남 평균을 1로 했을 때, 각 지역별 노동생산성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냄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도내 제조업 종사자 1인당 생산액에서 충남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임

- 충남 도내 각 지역별 제조업 노동생산성을 보면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가 충남의 평균을 상회함
  - 충남 전체 평균을 1로 볼 때, 서산시 3.571, 아산시 1.208, 당진시 1.084로 나타남
  - 반면, 계룡시의 경우 2009년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198백만원/명으로 충남 전체 평균을 1로 볼 때, 0.282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모든 권역에서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계속 증가함
- 앞에서 설명한 대부분의 지표에서와 마찬가지로, 충청남도의 제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만, 특히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큼

4. 산업단지 현황

1)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개발 현황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산업단지 중심의 단지개발이 이루어져 옴(면적 기준)

- 2011년 4/4분기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948개소의 산업단지가 개발되어 있음
  - 이 가운데 국가산업단지가 40개소, 일반산업단지 469개소, 농공단지 430개소, 도시첨단산업단지 9개소임
  - 개발 면적을 기준으로 누적량(stock)을 살펴보면, 국가산업단지가 단지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대규모로 추진되어 전체면적(분양대상면적)의 48.3%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 산업단지개발이 국가산업단지 중심의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왔음을 의미함

<표 2-14> 전국 산업단지 유형별 현황

(단위 : 개소, 천m^2, %)

구분	단지 수	지정면적	분양대상 면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미분양율
합계	948 (100.0)	1,348,221 (100.0)	750,212 (100.0)	522,049 (100.0)	509,434 (100.0)	12,616 (100.0)	2.4
국가 산업단지	40 (4.2)	789,807 (58.8)	362,626 (48.3)	297,114 (56.9)	294,918 (57.9)	2,196 (17.4)	0.7
일반 산업단지	469 (49.5)	482,615 (35.9)	332,662 (44.3)	175,981 (33.7)	167,502 (32.9)	8,480 (67.2)	4.8
도시첨단 산업단지	9 (0.9)	2,006 (0.1)	1,115 (0.1)	217 (0.0)	142 (0.0)	75 (0.6)	34.0
농공단지	430 (45.4)	68,794 (5.1)	53,809 (7.2)	48,737 (9.3)	46,872 (9.2)	1,865 (14.8)	3.8

주 : 미분양율 = 미분양면적/개발면적. 괄호 안의 수치는 구성비
자료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11년 4/4분기)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 주도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중심의 산업단지개발로 전환됨(면적 기준)

- 한편, 산업단지개발은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중심으로 전환됨
  - 연대별 개발면적을 보면, 1990년대 이후의 경우 일반산업단지가 1992~1999년 기간에 82.2%와 2000년 이후의 86.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즉, 1990년대 이후에는 일반산업단지 중심으로 산업단지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음
  - 이외 농공단지의 개발면적 비율도 증가함
    - 즉, 산업단지개발은 1990년대 이후 시군단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표 2-15> 전국 산업단지 유형별 비중(지정면적 기준)

(단위 : %)

구분	1972-1981년	1982-1991년	1992-1999년	2000년 이후	전 기간
국가산업단지	94.2	70.6	9.4	3.0	79.0
일반산업단지	5.8	18.8	82.2	86.0	17.0
농공단지	0.0	10.6	8.4	11.0	4.0

자료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2)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현황

(1) 산업단지 지정현황

2011년 4/4분기 현재 충청남도 내에 총 145개소, 110,481천㎡ 면적의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음

● 2011년 4/4분기 현재 충청남도 내에는 총 145개소의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음

- 충남 전체 110,481천㎡ 중 당진시가 35,078천㎡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산시 14,028천㎡, 아산시 13,276천㎡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2-16> 충청남도 산업단지 지정 현황

(단위 : 개소, 천m^2)

구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합계	
	단지수	면적	단지수	면적	단지수	면적	단지수	면적	단지수	면적
천안			8	8,286			4	703	12	8,989
공주			4	2,247			10	1,787	14	4,034
보령	1	6,231	3	4,438			7	1,098	11	11,767
아산			6	12,236			9	1,040	15	13,276
서산	1	912	7	11,839			4	1,277	12	14,028
논산			3	1,467			7	820	10	2,287
계룡			1	327					1	327
당진	2	18,154	5	16,927			7	997	14	36,078
금산			1	872			5	842	6	1,714
연기			6	4,770			3	353	9	5,123
부여							6	865	6	865
서천	1	2,755					5	975	6	3,730
청양							6	989	6	989
홍성			1	1,135			8	952	9	2,087
예산			4	3,760			8	1,283	12	5,043
태안					1	39	1	105	2	144
충남 계	5	28,052	49	68,304	1	39	90	14,086	145	110,481

자료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11년 4/4분기)

▌국가산업단지

충청남도 소재 5개 국가산업단지는
주로 아산만과 서해안 연접지역에 지정되어 있음

- 2011년 4/4분기 현재 충청남도 내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총 5개소 지정되어 있음
  - 총 3개소(아산, 대죽자원, 석문 단지)가 도내 북부권에 지정되어 있음(외국인 전용단지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제외됨)
  - 이외 보령소재 고정 국가산업단지, 서천소재 장항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음
- 충청남도 내의 국가산업단지들은 주로 아산만과 서해안 등 연안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정되어 있음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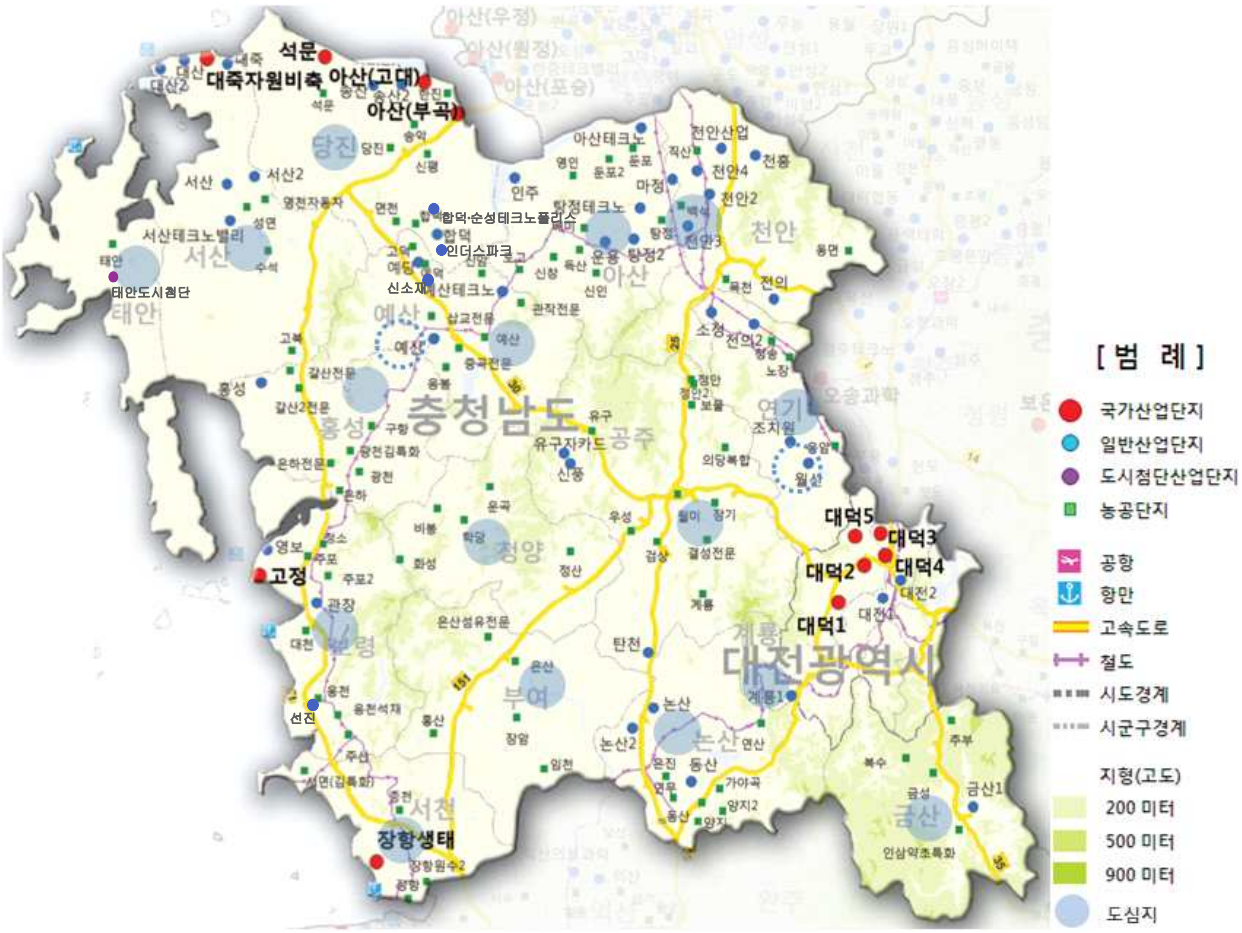
충청남도 소재 49개 일반산업단지 중 14개소가 천안과 아산에
집중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태안에 위치함

- 2011년 4/4분기 현재 충청남도 내에는 총 49개소의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음
  - 이 중 상당수가 천안 및 아산에 집중되어 있음
  - 연기와 논산 · 금산 등의 일부 내륙권 및 금강권 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북부권에 집중 지정되어 있는 상태임
- 2011년 4/4분기 현재 충청남도 내에는 총 1개소(태안)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음

▌농공단지

충청남도 소재 90개 농공단지는
각 시군별로 상대적으로 고르게 지정되어 있음

- 2011년 4/4분기 현재 충청남도 내에는 총 90개소의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있음
  - 일반산업단지와는 다르게 농공단지의 경우 도내 각 시군별로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실정임



자료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재수정

(그림 2-2) 충청남도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2) 충청남도 내 산업단지 분양현황

2011년 4/4분기 현재 전체 산업단지 분양대상 면적은 79.436㎢,
이 가운데 개발이 완료된 면적은 48.175㎢이며, 미분양율은 6.7%임

- 2011년 4/4분기 현재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분양대상 면적은 총 79,436천㎡로 이 가운데 60.6%인 48,175천㎡의 면적이 개발 완료된 상태임
- 개발 완료된 분양면적 중 분양이 완료된 면적은 44,966천㎡로 2011년 4/4분기 기준 미분양율은 6.7%임
- 미분양면적 3,208천㎡ 중 국가산업단지는 814천㎡, 일반산업단지는 2,167천㎡, 농공단지는 227천㎡로 나타남

<표 2-17> 충청남도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단위 : 개소, 천m^2, %)

구분	단지 수	지정면적	분양대상 면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미분양율
합계	145 (100.0)	110,481 (100.0)	79,436 (100.0)	48,175 (100.0)	44,966 (100.0)	3,208 (100.0)	6.7
국가 산업단지	5 (3.4)	28,052 (25.4)	19,544 (24.6)	9,402 (19.5)	8,589 (19.1)	814 (25.4)	8.7
일반 산업단지	49 (33.8)	68,304 (61.8)	48,943 (61.6)	28,810 (59.8)	26,642 (59.2)	2,167 (67.5)	7.5
도시첨단 산업단지	1 (0.7)	39 (0.0)	34 (0.0)	0 (0.0)	0 (0.0)	0 (0.0)	-
농공단지	90 (62.1)	14,086 (12.7)	10,915 (13.7)	9,963 (20.7)	9,735 (21.7)	227 (7.1)	2.3

주 : 미분양율 = 미분양면적/개발면적. 괄호 안의 수치는 구성비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 2011년 4/4분기 기준

(3) 도내 시군별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현황

▌천안시

천안시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8,989천㎡로 이 가운데 분양대상 면적은 6,220천㎡, 2011년 4/4분기 기준 미분양율은 0.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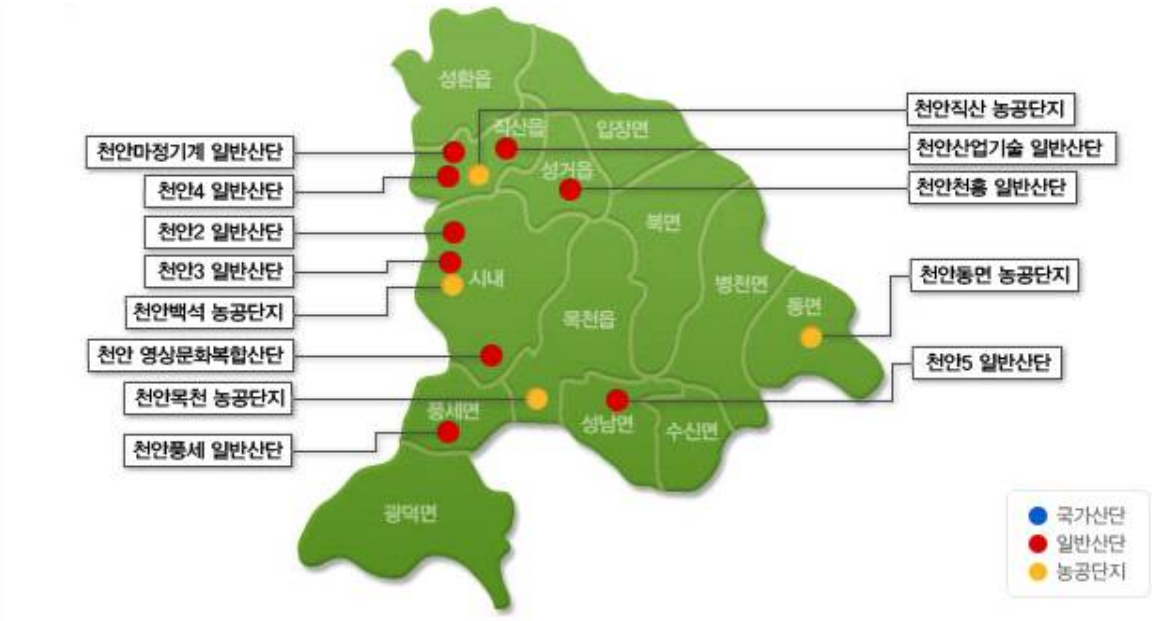
- 2011년 4/4분기 현재 천안시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8,989천㎡이며, 이중 분양대상 면적은 6,220천㎡임
  - 분양대상 면적 중 84.6%인 5,264천㎡가 개발완료 됨
- 미분양율은 0.2%이고, 개발 중인 산업단지는 2개소(천안5, 풍세 일반산업단지)임

<표 2-18a> 천안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단위 : 천m^2, %)

구분	단지명	지정면적	분양대상 면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미분양율
일반 산업단지	천흥	651	465	465	465	0	0.0
	마정	150	99	99	99	0	0.0
	천안2	823	581	581	581	0	0.0
	천안3	2,335	1,691	1,089	1,089	0	0.0
	천안산업기술	183	143	143	143	0	0.0
	천안4	1,006	664	664	664	0	0.0
	천안5	1,511	931	832	144	688	82.7
	풍세	1,627	1,057	802	334	468	58.3
농공단지	동면	69	66	66	66	0	0.0
	목천	100	64	64	64	0	0.0
	백석	362	315	315	315	0	0.0
	직산	172	144	144	144	0	0.0
계		8,989	6,220	5,264	4,108	1,156	0.2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 2011년 4/4분기 기준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

(그림 2-3a) 천안시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공주시

공주시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4,034천㎡로 이중 분양대상 면적은 2,928천㎡, 2011년 4/4분기 기준 미분양율은 18.6%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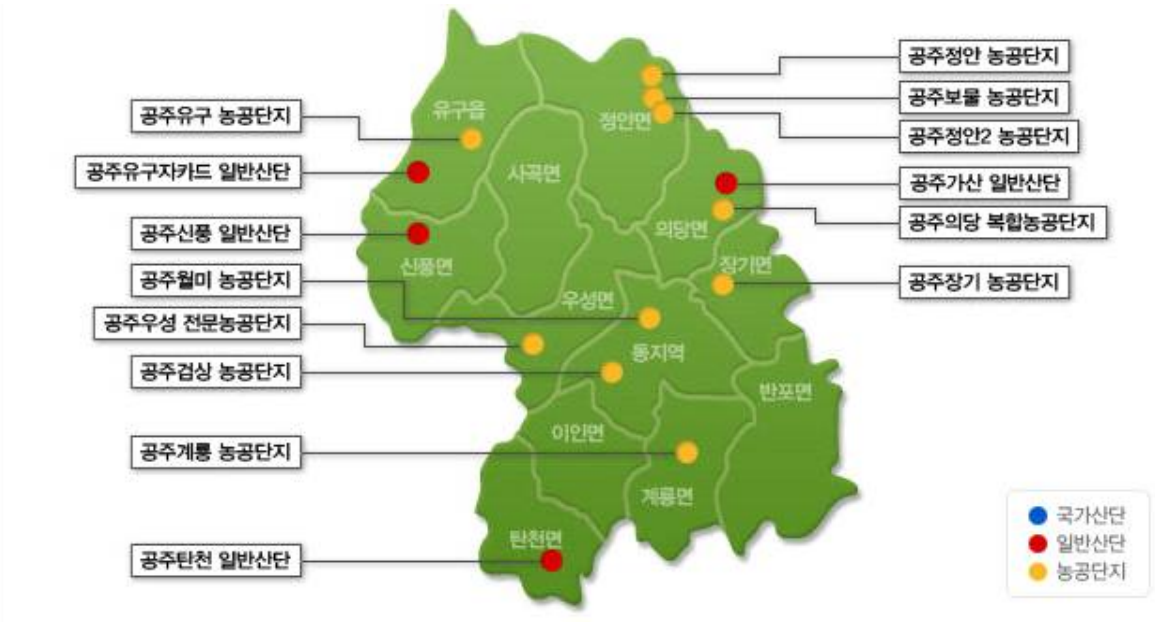
- 2011년 4/4분기 현재 공주시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4,034천㎡이며, 이중 분양대상 면적은 2,928천㎡임
  - 분양대상 면적 중 53.6%인 1,568천㎡가 개발완료 됨
- 미분양율은 18.6%이고, 개발 중인 산업단지는 4개소(탄천,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와 정안2, 월미 농공단지)임
  - 가산 일반산업단지와 의당 복합 농공단지는 실수요자가 100% 분양하여 개발하는 산업단지임

<표 2-18b> 공주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단위 : 천m^2, %)

구분	단지명	지정면적	분양대상 면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미분양율
일반 산업단지	탄천	998	692	226	68	158	70.0
	유구자카드	96	61	57	17	41	71.2
	신풍	483	296	0	0	0	-
	가산	670	461	0	0	0	-
농공단지	검상	401	342	325	325	0	0.0
	계룡	50	44	44	44	0	0.0
	유구	228	148	103	103	0	0.0
	장기	87	74	74	74	0	0.0
	정안1	152	129	129	129	0	0.0
	우성	142	121	121	121	0	0.0
	보물	135	113	113	113	0	0.0
	정안2	293	222	200	130	70	34.8
	월미	150	122	114	90	23	20.5
	의당복합	149	103	62	62	0	0.0
계		4,034	2,928	1,568	1,276	292	18.6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 2011년 4/4분기 기준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

(그림 2-3b) 공주시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보령시

보령시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11,767천㎡로 이중 분양대상 면적은 8,793천㎡, 2011년 4/4분기 기준 미분양율은 0.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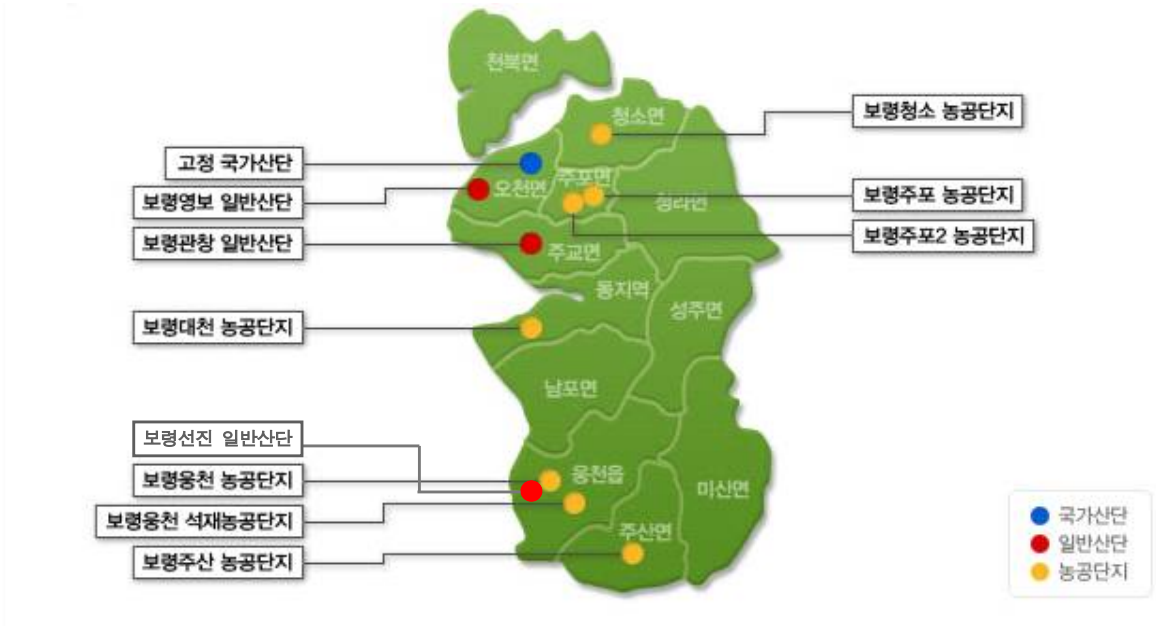
- 2011년 4/4분기 현재 보령시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11,767천㎡이며, 이중 분양대상 면적은 8,793천㎡임
  - 분양대상 면적 중 66.7%인 5,866천㎡가 개발완료 됨
- 미분양율은 0.7%이고, 개발 중인 산업단지는 고정국가산업단지, 관창 일반산업단지이며, 영보, 선진일반산업단지와 청소농공단지는 미개발 상태임
  - 관창, 영보 일반산업단지는 실수요자가 100% 분양하여 개발하는 산업단지임

<표 2-18c> 보령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단위 : 천m^2, %)

구분	단지명	지정면적	분양대상 면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미분양율
국가 산업단지	고정	6,231	4,773	3,635	3,635	0	0.0
일반 산업단지	관창	2,453	1,973	1,520	1,520	0	0.0
	영보	1,248	663	0	0	0	-
	선진	737	571	0	0	0	-
농공단지	웅천석재	150	104	104	104	0	0.0
	대천	102	88	88	88	0	0.0
	웅천	229	171	171	171	0	0.0
	주산	154	118	118	118	0	0.0
	주포	172	132	132	132	0	0.0
	주포2	143	98	98	59	39	39.8
	청소	148	102	0	0	0	-
계		11,767	8,793	5,866	5,827	39	0.7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 2011년 4/4분기 기준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 재수정

(그림 2-3c) 보령시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아산시

아산시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13,276천㎡로 이중 분양대상 면적은 9,445천㎡, 2011년 4/4분기 기준 미분양율은 1.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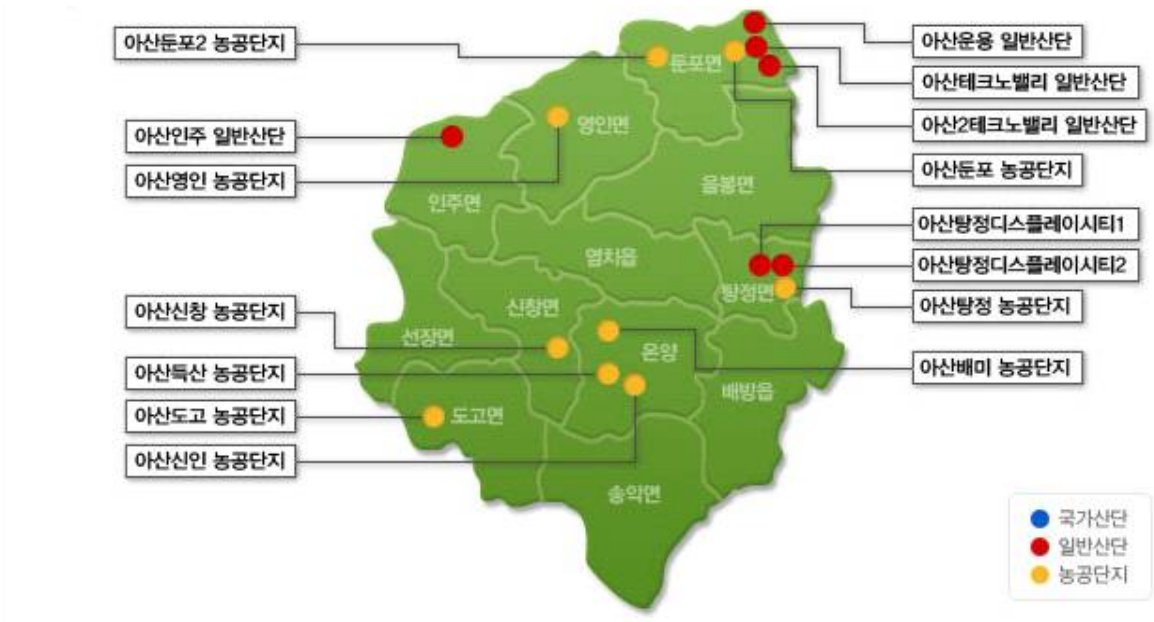
- 2011년 4/4분기 현재 아산시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13,276천㎡이며, 이중 분양대상 면적은 9,445천㎡임
  - 분양대상 면적 중 72.3%인 6,832천㎡가 개발완료 됨
- 미분양율은 1.0%이고, 개발 중인 산업단지는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이며, 탕정디스플레이시티2, 아산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는 미개발 상태임
  - 탕정디스플레이시티1, 2와 아산테크노밸리는 실수요자가 100% 분양받아 개발하는 산업단지임

<표 2-18d>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단위 : 천m^2, %)

구분	단지명	지정면적	분양대상 면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미분양율
일반 산업단지	탕정디스플레이시티1	2,451	1,874	1,874	1,874	0	0.0
	인주	3,406	2,606	2,606	2,606	0	0.0
	탕정디스플레이시티2	2,121	1,226	0	0	0	-
	아산테크노밸리	2,984	1,928	1,399	1,399	0	0.0
	운용	74	64	64	37	27	42.7
	아산2테크노밸리	1,200	857	0	0	0	-
농공단지	둔포	74	71	71	69	2	2.8
	득산	216	175	175	163	12	6.6
	배미	75	67	67	63	4	5.6
	신인	64	58	58	55	3	5.7
	신창	56	46	46	43	3	6.6
	영인	146	133	133	133	0	0.0
	탕정	93	91	91	88	3	3.1
	둔포2	119	110	109	109	0	0.0
	도고	197	139	139	122	17	12.4
계		13,276	9,445	6,832	6,761	71	1.0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 2011년 4/4분기 기준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

(그림 2-3d) 아산시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서산시

서산시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14,028천㎡로 이중 분양대상 면적은 10,139천㎡, 2011년 4/4분기 기준 미분양율은 7.4%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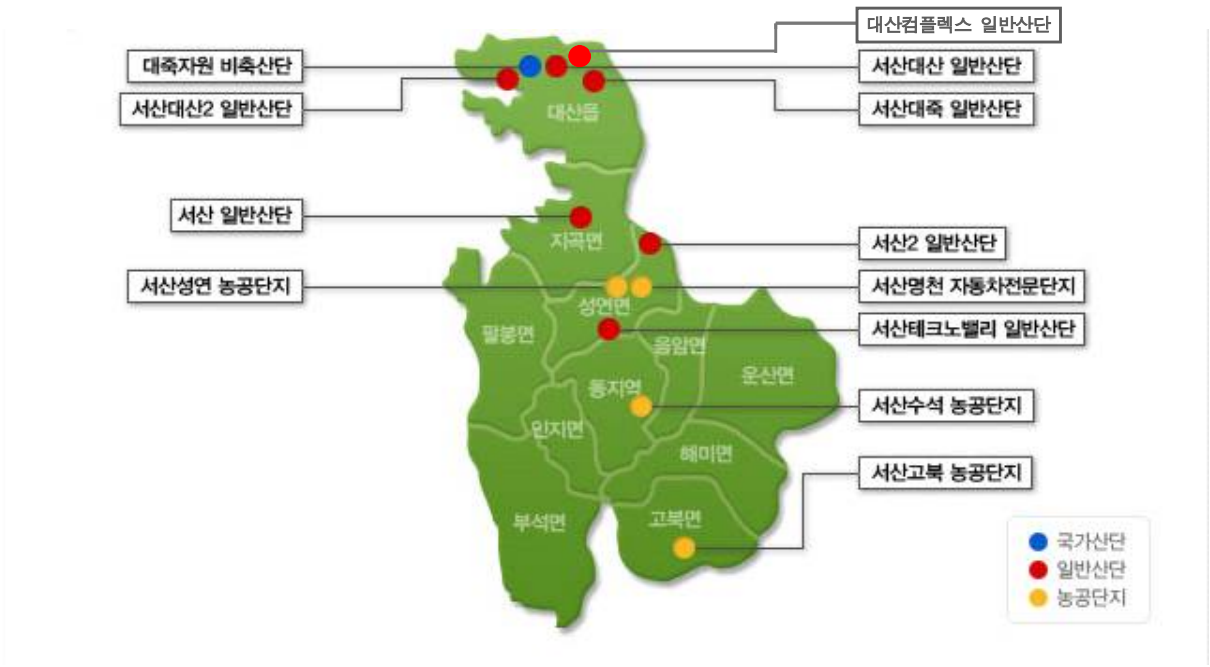
- 2011년 4/4분기 현재 서산시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14,028천㎡이며, 이중 분양대상 면적은 10,139천㎡임
  - 분양대상 면적 중 77.9%인 7,899천㎡가 개발완료됨
- 미분양율은 7.4%이고, 개발 중인 산업단지는 서산테크노밸리, 서산2 일반산업단지이며, 대산2,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는 미개발 상태임
  - 서산, 대산, 대산2,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는 실수요자가 분양받아 개발하는 산업단지임

<표 2-18e> 서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단위 : 천m^2, %)

구분	단지명	지정면적	분양대상 면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미분양율
국가 산업단지	대죽자원비축	912	449	449	449	0	0.0
일반 산업단지	서산	4,052	2,859	2,859	2,610	249	8.7
	대죽	2,101	1,592	1,592	1,592	0	0.0
	대산	1,108	920	920	920	0	0.0
	대산2	1,142	948	0	0	0	-
	서산	1,986	1,305	653	317	335	51.4
	서산2	812	612	452	450	2	0.4
	대산컴플렉스	638	480	0	0	0	-
농공단지	고북	125	94	94	94	0	0.0
	성연	777	596	596	596	0	0.0
	수석	231	178	178	178	0	0.0
	명천자동차	144	106	106	106	0	0.0
계		14,028	10,139	7,899	7,312	586	7.4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 2011년 4/4분기 기준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 재수정

(그림 2-3e) 서산시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논산시

논산시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2,287천㎡로 이중 분양대상 면적은 1,653천㎡, 2011년 4/4분기 기준 미분양율은 0.0%임

- 2011년 4/4분기 현재 논산시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2,287천㎡이며, 이중 분양대상 면적은 1,653천㎡임
  - 분양대상 면적 중 71.3%인 1,179천㎡가 개발완료됨
- 미분양율은 0.0%이고, 개발 중인 산업단지는 양지2 농공단지이며, 동산 일반산업단지는 미개발 상태임
  - 양지2 농공단지는 실수요자가 100% 분양받아 개발하는 산업단지임

<표 2-18f> 논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단위 : 천m^2, %)

구분	단지명	지정면적	분양대상 면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미분양율
일반 산업단지	논산	253	167	167	167	0	0.0
	논산2	509	390	390	390	0	0.0
	동산	705	468	0	0	0	-
농공단지	가야곡	186	144	144	144	0	0.0
	연무	124	81	81	81	0	0.0
	연산	81	59	59	59	0	0.0
	은진	70	63	63	63	0	0.0
	양지	117	88	88	88	0	0.0
	동산	105	87	87	87	0	0.0
	양지2	137	106	100	100	0	0.0
계		2,287	1,653	1,179	1,179	0	0.0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 2011년 4/4분기 기준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

(그림 2-3f) 논산시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계룡시

계룡시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327천㎡로 이중 분양대상 면적은 181천㎡, 2011년 4/4분기 기준 미분양율은 36.4%임

- 2011년 4/4분기 현재 계룡시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327천㎡이며, 이중 분양대상 면적은 181천㎡임
  - 분양대상 면적의 100%가 개발완료됨
- 미분양율은 36.4%이고, 개발 중이거나 미개발 상태의 산업단지는 없음

<표 2-18g> 계룡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단위 : 천m^2, %)

구분	단지명	지정면적	분양대상 면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미분양율
일반 산업단지	계룡	327	181	181	115	66	36.4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 2011년 4/4분기 기준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

(그림 2-3g) 계룡시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당진시

당진시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36,078천㎡로 이중 분양대상 면적은 25,894천㎡, 2011년 4/4분기 기준 미분양율은 8.2%임

- 2011년 4/4분기 현재 당진시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36,078천㎡이며, 이중 분양대상 면적은 25,894천㎡임
  - 분양대상 면적 중 44.6%인 11,551천㎡가 개발완료 됨
- 미분양율은 8.2%이고, 아산(고대지구) 국가산업단지와 송산(현대제철), 송산2 일반산업단지가 개발 중이며, 합덕순성테크노폴리스, 합덕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는 미개발 상태임
  - 송산 일반산업단지는 실수요자가 100% 분양받아 개발하는 산업단지임
  - 석문 국가산업단지의 미개발면적이 규모가 큼

<표 2-18h> 당진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단위 : 천m^2, %)

구분	단지명	지정면적	분양대상 면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미분양율
국가 산업단지	아산	6,136	4,931	4,194	4,194	0	0.0
	석문	12,018	7,555	1,124	311	814	72.4
일반 산업단지	현대제철(송산)	5,565	4,864	4,689	4,689	0	0.0
	합덕	989	616	616	486	129	21.0
	송산2	5,605	3,989	172	172	0	0
	합덕순성테크노폴리스	4,131	2,723	0	0	0	-
	합덕인더스파크	637	460	0	0	0	-
농공단지	당진	85	55	55	55	0	0.0
	면천	139	115	115	115	0	0.0
	석문	215	172	172	172	0	0.0
	신평	138	104	104	104	0	0.0
	합덕	106	73	73	73	0	0.0
	송악	171	122	122	122	0	0.0
	한진	143	115	115	115	0	0.0
계		36,078	25,894	11,551	10,608	943	8.2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 2011년 4/4분기 기준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

(그림 2-3h) 당진시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금산군

금산군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1,714천㎡로 이중 분양대상 면적은 1,304천㎡, 2011년 4/4분기 기준 미분양율은 1.1%임

- 2011년 4/4분기 현재 금산군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1,714천㎡이며, 이중 분양대상 면적은 1,304천㎡임
  - 분양대상 면적 중 87.4%인 1,140천㎡가 개발완료됨
- 미분양율은 1.1%이고, 인삼약초특화, 구례 농공단지는 미개발 상태임

<표 2-18i> 금산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단위 : 천m², %)

구분	단지명	지정면적	분양대상 면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미분양율
일반 산업단지	금산	872	710	710	710	0	0.0
농공단지	금성	222	159	159	159	0	0.0
	복수	117	94	94	94	0	0.0
	추부	244	177	177	165	12	6.8
	인삼약초	115	70	0	0	0	-
	구례	144	94	0	0	0	-
계		1,714	1,304	1,140	1,128	12	1.1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 2011년 4/4분기 기준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

(그림 2-3i) 금산군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연기군

연기군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5,123천㎡로 이중 분양대상 면적은 3,698천㎡, 2011년 4/4분기 기준 미분양율은 0.1%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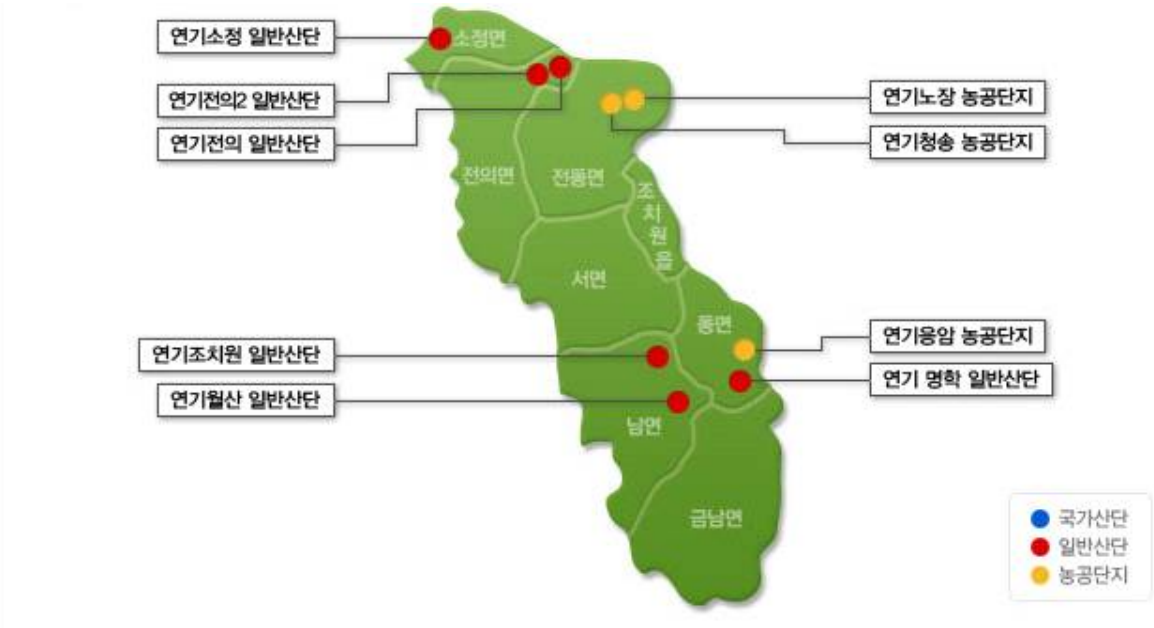
- 2011년 4/4분기 현재 연기군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5,123천㎡이며, 이중 분양대상 면적은 3,698천㎡임
  - 분양대상 면적 중 88.8%인 3,284천㎡가 개발완료됨
- 미분양율은 0.1%이고, 개발 중인 산업단지는 명학 일반산업단지이며, 미개발 산업단지는 없음
- 연기군의 경우, 세종시로 편입이 예정됨에 따라 일부 산업단지의 경우 업종변경 등 재정비를 실시 중임

<표 2-18j> 연기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단위 : 천m^2, %)

구분	단지명	지정면적	분양대상 면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미분양율
일반 산업단지	소정	271	192	192	192	0	0.0
	월산	1,380	965	965	965	0	0.0
	전의	482	346	346	346	0	0.0
	조치원	941	737	737	737	0	0.0
	전의2	857	601	601	597	4	0.6
	명학	839	561	147	147	0	0.0
농공단지	노장	162	135	135	135	0	0.0
	응암	109	95	95	95	0	0.0
	청송	82	66	66	66	0	0.0
계		5,123	3,698	3,284	3,280	4	0.1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 2011년 4/4분기 기준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

(그림 2-3j) 연기군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부여군

부여군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865천㎡로 이중 분양대상 면적은 653천㎡, 2011년 4/4분기 기준 미분양율은 0.0%임

- 2011년 4/4분기 현재 부여군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865천㎡이며, 이중 분양대상 면적은 653천㎡임
  - 분양대상 면적 중 73.0%인 477천㎡가 개발완료됨
- 미분양율은 0.0%이고, 은산섬유, 은산2 농공단지는 미개발 상태임
  - 은산섬유 농공단지는 실수요자가 100% 분양받아 개발하는 산업단지임

<표 2-18k> 부여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단위 : 천m^2, %)

구분	단지명	지정면적	분양대상 면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미분양율
일반 산업단지	은산	123	92	92	92	0	0.0
	임천	171	146	146	146	0	0.0
	장암	158	133	133	133	0	0.0
	홍산	132	106	106	106	0	0.0
	은산섬유	53	37	0	0	0	-
	은산2	228	139	0	0	0	-
계		865	653	477	477	0	0.0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 2011년 4/4분기 기준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

(그림 2-3k) 부여군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서천군

서천군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3,730천㎡로 이중 분양대상 면적은 2,561천㎡, 2011년 4/4분기 기준 미분양율은 0.0%임

- 2011년 4/4분기 현재 서천군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3,730천㎡이며, 이중 분양대상 면적은 2,561천㎡임
  - 분양대상 면적 중 21.4%인 547천㎡가 개발완료됨
- 미분양율은 0.0%이고,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서면, 종천2 농공단지는 미개발 상태임
  - 규모가 큰 국가산업단지가 미조성됨에 따라 미개발면적 또한 규모가 큼

<표 2-181> 서천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단위 : 천m^2, %)

구분	단지명	지정면적	분양대상 면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미분양율
국가 산업단지	장항생태	2,755	1,836	0	0	0	-
농공단지	장항원수	299	235	235	235	0	0.0
	종천	251	208	208	208	0	0.0
	장항원수2	151	104	104	104	0	0.0
	서면	77	55	0	0	0	-
	종천2	197	123	0	0	0	-
계		3,730	2,561	547	547	0	0.0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 2011년 4/4분기 기준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

(그림 2-31) 서천군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청양군

청양군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989천㎡로 이중 분양대상 면적은 724천㎡, 2011년 4/4분기 기준 미분양율은 2.7%임

- 2011년 4/4분기 현재 청양군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989천㎡이며, 이중 분양대상 면적은 724천㎡임
  - 분양대상 면적 중 87.7%인 635천㎡가 개발완료됨
- 미분양율은 2.7%이고, 운곡2 농공단지는 미개발 상태임

<표 2-18m> 청양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단위 : 천m², %)

구분	단지명	지정면적	분양대상 면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미분양율
농공단지	비봉	156	114	114	111	3	2.8
	운곡	149	97	97	97	0	0.0
	정산	264	221	221	220	1	0.5
	화성	144	112	112	99	13	11.6
	학당	130	91	91	91	0	0.0
	운곡2	146	89	0	0	0	-
계		989	724	635	618	17	2.7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 2011년 4/4분기 기준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

(그림 2-3m) 청양군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홍성군

홍성군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2,087천㎡로 이중 분양대상 면적은 1,507천㎡, 2011년 4/4분기 기준 미분양율은 3.5%임

- 2011년 4/4분기 현재 홍성군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2,087천㎡이며, 이중 분양대상 면적은 1,507천㎡임
  - 분양대상 면적 중 41.7%인 629천㎡가 개발완료됨
- 미분양율은 3.5%이고, 홍성 일반산업단지와 갈산2 농공단지는 미개발 상태임
  - 홍성 일반산업단지는 실수요자가 분양받아 개발하는 산업단지임

<표 2-18n> 홍성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단위 : 천m^2, %)

구분	단지명	지정면적	분양대상 면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미분양율
일반 산업단지	홍성	1,135	775	0	0	0	-
농공단지	광천	145	105	105	105	0	0.0
	구항	154	116	116	116	0	0.0
	은하	110	91	91	91	0	0.0
	은하전문	95	72	72	72	0	0.0
	결성전문	141	108	108	108	0	0.0
	갈산전문	122	95	91	91	0	0.0
	광천김특화	56	47	46	24	22	47.5
	갈산전문2	129	98	0	0	0	-
계		2,087	1,507	629	607	22	3.5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 2011년 4/4분기 기준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

(그림 2-3n) 홍성군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예산군

예산군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5,043천㎡로 이중 분양대상 면적은 3,622천㎡, 2011년 4/4분기 기준 미분양율은 0.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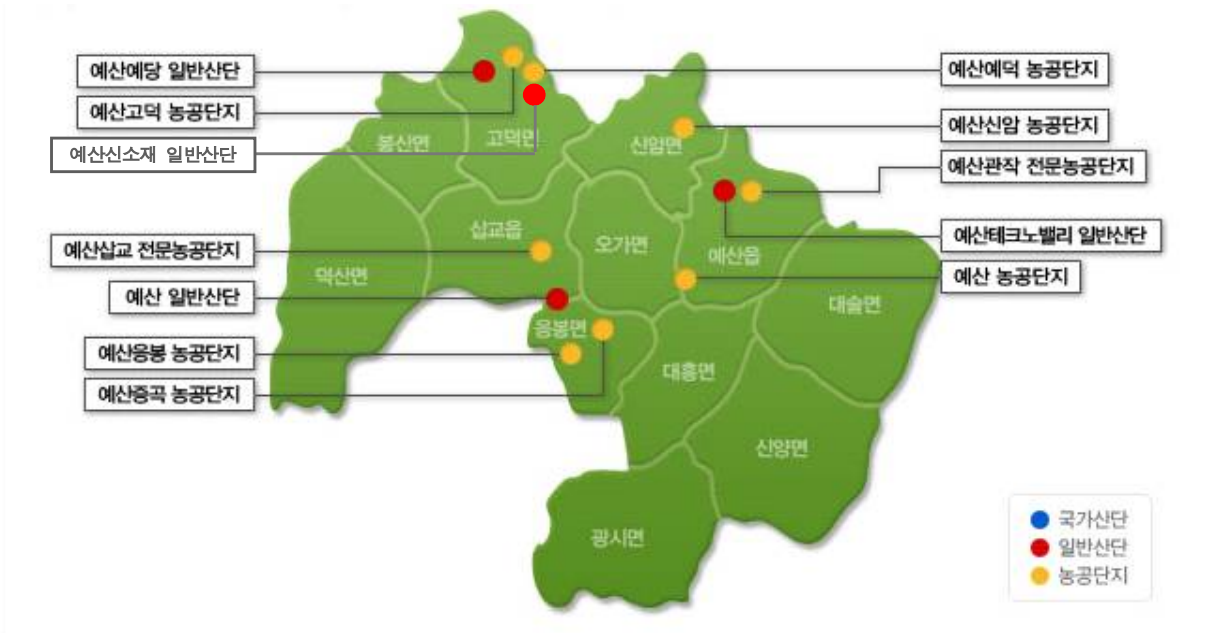
- 2011년 4/4분기 현재 예산군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5,043천㎡이며, 이중 분양대상 면적은 3,622천㎡임
  - 분양대상 면적 중 28.8%인 1,043천㎡가 개발완료 됨
- 미분양율은 0.0%이고, 예산, 예산테크노밸리, 예당,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는 미개발 상태임

<표 2-18o>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단위 : 천m², %)

구분	단지명	지정면적	분양대상 면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미분양율
일반 산업단지	예산	1,504	1,080	0	0	0	-
	예산테크노밸리	779	504	0	0	0	-
	예당	996	668	0	0	0	-
	예산신소재	481	327	0	0	0	-
농공단지	고덕	151	132	132	132	0	0.0
	신암	153	125	125	125	0	0.0
	예덕	205	151	151	151	0	0.0
	예산	189	154	154	154	0	0.0
	응봉	150	132	132	132	0	0.0
	관작전문	144	119	119	119	0	0.0
	삽교전문	147	120	120	120	0	0.0
	증곡전문	144	110	110	110	0	0.0
계		5,043	3,622	1,043	1,043	0	0.0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 2011년 4/4분기 기준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

(그림 2-3o) 예산군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태안군

태안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144천㎡로 이중 분양대상 면적은 114천㎡, 2011년 4/4분기 기준 미분양율은 0.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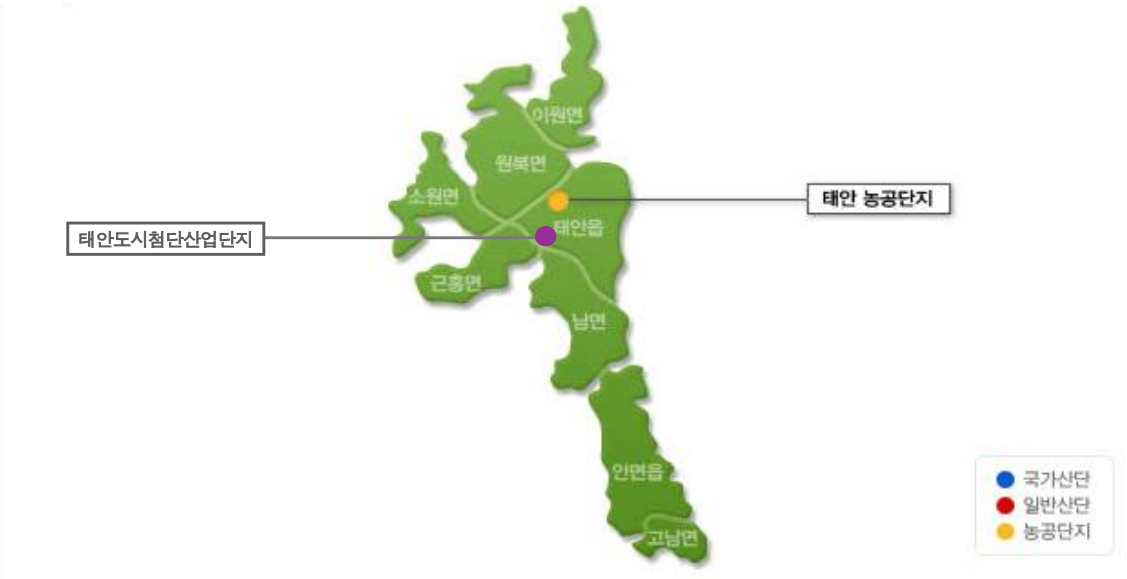
- 2011년 4/4분기 현재 태안군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144천㎡이며, 이중 분양대상 면적은 114천㎡임
  - 분양대상 면적 중 70.2%인 80천㎡가 개발완료됨
- 미분양율은 0.0%이고, 태안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미개발 상태임

<표 2-18p> 태안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단위 : 천m^2, %)

구분	단지명	지정면적	분양대상 면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미분양율
도시첨단 산업단지	태안	39	34	0	0	0	-
농공단지	태안	105	80	80	80	0	0.0
계		144	114	80	80	0	0.0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 2011년 4/4분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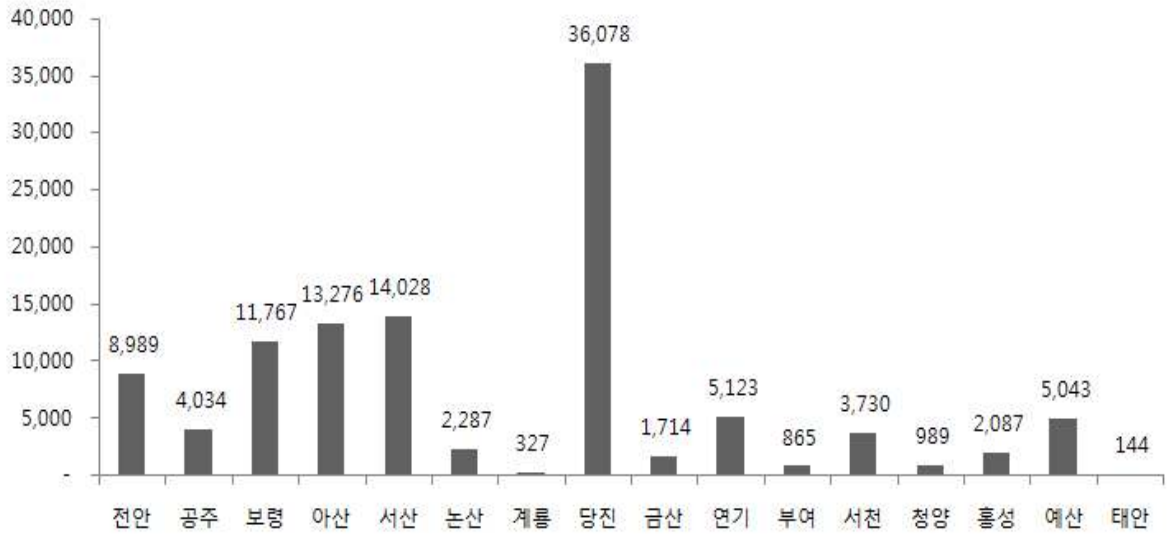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

(그림 2-3p) 태안군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4) 충청남도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면적 종합

2011년 4/4분기 기준 충남 전체 산업단지 조성률은 60.6%,
개발완료된 분양면적에 대한 미분양률은 6.7%임

- 충청남도 내 전체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110,481천㎡이며, 이 가운데 분양대상 면적은 79,436천㎡, 개발면적은 48,175천㎡임
- 개발이 완료된 분양면적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 산업단지에서 소규모의 미분양이 있으나 대부분의 시군에서 분양완료를 나타냄
- 2011년 4/4분기 기준 충남 전체 산업단지 조성률은 60.6%이며, 국가산업단지와 같은 대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중이거나 미개발인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군에서 70% 이상의 조성률을 보임
- 개발이 완료된 분양면적에 대한 미분양 면적은, 천안, 당진, 서산 순으로 많게 나타남



(그림 2-4) 충남 시군별 산업단지 지정면적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표 2-19> 충청남도 시군별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현황 종합

(단위 : 천m^2, %)

지역구분	지정면적	분양대상 면적	개발면적	조성률	분양 면적	미분양 면적	미분양율
충남	110,481	79,436	48,175	60.6	44,966	3,208	6.7
천안	8,989	6,220	5,264	84.6	4,108	1,156	22.0
공주	4,034	2,928	1,568	53.6	1,276	292	18.6
보령	11,767	8,793	5,866	66.7	5,827	39	0.7
아산	13,276	9,445	6,832	72.3	6,761	71	1.0
서산	14,028	10,139	7,899	77.9	7,312	586	7.4
논산	2,287	1,653	1,179	71.3	1,179	-	0.0
계룡	327	181	181	100.0	115	66	36.5
금산	1,714	1,304	1,140	87.4	1,128	12	1.1
연기	5,123	3,698	3,284	88.8	3,280	4	0.1
부여	865	653	477	73.0	477	-	0.0
서천	3,730	2,561	547	21.4	547	-	0.0
청양	989	724	635	87.7	618	17	2.7
홍성	2,087	1,507	629	41.7	607	22	3.5
예산	5,043	3,622	1,043	28.8	1,043	-	0.0
태안	144	114	80	70.2	80	-	0.0
당진	36,078	25,894	11,551	44.6	10,608	943	8.2

주 : 조성률 = 개발면적/분양대상면적. 미분양율 = 미분양면적/개발면적
자료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11년 4/4분기)

- 산업단지 유형별 조성 및 분양률을 지역별로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2011년 4/4분기 기준)
-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서천군은 미개발 상태이며, 당진시는 조성률이 42.6%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홍성군과 예산군은 미개발 상태이며, 공주시는 조성률이 18.7%로 낮게 나타나고 미분양률은 70.3%로 높게 나타남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최근에 지정된 산업단지로 충청남도에서는 유일하게 태안에 지정되어 있으며, 미개발 상태임
- 농공단지는 모든 시군에서 조성률이 70% 이상이고 미분양율이 10% 미만임

<표 2-20> 충청남도 유형별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현황 종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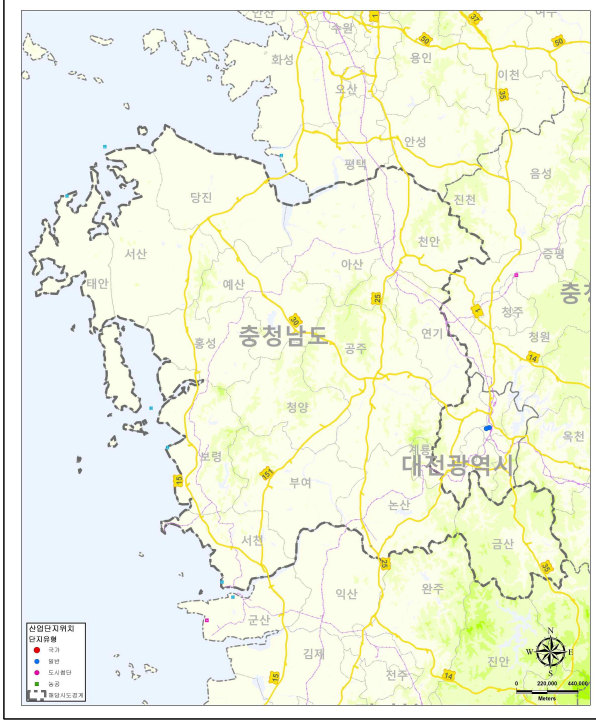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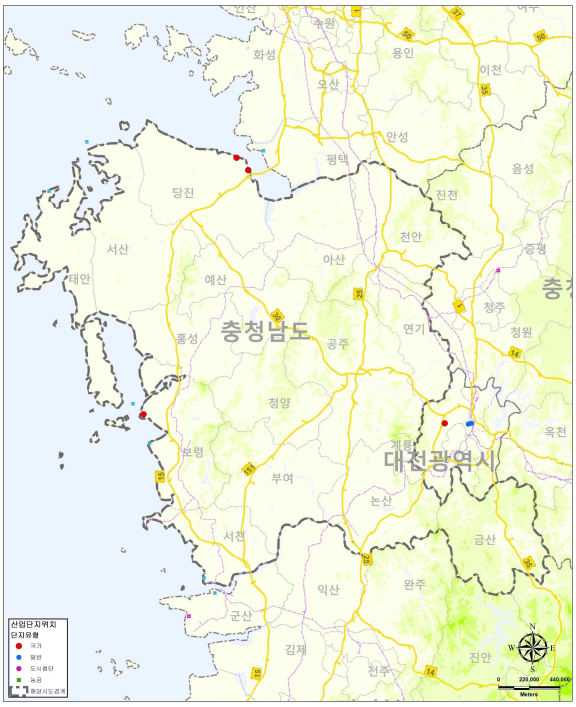
지역구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률	미분양율	조성률	미분양율	조성률	미분양율	조성률	미분양율
충남	48.1	8.7	58.9	7.5	0.0	0.0	91.3	2.3
천안			83.0	24.7			100.0	0.0
공주			18.7	70.3			90.6	7.2
보령	76.2	0.0	47.4	0.0			87.5	5.5
아산			69.5	0.5			99.9	4.9
서산	100.0	0.0	74.3	9.0			100.0	0.0
논산			54.3	0.0			99.0	0.0
계룡			100.0	36.5				
당진	42.6	15.3	43.3	2.4			100.0	0.0
금산			100.0	0.0			72.4	2.8
연기			87.8	0.1			100.0	0.0
부여							73.0	0.0
서천	0.0	0.0					75.4	0.0
청양							87.7	2.7
홍성			0.0	0.0			85.9	3.5
예산			0.0	0.0			100.0	0.0
태안					0.0	0.0	10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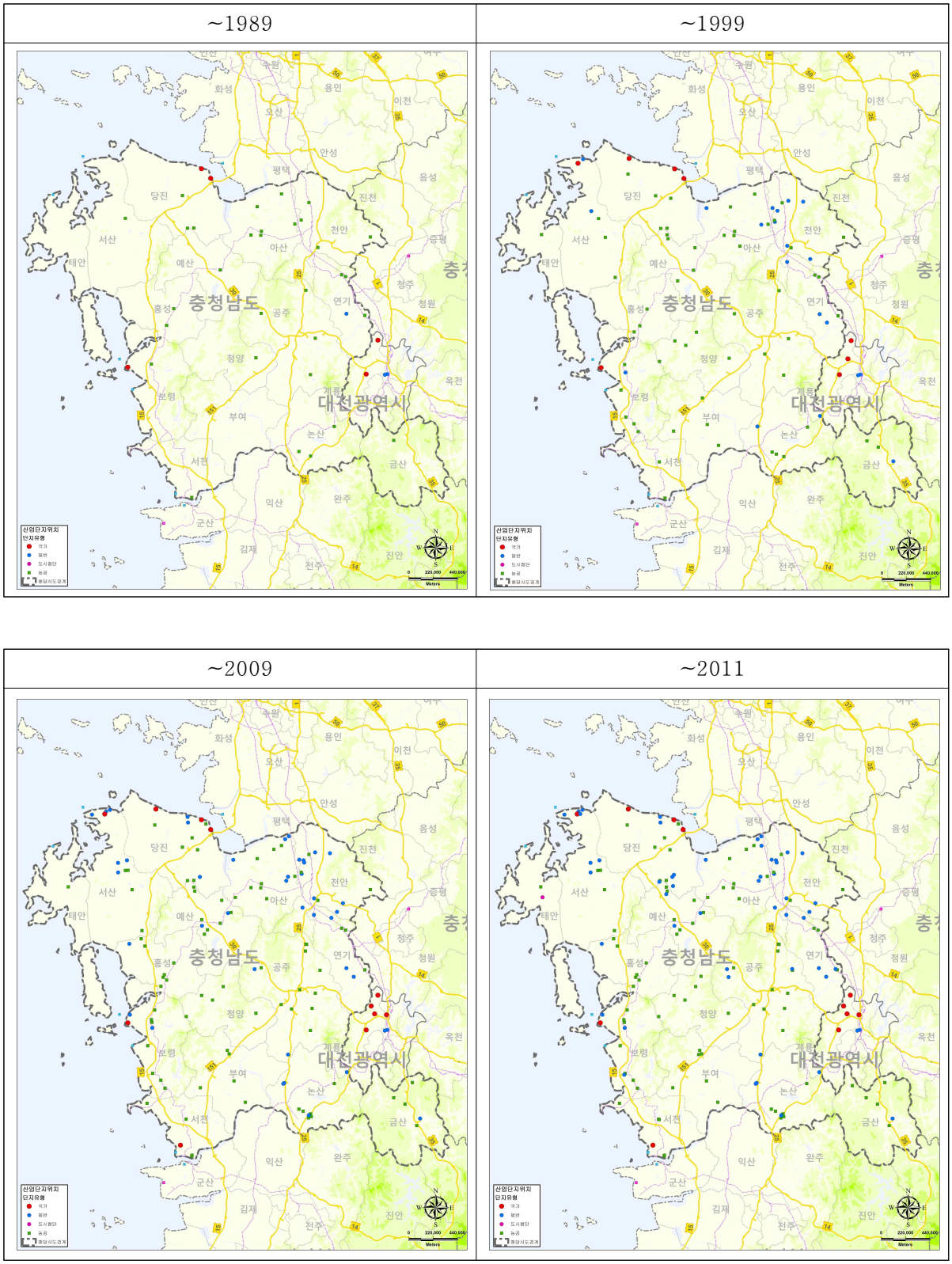
주 : 조성률 = 개발면적/분양대상면적. 미분양율 = 미분양면적/개발면적
자료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11년 4/4분기)

(5) 시기별 충청남도 산업단지 지정 동향

충청남도의 산업단지 현황을 1970~2000년대까지 시기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고속도로나 철도와 인접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음

- 1960년대에는 충청남도에 지정된 산업단지가 없었으나 1970년대에 국가산업단지가 처음으로 지정되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반산업단지가 다수 지정되었음
  - 충청남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고속도로와 철도 주위에 다수가 지정됨
- 1990년대에는 일반산업단지와 함께 농공단지가 다수 지정 되었으며, 북부권 이외의 지역에도 고르게 지정되었음
- 2000년대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인접지역에 신규 지정이 많음

~1969	~1979
	



자료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그림 2-5) 충청남도 산업단지 시기별 누적현황

Ⅲ. 산업입지정책

1. 우리나라 산업입지정책
2. 충남의 산업입지관련 정책
3. 산업입지정책의 최근 경향
4. 충남의 산업입지 정책방향 종합
5. 소결

1. 우리나라 산업입지정책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 및 산업입지 정책은 총량적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가 컸으나, 지역 간 혹은 부문 간 격차를 초래함

-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의 산업화정책은 성공적인 사례로 꼽혀 왔음
  -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산업화정책은 국민경제의 고도성장을 목적으로 한 전략산업의 육성에 중점이 두어졌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입지관련 다양한 전략이 추진되어 왔음
  - 대도시 및 신흥 공업도시를 개발거점으로 삼고 이들 지역에 입지한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산업 및 산업입지 정책은 총량적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가 컸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의 틀은 다른 한편으로 지역 간 혹은 부문 간 격차를 가져왔음
  -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수도권 제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지방의 기업활동은 일반산업단지의 개발 등 각종 지원시책을 통해 장려해 왔으나, 기대했던 성과를 충분히 거두었다고 보기 어려움

제반 여건변화에 따라 산업입지정책의 방향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최근 들어 산업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
  - 세계경제의 국제화, 개방화 추세는 지구적 차원의 입지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 그리고 저성장시대의 도래 등은 산업입지정책의 방향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 특히, 기술혁신과 정보화에 따라 전통산업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 산업구조 재편을 도모하면서 새로운 입지패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앞으로 제조업의 성격은 상당부분 바뀌어 2차 산업이라기보다는 서비스업과 혼합된 모습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산업입지의 의미는 변하게 될 것임
- 산업입지에 있어서 생산과 유통을 위한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정주여건이 중요해지면서 입지패턴의 방향이 바뀔 것임

본 장에서는 산업입지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의 충남 적용방안, 그리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봄

- 본 장에서는 특히 산업입지 공급계획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대한 충남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산업입지정책의 현황이 검토됨
  - 다음으로는 충남관련 산업입지정책을 정리함
  - 세 번째로는 중앙정부의 산업입지 수요조사 결과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과 함께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을 고려하여 충남의 대응방안을 제시함

1) 우리나라 산업입지정책 동향

- 산업입지정책은 유한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생산 및 생산관련 제반 공간을 확보하는 정책임
- 우리나라의 산업입지정책의 최근 동향을 요약하면 <표 3-1>과 같음

<표 3-1> 우리나라의 최근 산업입지정책 개요

목적	정책수단	주요 추진시책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산업의 합리적 배치 균형 있는 국토개발 지속적인 산업발전 산업입지와 환경의 조화	장기적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 공장설립의 차등화 조세 · 금융지원 토지이용규제의 차등화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미분양 산업용지 대책수립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운영 국민임대산업단지 지원 기반시설 지원기준 마련

그간 우리나라의 산업입지정책은 중앙정부 주도, 공급자 위주, 대규모 개발, 물적기반 중심의 특징을 갖고 있음

- 우리나라의 산업입지정책은 산업정책과 관련되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음
- 1960년대는 수출산업의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시기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강력한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였음
  - 이 시기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2), 수출산업공업단지조성법(1964)을 제정하여 공장입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이에 따라 계획입지 개발이 시도되었으며,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에 따라 수출산업단지가 조성되었음
-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육성을 위한 산업기지 조성시기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면서 중화학공업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가 추진됨
  - 지방공업개발법(1970)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3)에 의해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함
  - 주요 지방공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들이 상기 법률들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음
- 1980년대는 산업단지 내실화 및 농공단지 개발의 시기로 중소 규모의 공업단지를 전국에 분산 배치하는 지역균형개발전략을 추진함
  - 이 시기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300여개 농공단지가 개발되었음
  - 특히 1980년대 후반기에는 농공단지 개발과 함께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국토의 서남권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개발됨
- 1990년대는 신산업지대 개발과 구조조정의 추진시기로, 다기화되어 있던 산업입지 관련 각종 법률이 통합됨
  - 산업입지정책의 기본인 산업입지법과 공업배치법(산업집적화법)이 제정됨
  - 서해안 신산업지대와 과학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였고, 토지이용과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
  - 또한 1990년 이후에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정보화촉진기본법」, 기술기반 신생기업의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그리고 문화산업단지의 바탕인 「문화산업진흥법」 등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었음

- 아울러 산업입지정책의 기본인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공업배치법) 등도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개정되어 왔음

- 2000년대는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해 지식기반산업 관련 입지시책이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됨

  –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산업단지 개발과 소규모 산업단지의 개발이 진행 중임

-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입지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공급자 위주의 개발, 물적 기반 중심의 개발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표 3-2>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 및 법제 추이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정책 기조	· 수출위주의 경공업입지	· 수도권 억제 · 대규모산업 입지조성	· 공업단지분산배치 · 균형개발전략	· 입지유형다양화 · 입지규제 완화 · 구조조정 촉진	· 전문화된 산업지구 조성 · 지식기반경제구축지원
관련 법규	· 수출산업단지개발 조성법 · 기계공업진흥법 · 조선공업진흥법 · 전자공업진흥법	· 지방공업개발법 · 산업기지개발 촉진법 · 공업배치법	· 수도권정비계획법 · 중소기업진흥법 ·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	· 산업입지법 · 공업배치법	· 산업입지법 · 산업집적법
주요 특징	· 자립경제기반구축	· 중화학공업육성을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조성	· 지방분산 및 중소 산업단지 조성	· 첨단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복합화	· 전문화 및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

자료 :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제도 개편방안 연구, 1998

2) 산업입지 관련 법제 현황

(1) 산업입지 관련 법률 체계

우리나라의 산업입지 관련 법률 체계는 「국토기본법」 아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아래 다시 공장설립·산업단지 관련 법률을 기본으로 관련 개별법이 구체적인 기능을 담당함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요람,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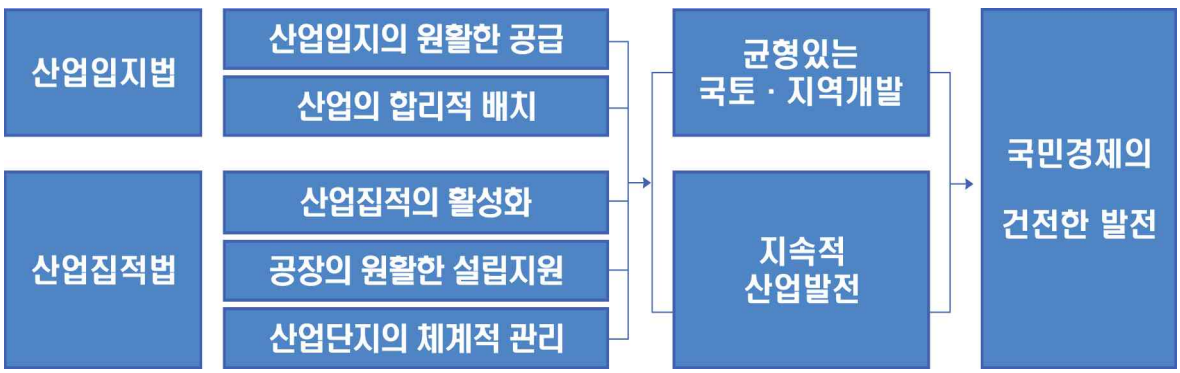
(그림 3-1) 산업입지 관련 법률 체계

- 공장설립·산업단지 관련 법률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2)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

우리나라의 산업입지제도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

- 우리나라 산업입지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두 법률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임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산업입지법 제1조)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신업집적법 제1조)



(그림 3-2) 산업입지법 및 산업집적법의 목적

- 두 법률은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관리, 개별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산업입지법은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 및 지원의 근거가 되며, 산업집적법은 산업단지 관리 및 개별입지에 대한 규정을 담은 법률임
  - 각각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의 표에 정리된 바와 같음

<표 3-3> 산업입지법 및 산업집적법의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산업입지법	·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제반정책 수단 ·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 ·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서의 산업단지 개발
산업집적법	·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 · 산업집적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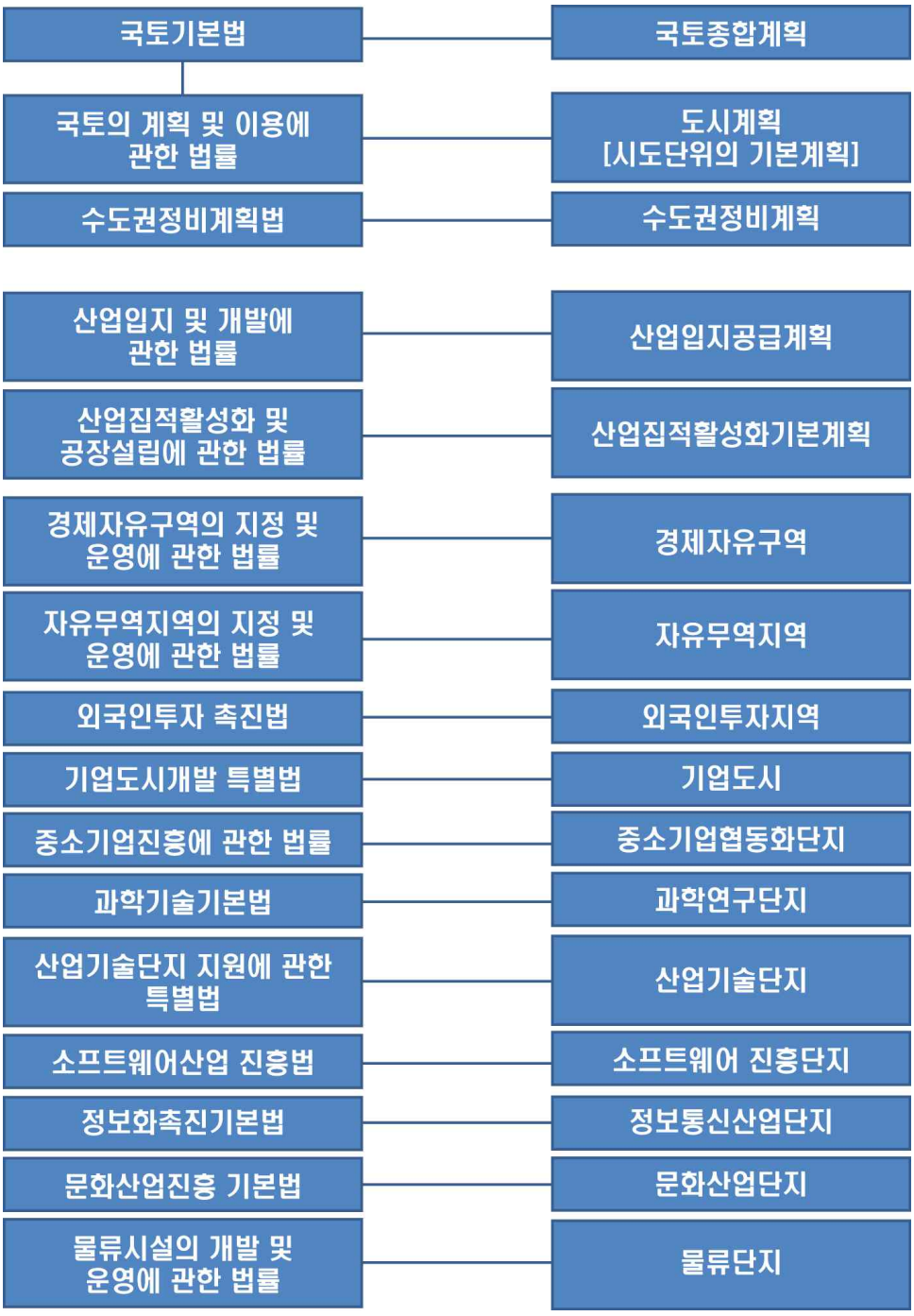
자료 : 국토연구원, 산업단지 개발편람 연구, 2005

(3) 계획입지의 종류와 개별 관련법

계획입지의 목적에 따라 개별법에 의해 계획이 수립되며,
이에 따라 단지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는 주로 제조업 중심의 단지로 특수 목적의 단지는 개별 관련법에 따라 지정되고 있음

– 각각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의 그림에 정리된 바와 같음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요람, 2010

(그림 3-3) 계획입지의 종류와 관련 개별법

3) 우리나라 산업입지 변화 특성

(1) 일반적 특성

- 우리나라의 산업입지 변화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최근 들어 공장부지면적의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음
  - 둘째, 공장용지의 이용이 고도화되고 있음(건물연면적 증가율 > 부지면적 증가율)
  - 셋째, 첨단산업 성장추세가 전통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짐(부지면적 연평균 증가율: 첨단산업 6.7%, 전통산업 2.0%)
  - 넷째, 최근 10년간은 국토의 중부권과 서남권을 중심으로 산업입지가 증가하고 있음
  - 다섯째, 개별입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
  - 여섯째,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으며, 일반산업단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2) 산업단지 개발의 성과와 문제점

- 우리나라에 있어서 산업단지는 산업입지정책의 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음
  - 산업단지가 전체 제조업(종사자 10인 이상)에서 차지하는 비중(2009년 기준)을 보면, 산업단지 내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생산액은 각각 전체 제조업의 92.8%, 60.1%, 62.3% 수준임

<표 3-4> 전체 제조업(종사자 10인 이상)에 대한 산업단지의 비중(2009년 기준)

(단위 : 개소, 천명, 십억원, %)

구 분	제조업 전체	산업단지	개별입지
사업체 수	57,996	53,803(92.8)	4,193(7.2)
종사자 수	2,452,880	1,474,410(60.1)	978,470(39.9)
생산액	1,121,973	699,268(62.3)	422,705(37.7)

주 : 제조업 자료는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산업단지 자료는 전수조사임.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 제조업 대비 비중임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 산업단지개발과 관련하여 그 성과와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① 산업단지개발의 성과

- 산업집적 기반의 구축
- 토지의 계획적 이용 유도

② 문제점

- 공급자 위주의 산업입지 공급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입지수요 대응 미흡
- 입지의 고비용 구조와 지원 미흡
- 산업입지 공급제도의 비효과적 다양성

2. 충남의 산업입지관련 정책

- 상위법과 관련 정책에 있어서 충남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함
- 산업입지 관련법에 의해 수립된 개발지침, 공급계획 등에서는 시도별 또는 권역별로 산업입지의 개발방향, 규모 등을 제시하고 있음

1) 주요 법제 중 충남에 관한 내용

산업입지법의 산업입지 개발지침 제4조
→ 서해안 임해산업단지, 수도권 이전기업 수용 산업단지 개발

- 산업입지법 산업입지 개발지침 제4조에서 정한 충남의 산업입지 개발방향은 다음과 같음

<표 3-5> 산업입지법에서의 충남 산업입지 개발방향

구분	산업입지 개발방향
충남·북 및 대전	서해안지역에 대규모 임해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의 거점을 확보하고, 내륙지역에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산업을 수용하기 위한 적정규모의 산업단지를 개발함

자료 : 산업입지법 산업입지 개발지침

제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산업입지법)
→ 2011년까지 충남 개발규모는 15㎢, 개발예정지는 석문

- 산업입지법 제5조의 2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2002-2011)을 수립함
-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 중 충남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충청남도 산업입지 공급전망
    - 충남지역의 대학유치 계획 및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망 확충, 항만개발 등 산업입지여건 개선으로 입지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석유화학과 정밀기기 전기전자 등의 신규수요 6.6㎢를 비롯한 총 신규수요 11.6~12.0㎢ 및 미분양 1.2㎢ 등을 감안
    - 2011년까지 13.9~14.4㎢를 공급하며, 총 부지면적은 65.3~65.8㎢가 될 것으로 전망

<표 3-6>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상 공장부지 전망

(단위 : km^2)

구분	현황(2001)	순수요증가('02-'11)	추가수요	총공급			공장부지(2011)
				계	계획	개별	
전국	512.0	91.0~102.3	15.3~17.7	106.3~120.0	75.7~85.6	30.6~34.4	618.3~632.0
충남	51.4	11.6~12.0	2.3~2.4	13.9~14.4	10.4~10.8	3.5~3.6	65.3~65.8

자료 : 건설교통부,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2002-2011), 2003

-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상의 충청남도 산업입지 공급계획

• 2011년까지 충남 산업단지 개발규모는 15.0㎢이며, 주요 개발예정지는 석문지구임

<표 3-7>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상 산업단지 공급계획

(단위 : km^2)

구 분	2002~2011		공급예정 산업단지
	산업단지	공장부지	
전국	118.9	85.6	기지정 : 28개, 계획중 : 21개 등
충남	15.0	10.8	인주, 석문, 장항,(아산탕정, 서산 대산 등)

자료 : 건설교통부,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2002-2011), 2003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2009~2013)
충남의 전략산업 : 전자정보기기, 자동차부품, 첨단문화, 농축산바이오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산업의 지역별 특화와 연계 강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

<표 3-8>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상 발전전략

목표	발전전략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등 산업과 기초과학이 융합된 글로벌 거점조성	• 기초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지역적 강점을 활용하여 세계 평판디스플레이 및 차세대 소자 제조장비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 • 친환경·안정성을 고려한 시스템단위 모듈부품 개발로 지역주도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육성

자료 :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2009-2013)

임대산업단지 제도
→ 충남은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단지만이 조성 중임

- 정부는 투자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입지비용과 수도권 내 산업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전용 산업단지 제도를 도입(2006. 4. 6)
  - 기존의 임대산업단지제도는 국내기업의 임대수요 충족 곤란 및 외투기업과의 역차별 발생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동 제도의 도입이 결정됨
- 따라서 임대산업단지제도는 기존의 국민임대산업단지,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단지, 자유무역지역 내 임대단지 외에 임대전용 산업단지(New Biz Park)의 형태로 운용될 것임
  - 그러나 현재 충남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단지만이 조성 중임

<표 3-9> 임대산업단지 제도

구분	대상지역	세부내용
국민임대산업단지	없음	임대조건: 5년 임대 후 분양조건 임대료: 조성원가 X 정기예금이자율 수준(3.5% 적용 중)
자유무역지역 내 임대단지	없음	임대조건: 50년 장기임대 임대료: 조성원가의 1% 수준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단지	천안, 아산	임대조건: 50년 장기임대 임대료: 조성원가의 1% 수준 천안(5,425원/평/연), 아산(4,198원/평/원)
임대전용산업단지 (New Biz Park)	없음	임대조건: 50년간 장기임대 임대료: 연간 조성원가의 1% 충청권은 부지확보 곤란을 이유로 1차 예비지정에서 제외 현재 조성중인 지역내 산업단지의 조성에 따라 차기 예비 지정을 통해 공급할 계획

자료 :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2006

2) 충청남도 관련정책

충청남도 산업입지정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도차원의 기업유치 행정지원제도를 통해 보완하고 있음

- 충남의 산업입지정책은 중앙정부의 상위법에 의존하며,「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등을 통해 기업유치 및 투자를 촉진
  -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충청남도 차원의 기업유치 행정지원제도를 통해 산업입지정책을 보완하고 있는 실정임

<표 3-10> 충남의 산업입지 지원책

구분	외국기업	국내기업
입지보조금	특정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가능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및 분양가 지원	정상 분양가의 30%범위, 2억원 한도
고용보조금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지급	신규 20명 이상 채용시 1인당 30만원 (1억원 한도)
교육훈련보조금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급	신규 50명 이상 채용시 6개월 내 1인당 50만원
이전보조금	-	본점이전 : 근무인원 10명 초과시 1인당 30만원 이내(2억원 한도)
시설보조금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가능	10억원 초과 시설투자액의 3% 내 (2억원 한도) 50억원 이상 : 공장신증설 초과금액의 2%

자료 : 충청남도 외국인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에 따라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 국토의 계획적 이용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지의 적기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촉진이 목적임

- 이를 위해, 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명시하고 있음
  - 경제통상실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투자의향서 접수 및 이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산지 현황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함
  - 또한, 산업단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충청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더불어,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결정시 이윤율을 명시하고 있음
  -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9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제26조 제9항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이하로 함
  -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의 경우는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100분의 12이하로 함

3. 산업입지정책의 최근 경향

(1) 산업입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도출

신개념의 생산공간은 혁신적 환경, 고기술인력, 전문기업 집적, 관련기업 간 연계 등이 중시됨

- 기존 산업단지정책은 산업용지, 도로, 항만, 수자원, 정력 등 물리적 입지여건 공급에 치중하고, 사회, 경제, 문화적인 입지여건은 간과해온 경향이 있음
  - 제조업체의 생산, 판매 및 기술개발 등의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시설, 정보 및 서비스를 포함한 생산환경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였음
  - 또한, 지금까지 산업입지의 공급은 규모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치중해 왔으며, 대부분 토지이용상의 상충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가지와 격리되어 개발되었음

- 이에 비해 새로운 생산공간은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 이전의 생산공간에 비해 혁신적 환경, 고기술인력, 전문기업의 집적, 관련기업간의 연계 등을 중시하는 산업공간임

<표 3-11> 새로운 산업공간의 특성

구분	전통적 산업공간	새로운 산업공간	새로운 산업공간의 특성
자본	대규모 자본 투입	기술적 우위 및 기술개발력	혁신적 환경 중시
노동	저렴한 노동력	높은 수준의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인력	높은 수준의 기술인력 중시
경제	규모의 경제	신속한 제품개발 능력	전문기업의 집적
거래비용	거래비용의 내부화	기업간 네트워크의 원활화	관련기업간 네트워크의 활발

자료 : 소진광(1998)

- 앞으로의 산업입지 공급은 단순 노동력의 확보나 생산 및 판매활동에 필요한 물리적 하부구조 보다는 정보 및 서비스 접근의 용이성과 환경의 쾌적성 확보에 치중할 필요가 있음
  - 작업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넓은 작업공간, 편리하고 쾌적한 작업 및 주변환경이 필요하며, 주거환경으로는 단순한 주거수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단위의 질 높은 사회적, 문화적 도시환경이 포함되어야 함
  - 특히 첨단산업의 발전과 함께 과학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대학의 육성과 이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중요한 입지인자로 작용할 것이므로 두뇌기능과 생산기능간의 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새로운 유형의 산업입지
  - 서로 배척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동일한 단지에 유치하여 집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의도된 공간으로 주거기능, 생산기능, 연구기능, 정보기능, 업무기능, 상업기능 등이 결합한 동종업종과 이종업종의 집단화로 집적의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복합적인 산업입지
    - 복합적인 산업입지는 첨단산업, 지식산업, 고차적 서비스산업 등 성장률이 높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정보교류, 인적교류에 의존도가 높은 미래지향적

성장산업과 지원기능이 집적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생산환경이 조성되어 경제활동과 도시활동이 결합될 수 있는 입지라고 할 수 있음

<표 3-12> 새로운 개념의 산업입지 특성

구분	새로운 개념의 산업입지	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	다기능의 복합적인 토지이용	주요 기능 위주의 단일용도 토지이용
개발기간	장기간의 단계적 개발	단기간의 일체적 개발
주요 기능	주거, 생산, 연구, 정보, 업무, 상업, 유통기능 등	생산기능, 생산지원 기능
개발주체	민간중심	공공 및 제3섹타 중심
역할	도시기능	생산기능

(2) 지식기반 산업입지의 합리적 공급

지식기반산업 입지공급을 위한 시행방안 :
① 도시첨단산업단지제도 ② 임대산업단지 활용 소규모 입지공급 ③ 외국인 전용단지 활성화 ④ 집적지구 지정 및 운영 ⑤ 합리적 역할분담 등

- 일반적으로 기존의 지역발전 전략은 제조업중심의 발전전략,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정책,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 개별적 단편적 추진으로 정리됨
- 이에 비해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으로는 기존 주력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지역별 차별화,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지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시도 등이 제시되고 있음
- 지식기반산업의 입지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음
  - 도시첨단산업단지 제도의 효과적 활용

- 국민임대 산업단지를 활용한 소규모 지식기반산업 입지공급 확대
- 해외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외국인 전용단지 등의 활성화
-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의 지정 및 운영
- 관련 주체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 등

(3) 중소기업을 위한 소규모 산업단지 및 임대공장 공급확대

저렴한 가격의 임대 산업단지와 임대공장을 공급함으로써 산업입지 공급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제조업의 소프트화에 대응

- 부동산 시장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앞으로 토지시장 질서가 확립되고 조세행정의 관리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자본이득을 기대한 부동산 투자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기술 및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은 생산활동을 위하여 현재와 같이 소유형태의 부지를 확보하기 보다는 자기부담이 낮고 수시로 유출·입이 자유로운 임대형 입지를 선호할 것으로 전망됨
- 나아가 단순한 형태의 부지임대 수요보다는 입지 후 즉시 생산이 가능한 임대형 공장 건물 수요가 증대할 것임
  - 특히 제조업의 소프트화에 따라 사무활동과 생산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형 입지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저렴한 가격의 임대산업단지와 임대공장을 공급함으로써 산업입지 공급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제조업의 소프트화에 대응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산업입지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도시의 경우 저렴한 가격의 임대공장을 공급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임

(4) 지방의 자율적인 산업단지 육성과 책임경영 강화

산업입지개발은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계획과 추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중앙정부의 강력한 주도에 의한 공업개발 및 재배치정책은 지나친 정부의 간섭을 야기하며, 이에 따른 사회비용의 증가와 민간부문의 투자위축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지방의 산업입지개발은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계획과 추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과잉경쟁에 따라 총량적으로 공급과잉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바, 수요의 정확한 추정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지방의 자율적인 산업단지 육성과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선행되어야 함
  - 첫째, 지원 및 기준마련 중심의 중앙정부 역할정립
    - 산업입지정책에 있어 실제적인 개발관련 업무는 지방에 이양하되 중앙정부는 지원 및 환경 그리고 용도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리기준 등을 설정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적절한 역할분담을 도모토록 함
    - 이와 함께 행·재정뿐만 아니라 금융부문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토록 함
  -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경영 강화
    - 산업입지의 개발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며 투자자본회수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경쟁적인 산업입지개발은 공급과잉으로 이어져 미분양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국가적 자원의 낭비 우려와 함께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재정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 산업입지 개발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중장기적인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과 아울러 명확한 수요추정을 바탕으로 산업입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책임경영을 강화토록 함

(5) 산업입지 개발의 지원확대

여건 변화에 맞춘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필요

- 앞으로도 산업입지의 역할은 중요함을 감안할 때 여건의 변화에 맞춘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첫째, 재원확보방안의 확대 및 다양화

  - 국가가 일반산업단지를 지원할 때 지방정부가 일정비율을 부담만 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방식을 도입함
  -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산업입지 개발을 위해 외자도입을 도모할 경우 지방정부의 책임아래 적극 추진하도록 허용함
  - 따라서 재원확보 방안의 개발 및 확대를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과 아울러 매칭펀드, 고용창출 장려금 제도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검토 후 추진함

  – 둘째, 산업입지 지원의 체계화

  - 향후의 산업수요에 대응하여 산업입지 개발방식 및 개발규모가 다양화될 경우 지원대상 입지의 선정에 있어 많은 혼란과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산업단지 지원제도를 체계화하고,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산업입지 지원의 기준은 산업입지의 규모, 입지지역의 특성, 국가정책과의 부합성 등의 측면에서 마련토록 함

  – 셋째, 낙후지역 산업입지 개발의 합리적 지원

  - 산업입지 개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사업임
  - 특히 낙후지역의 경우 기본적으로 입지여건이 나빠 기업의 선호도가 낮으므로 낙후지역의 경우 균형개발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낙후지역의 산업입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낙후지역의 선정기준과 지원방법,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산업입지제도에 반영토록 함

(6)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개발

수요가 있는 지역에 산업단지를 공급하되
환경친화적 산업입지개발이 되어야 함

-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지역의 고용과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실시하고 있음
  - 이러한 경쟁적인 산업단지 개발은 과도한 개발로 미분양사태의 초래와 환경문제의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음
  - 앞으로 소득수준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산업단지의 개발은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이 매우 어렵게 될 것임
- 따라서 앞으로 수요가 있는 지역에 산업단지를 공급하되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로 개발되어야 함
  - 특히 산업정책, 입지정책, 환경정책의 합리적 연계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환경용량을 감안한 산업입지 개발이 추진되어야 함
  - 아울러 생태산업단지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개발모형을 마련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음

(7) 기존 산업단지의 계획적 재정비

공장집적지가 아닌 각종 지원 및 서비스 기능이 집적된
새로운 도심으로 재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 필요

- 산업단지가 지정·개발되어 생산체계를 갖추게 되면,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원 및 관련 시설 등이 입지하게 되어 새로운 중심지를 형성하게 됨
  -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존 도심의 확장으로 산업단지는 제 기능을 상실하거나 도심 내 문제지역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그리고 이들 기존 산업단지의 쇠퇴는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쳐 영향권 내의 도시지역의 쇠퇴를 동반하게 되어 사회적 문제를 발생케 함

- 그러나 기존의 산업단지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물적 · 인적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고 이미 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재개발을 통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기존 산업단지를 공장의 집적지로서가 아니라 각종 지원 및 서비스기능이 집적된 새로운 도심으로 재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산업구조 재편방안, 도시개발 방향, 도시정비방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활성화해야 할 것임

(8) 국가산업단지의 역할 재정립

지식기반산업단지의 지원 도모 위하여
초기 국가산업단지로 개발, 이후 일반산업단지로 전환

-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중화학 공업 등의 육성을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음

- 그러나 앞으로는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산업중심이 변화될 것인 바 이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도록 국가산업단지 제도가 운용될 필요가 있음

  - 즉, 도시첨단산업단지제도를 일반산업단지로 운용하되 지식기반산업의 중요성과 아울러 지방의 여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기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 제도로 운영하도록 함

  - 특히, 조성 및 개발에 지원이 이루어져 지방의 지식기반산업의 거점이 되도록 함
    -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제도의 운영의 경우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한 후 단지의 기능이 정착되면 일반산업단지로 전환하여 지방에 의한 자율적 운영을 추진함
    - 즉,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일부는 운영 후 일반산업단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9) 외국인 투자기업의 효과적 유치를 위한 입지공급 방안 추진

효과적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입지방안 마련이 지방차원에서 필요

- 글로벌 경제에서 외국인 투자유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긴요함
  -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
  - 일부 지자체는 효과가 있으나 일부의 경우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에 효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입지방안 마련이 지방차원에서도 필요함
  - 첫째, 외투기업을 위한 입지공급방안의 목표는 외국인투자의 효율적 유치추진,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효과 극대화 도모, 역차별의 효과적 방지, 규제 간소화와 환경규제운용 등
  - 둘째, 외투기업의 유치를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 입지수요특성의 적극적 수용, 종합적이되 현실적인 투자환경 마련, 진입 및 입지비용의 절감도모, 중앙의 역할정립과 지자체의 재량과 책임증대, 기존 제도 및 입지의 효과적 활용, 외투와 지역발전의 효과적 연계 등을 설정
  - 셋째, 추진전략으로는 투자자유지역의 지정, 업종별 전문화단지의 조성, 국가별 전용단지 공급, 핵심기업 연계단지 조성 및 공급 등을 추진함
    - 각 방안은 배타적이 아닌 동시적용이 가능한 상호 연계모형이며 기존의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전용공단, 수출자유지역 등은 상기 방안에 포함 또는 연계됨

<표 3-13> 외국인전용공단 개발을 통한 직접고용 효과

산업단지규모	외국인투자유치 (백만$)	고용창출 (명)	20대 고용창출 (명)	산업단지사업비 (억원)
100만평	620	7,450	1,490	4200~5700

주 : 1) 천안외국인공단을 주요 사례로 한 지표, 2) 개발비는 용지비(46.1%), 개발비(간선시설비제외, 39.2%), 간선시설비(14.7%)로 가정, 3) 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율 30% 적용

(10) 해외직접투자 증대에 따른 산업입지 부문의 대응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산업공동화 현상에 대비한 산업입지 부문의 대응책 마련 필요

- 해외직접투자는 급증해 왔으며 향후 가속화될 것임
  - 세계화 시대에 있어 불가피한 현상이나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산업공동화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도 있음
  - 산업입지 부문에 있어서도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해외투자의 증대에 대비하는 산업입지와 관련된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해외투자의 증가는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 둘째, 해외투자에 따른 입지부문의 영향을 수용하는 대체 산업 또는 기업의 창출을 도모함
    - 특히, 국내자본의 해외이동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외국인투자의 적극 유치가 필요하며 이를 입지차원에서 지원함
  - 셋째, 국내입지여건의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해외투자의 방지를 도모함
  - 넷째, 해외투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의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당 지역의 지역산업 구조조정과 아울러 산업연계의 유지 또는 활성화를 지원함
    - 산업단지 가운데 해외투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구조재편을 추진함
    - 산업단지 재정비와 아울러 업종재편 등 구조고도화를 추진함
  - 다섯째, 해외이전에 따른 이전적지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함
    - 이전적지를 가급적 산업용으로 유지하거나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하되 도시계획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함
    - 도시첨단산업단지, 국민임대산업단지 개발 등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음
  - 여섯째, 해외직접투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차원에서도 기업의 생존을 위해 추진되기도 하므로, 중소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산업단지의 개발을 추진함

- 단순한 입지공급차원이 아닌 정보제공과 아울러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도록 함

- 일곱째, 대북투자도 넓은 의미에서 또는 기업의 측면에서 해외직접투자의 한 유형이므로, 북한개방 및 북한투자를 해외직접투자와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함
  - 개성공단, 신의주 특구 등 북한경제의 개방 진행
  - 저렴한 산업입지의 공급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보완, 안행형 모형(flying geese model)의 적용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4. 충남의 산업입지 정책방향 종합

(1) 국가 전체와 충남이 갖는 공간적 특성의 유사성 활용

- 충남은 산업입지적 측면에서 국가 전체와 유사한 특성이 있음
  - 대한민국 전체의 경우 일부 지역(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은 수요과잉이고, 일부 지역(서남권 등)은 공급과잉이며, 일부 지역(강원도 및 낙후지역 등)은 절대수요가 부족하고, 일부 지역의 경우 수요는 있으나 자연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개발 및 공급이 제약되고 있음

(2) 공급과잉의 효과적 관리

- 중앙 및 충남에서의 산업입지 개발계획을 보면 수요보다 많은 규모가 공급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균형발전과 연계한 수급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임
  - 산업입지 개발을 추진하되 자치단체의 책임이 동반됨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산업입지 개발에 있어 중앙의 역할은 지원과 조정이나 지방의 역할은 시행과 책임이라는 기조를 적극 감안할 필요가 있음

(3) 지식기반산업 또는 첨단산업 입지 수요의 확보

- 공급되는 산업입지에는 향후 수요가 예상되는 지식기반산업 또는 첨단산업의 수요를 수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4) 입지수요 절대 부족 지역의 수요창출적 산업입지 공급

-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대한 수요창출적 산업입지 공급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 지원체계가 필요함
  - 이에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함

(5)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및 해외투자 기업 관리 필요

- 외국인 투자기업이 고용 및 부가가치 측면에서 주는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천안외국인전용공단 사례 참조)되고 있으며, 향후 중요도는 더욱 확대될 것임
  - 따라서 공급되는 산업입지에 외국인 투자기업과 연계하는 입지 개발전략이 필요함
- 한편, 충남지역에서 발생하는 해외투자 기업의 지속적인 충남 입지(기회비용적 측면의 입지 포함)를 위한 효과적 방안이 필요함

(6) 오래된 산업입지의 재정비 및 재개발 추진

- 충남의 경우에도 오래된 산업입지의 재정비 수요가 발생될 것인 바 이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입지시책이 필요함

(7)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과 환경오염의 효과적 억제

-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별입지에 의한 난개발과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특히, 수도권에 인접한 또는 고속도로에 연접한 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개별입지를 계획입지에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이에는 현재 새로운 제도로서 추진 중인 “준산업단지” 제도의 적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준산업단지 제도의 특성 >

- 산업입지법을 개정하여 “준산업단지”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개별입지 집적지역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계획적 재정비가 필요한 개별입지 집적지역을 “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추진함
- “준산업단지”는 “기존의 공장 집적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개발”하려는 제도를 뜻함
- “준산업단지”는 집적도, 업종별 특성, 기반시설 실태, 비용부담 의향, 자치단체 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임

(8) 소규모 산업단지 및 임대산업단지 개발의 활성화

- 향후 수요는 소규모, 임대 중심으로 발생할 것을 감안하여 충남지역에도 소규모 임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함
  - 소규모 산업단지 활성화는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전문화된 신산업지구의 조성, 대도시 주변지역 중심의 공급을 포함함
  - 이에는 국민임대산업단지 제도의 적용가능성 검토가 필요함

<국민임대산업단지 제도>

- 우리나라 제조업체 가운데 약 15%의 기업이 공장부지를 임대하여 사용 중임
- 수도권의 경우 20%가 넘으며,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1/3이상 기업이 임대기업임
- 정부는 국민임대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하여 저가의 임대용지를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임대수요에 대처함과 동시에 영세기업의 입지확보를 지원하고 있음

(9) 국가산업단지 역할 변화의 적극 대처

- 향후 국가산업단지의 역할이 변화될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함
  - 즉, 향후 산업입지 공급은 일반산업단지 중심으로 발생할 것과 국가산업단지의 역할이 변화할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적절히 설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광역과 기초로 구분토록 함

(10) 환경친화적인 개발의 추진

- 산업단지 개발에 환경친화적인 개념을 적극 도입함
  - 생태산업단지의 개념의 적용도 검토함
  - 아울러 환경에 대한 기준 및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토록 함

(11) 상생산업단지 조성정책의 안정적 정착

-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적극적 추진

- 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도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는 물론 입주기업과 인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상생산업단지 조성이 필요

- 정주여건은 주거, 생활편의, 보건·의료, 교육, 문화·체육, 교통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영역을 포함

5. 소결

여건변화와 산업입지정책의 전환

- 과거 우리나라의 산업 및 산업입지정책은 총량적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가 컸으나, 결과적으로 지역간 · 부문간 격차를 확대시킴

- 이외 여러 제반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산업입지정책 방향은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입지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공급자 중심의 산업입지 개발, 대규모 단지개발, 물적기반의 중심의 입지정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음

  -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이라는 과제에 당면함으로써, 이에 부합하는 산업입지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세계 각국의 산업입지정책 요약

  - 기본방향 : 기존 산업단지 재구조 및 재정비의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입지정책 추진

  - 공급체계 : 공영개발 중심의 산업단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

  - 개발제도 및 유형 :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 등의 입지정책을 총괄하는 제도의 통합과 기능별로 다양한 유형의 산업단지 도입

  - 기반시설 지원 : 산업입지비용 절감 위해 다양한 입지지원제도의 도입 및 낙후지역과

산업쇠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제도 도입

- 분양제도 및 분양가 :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용지 등의 공급을 확대
- 관리제도 : 개발과 관리의 일원화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한 단지관리제도의 도입

● 세계 각국의 산업입지정책 분석 통한 시사점 도출

- 산업발전을 위한 입지정책(지원제도의 다양화와 확대 등)
- 계획입지제도의 확충 · 정비와 합리적 운용
- 기존 산업집적지역의 재개발 활성화
- 강력한 환경규제의 효과적 운용
- 관련 주체의 합리적 역할설정(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 등)
- 산업입지를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발전 도모 등

지식기반경제시대의 도래와 산업입지정책

● 세계 각국은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첨단 · 과학 단지는 지역기술혁신정책의 핵심적 도구이며, 이에는 정부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해외사례로부터 도출된 지식기반산업단지에 대한 시사점
  - 소규모 · 점진적 개발
  - 공공부문 주도
  - 관리 및 기업지원기능 강조
  - 다양한 지원방안 활용

● 지식기반산업입지로 대변되는 신개념의 생산공간은 혁신적 환경, 고기술 인력, 전문기업의 집적, 관련 기업 간 연계 등이 중심이 됨

- 지식기반산업 입지공급을 위한 시행방안
  - 도시첨단산업단지 제도
  - 임대산업단지 활용 및 소규모 입지공급

- 외국인 전용단지 활성화
- 집적지구 지정 및 운영
- 합리적 역할분담 등

- 저렴한 가격의 임대산업단지 및 임대공장 공급을 통해 산업입지 공급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제조업의 소프트화에 대응
- 산업입지개발은 지역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계획과 추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여건변화에 맞춘 산업단지 지원제도 마련 필요
- 수요발생 지역에 산업단지를 공급하되, 환경친화적 산업입지개발 유도
- 공장집적지로서가 아닌, 각종 지원 및 서비스 기능이 집적된 새로운 도심으로 재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 필요
- 초기 개발시 지식기반산업단지 지원 촉진 위해 국가산업단지로 개발, 이후 일반산업단지로 전환
- 지방 차원에서 효과적 외국인투자 유치 위한 입지방안 마련이 필요
- 해외 직접투자로 인한 산업공동화 대비 대응책 마련 필요

Ⅳ. 산업입지 여건변화 전망과 과제

1. 경제적 여건변화 전망
2. 사회적 여건변화 전망
3. 산업입지 여건변화 전망
4. 소결

1. 경제적 여건변화 전망

1) 세계 경제

(1) 지역별 경제 전망

아시아의 성장은 보통의 수준을 유지

- 둔화되는 수출-특히 유럽으로의 수출-은 아시아의 성장전망을 어둡게 하지만, 중국의 수요는 아시아의 상품수출에 완충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에서 국내 수요는 여전히 강하게 나타날 것임
- 2011년 후반기 시장의 혼란은 유럽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물가상승은 많은 경제에서 보통의 수준을 보였으나 2007년에 비해 이에 대한 재정적 여력은 적음
- 우리나라는 증가된 국제적인 불확실성에 기인한 민간소비와 투자에서의 부정적인 전망을 상쇄할 건설업에서의 회복이 예상됨

유럽은 유로지역 위기에 대한 위험의 인지로 불경기를 직면

- 2011년 후반에 유로지역의 위기에 대한 위험의 인지로 인해 유럽경제의 침체가 예측되며, 강한 지역 내 교역과 재정적 연계로 인해 유럽의 전역에 걸쳐 어두운 경제전망이 예상됨
- 국내 수요의 약세가 지속됨으로 인해 지역 내에서의 물가상승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미국은 경제적 성장세를 보이나,
주택시장의 약세와 연관된 정책적 도전을 직면

- 임금의 성장이 여전히 미약하나, 보다 강한 노동시장의 결과-즉, 일자리의 증가 및 실

업의 감소-가 나타났음

-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주택시장의 불안요소와 증가하는 정부부채와 연관된 정책적 도전을 직면하고 있음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불안요소가 산재

- 불확실한 정치적 환경이 성장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으며, 유럽의 불안요소와 경제적 침체는 관광과 자본의 대외 유출을 감소시킬 것임
- 사회이전지출에서의 증가는 정부예산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유가에 점증적으로 의존하게 됨을 의미함

(2) 세계화 및 지역주의 확산

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무한경쟁의 가속화

- 정보화 시대와 기식기반경제시대의 도래와 함께 동서 냉전시대가 종식되면서 세계 각국은 경제력 증진에 힘을 쏟고 있음
  - 대내적으로는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반 여건을 정비하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시장 확보와 투자유치를 위해 경제를 개방하고 기업차원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또한 기존의 자의적인 산업정책과 보호무역정책이 축소되고 국제경쟁의 공정성이 강화됨으로써, 자본과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우리 산업과 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이 활발해 지겠지만, 동시에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도 자유로워짐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의 생산 및 교역활동이 큰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임
  - 기업들은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범지구적 차원에서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생산 · 판매 · 기술개발 등 기업 활동을 노동 · 기술 · 정보 · 시장 · 정부규제 등의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최적지로 이전해 가는 이른바 “기업 활동의 범세계화”가 가속화될 전망임

- 또한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로 인해 상품은 물론 자본, 노동, 기술 등 생산요소의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 국경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
  - 아울러 대외적인 통상환경의 경우 역시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는 등 급변하고 있음

FTA와 경제구조의 고도화

- 현재 세계의 통상환경은 WTO(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와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 WTO의 새로운 다자협상인 DDA(Doha Development Agenda)는 서비스,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시장개방을 논의 중이며, 지역주의는 FTA 등 지역무역협정 확산으로 확대되고 있음
  - 최근의 FTA는 무역장벽의 완화 및 철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통상규범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지향하고 있음
- 특히 경제성장률 저하에 직면한 우리경제의 구조조정 촉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FTA는 향후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지역경제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경쟁력을 갖춘 분야는 산업구조 고도화, 생산성 제고 및 대외시장 접근가능성 확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그러나 비효율적인 산업은 생산감소 및 구조조정비용 등의 손실을 감수해야만 함
  - 따라서 FTA체결은 국민 및 지역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재편의 계기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됨

(3)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지식기반경제시대의 도래에 따른 우리경제의 선택 :
Fordism vs. Post-Fordism

- 21세기에 들어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달됨에 따라 경제의 흐름이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급속히 이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될 것임
  - 전통경제에서 중요시되던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보다는 정보, 지식 및 기술이라는 생산요소가 부가가치 창출의 주요 원천으로 변화하고 있음
  - 즉, 경제시스템이 과거의 물적 자본 투입위주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에서 지식, 정보, 그리고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이행되고 있음
-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식자원의 부존량 및 그 활용성과에 관한 국가간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큼
  - 왜냐하면 지식의 축적정도가 높을수록 지식의 창출이 더욱 용이해지는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와 그로인해 지식창출에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IRTS)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임
  - 따라서 지식기반경제 하에서는 지식의 축적과 확산이 새로운 상품과 기술개발을 촉진하므로, 지식 및 정보의 축적정도에 따라 국가간 경제적 성패가 결정될 전망임
- 그러므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개인 및 국가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임
  - 지식의 생산 및 습득에 미흡한 개인 및 국가는 경쟁력 상실에 따라 도태될 위험이 큼

(4)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고조

New Global Trend : 기후변화를 고려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고조

- 기후변화(climate change)라는 세계경제의 신조류 및 이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는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트렌드로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당면한 중요한 대외환경의 변화라 할 수 있음
  - 이에 세계 각국은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속가능한 성장개념인 '녹색성장(Green Growth)'에 주목하고 있음
  - 왜냐하면, 녹색성장은 기후변화를 필연적으로 유발시키는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에서 탈피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개념이기 때문임
- 이처럼 '녹색성장(Green Growth)'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음
  - 우선 국제적으로 CO_2 감축을 강제하는 기후변화 관련 규제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원 고갈에 대한 우려 및 녹색시장의 성장세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 구체적으로 기후변화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간 CO_2 의무감축에 소극적이던 미국과 개도국 등에서 감축을 강제하는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아울러 2005년 이후 최근까지 유가 및 석탄가격이 2배 이상 오르는 등 초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고,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가 부각되고 있음
  - 이처럼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탄소배출권,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시장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배경 하에 세계 각국은 경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녹색뉴딜(Green New Deal)'정책을 자국의 특성에 맞게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녹색성장을 위한 각국의 관심과 노력은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고려해야할 핵심적 요인이라 할 수 있음

2) 국민경제

(1) 성장잠재력 저하와 산업구조 재편

경제성장 잠재력의 저하

- KDI에서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향후 2020년까지 적정성장을 지속할 것이나 그 성장세는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기술혁신과 구조조정에 상당한 성과를 낼 경우(고성장시나리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에 5.1%, 2010년대에 4.1%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저성장시나리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에 4.4%, 2010년대에 3.3%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4-1> 산업별 국내 총생산 전망

구분	산업구조(%)					불변 증가율(%)				
	2000년	2010년		2020년		90년대	2001-2010		2011-2020	
		저성장	고성장	저성장	고성장		저성장	고성장	저성장	고성장
제조업	28.8	27.2	27.7	25.6	26.2	5.9	4.5	5.2	3.1	3.9
서비스업	46.9	49.7	49.9	52.5	53.1	7.0	5.0	5.7	3.7	4.5
GDP	100.0	100.0	100.0	100.0	100.0	5.7	4.4	5.1	3.3	4.1

자료 : KDI,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00

제조업,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요구

- 제조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성장잠재력이 클 뿐만 아니라 금융, 유통, 운수, 정보통신, 기술엔지니어링 등 서비스부문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큼
  -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산업화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음

- 산업구조 역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중심, 그리고 지식기반산업으로 고도화되어 왔음
- 앞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우리나라 제조업의 성장은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한정된 자원의 집중 투입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의한 양적인 고도성장을 그 특징으로 하며, 저렴한 노동력과 저리의 정책금융이 제조업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성장 전략은 1980년대 후반부터 임금, 지가, 금리, 물류비 등 생산요소 비용이 급등하고 해외시장에서 선발개도국 및 후발개도국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는 1960년대 이후 고성장을 지속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요소투입 위주의 양적성장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성장세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1970~80년대에는 7~8%, 90년대에는 6%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성장률이 4%대로 하락함
  - 이처럼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 것은 투자부진, 노동공급 둔화 그리고 기술축적 및 인적자원개발 지체 등의 여러 이유로 인해 생산성 향상이 부진하였기 때문임

(2) 경제양극화의 심화

경제양극화의 심화

- 최근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여러 부문에서 경제적 성과의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IT산업과 비IT산업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 산업 업종 및 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문제는 최근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업종 간 격차 확대라는 차원을 넘어 경제 각

부문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임

- 산업, 소득, 고용, 기업실적, 주가 등 경제 각 부문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단순한 경기 순환적 측면 외에도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에 기인함
-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시장개방 및 경쟁의 가속화,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최근의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 및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존함

- 이러한 경제양극화 현상은 우리경제가 대외개방형 경제운용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일 수 있음
  - 그러나 문제는 자본축적을 저해하는 등 경제의 공급기반을 약화시켜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임
  - 대내외 충격에 대한 경제의 변동성을 증대시키고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물적·인적자본의 축적을 저해하여 생산성 향상을 저해함

(3)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 및 육성 요구

국민경제의 성장을 선도할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의 필요성 제기

-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경제개발을 시작한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정책적으로 선도 산업군을 육성·발전시킴으로써 효과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음

- 그러나 최근의 국내외 환경변화는 향후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발전주도산업군의 출현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주요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식기반산업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첨단기술산업은 자체적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후방 산업연관효과와 기술연관효과를 통해 우리 산업전반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임

- 이처럼 국내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래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신성장동력 산업의 창출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정부는 미래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을 발굴함

<표 4-2>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6대분야	22개 신성장동력
에너지・환경(6)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바이오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 플랜트
수송시스템(2)	Green Car, 선박・해양시스템
Nwe IT(5)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LED조명, RFID/USN
융합신산업(4)	로봇, 신소재・나노융합, IT융합 시스템,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바이오(1)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지식서비스(4)	소프트웨어, 디자인, Healthcare, 문화컨텐츠

자료 : 지경부 보도자료, 신성장동력 보고대회, 2008

-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산업은 단기적으로는 5년 이내, 중장기적으로 10년 이후에 산업화가 가능한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음
  - 10대 신성장동력산업은 기후변화, 고령사회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면서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와 세계시장규모, 국내기업 점유율, 우리의 기술역량, 일자리 창출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됨
  - 향후 신성장동력산업은 부가가치창출, 수출증대 및 고용창출 등을 통해 우리경제의 버팀목이 될 핵심산업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며, 우리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4) 국가발전 패러다임 전환

신국가발전패러다임 : 저탄소 녹색성장(Low-Carbon Green Growth)

-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Low-Carbon Green Growth)'이 향후 한국경제의 비전임과 동시에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 될 것임을 천명함
  - 구체적으로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전략임
  - 나아가 이를 토대로 경제·산업구조는 물론 삶의 양식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제발전과 환경문제 해결의 선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는 것임
- 이후 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한 실천적 수단으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녹색뉴딜사업'(핵심사업 9개, 연계사업 27개)을 SOC, 저탄소·고효율 산업기술, 친환경·녹색생활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다만, 녹색뉴딜 발표 후 재원조달계획 미비, 신성장 동력사업 등 기존대책과의 중복, 고용효과 과대계상 등의 비판이 제기되기에 이름
  - 이에 정부는 27개 연계사업 중 고용창출 효과가 미약하거나 '신성장 동력산업'등에 포함·중복되는 총 13개 사업을 삭제하였으며,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기존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13개 신규사업을 추가로 발굴함
  - 이는 우리경제가 당면한 대외적 여건변화에 대한 적극적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관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5) 국내산업의 해외이전과 산업의 공동화

국내산업의 해외이전 : 위기에서 기회로

- 경제적 글로벌화에 따라 기업의 해외입지 지향이 높아지고, 해외 직접투자는 대규모로

증가하였음

- 1986년 이후 외환시장 호전,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저부가가치 업종의 해외직접투자 추진 등에 따라 급증하였으며 향후 더욱 크게 증대될 것임
- 이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에는 부동산, 도·소매업 등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등 부문이 다양해지고 있음
-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사양산업에서 주문자생산방식 중심의 해외직접투자가 첨단산업 또는 R&D부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외에 투자하지 않았으면 국내에 투자하였을 기업이 다수라는 점임(박영철, 2002)
  - 기회비용적 측면에서 감안하면 일부업종의 경우 국내에서의 제조업 근간의 훼손이 우려됨
  - 해외투자의 급증에 따른 해당산업의 절대적 및 상대적 국내에서의 투자 감소가 우려됨
- 그리고 산업입지 부문의 간접적 영향과 아울러 해외이전 면적의 다수 발생 등 직접적 영향이 예상됨
  - 따라서 산업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응뿐만 아니라 산업입지적 측면에서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마련을 통해 해외직접투자 영향의 긍정적 소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사양산업으로 특화되어 있는 지역은 해당산업의 해외이전 등을 위시한 산업활동 위축에 따라 적절한 새로운 산업 등의 유치 등을 통한 지역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회생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해외투자업종이 비교우위산업인 경우도 지역투자와의 연계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3) 지역경제 여건변화

(1) IT 및 자동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재편

충남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IT와 자동차 산업

- 우리경제의 주도산업은 1970~1980년대 초 섬유산업,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 자동차 산업, 1990년대 후반~현재 IT산업으로, 산업구조가 점차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음
  - 특히 반도체, 휴대폰, TFT-LCD등은 세계 IT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중공업 분야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충남 지역경제에서 IT 및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 산업에서 약 65% 정도로, 양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
  - 충남 전체 수출액에서 IT 및 자동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4.8%에서, 2010년 64.4%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금액으로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표 4-3> 충남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 %)

품목명	2004		2010		연평균 증가율 ('04-'10)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 수출	29,272	100.0	54,054	100.0	10.8
집적회로반도체	11,895	40.6	16,269	30.1	5.4
모니터	3,109	10.6	16,999	31.4	32.7
승용차	1,853	6.3	1,562	2.9	-2.8
(소계)	18,970	64.8	34,830	64.4	10.7

자료 : 한국무역협회, 각 년도.

- 자동차 산업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충남 주요 수출 품목으로 IT 및 자동차산업이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것은 변함없음
  - 특히 IT 및 자동차 산업은 충청남도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으로 충남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음

- 디스플레이 산업은 평면 디스플레이시장이 급성장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삼성전자(TFT-LCD), 삼성SDI(PDP) 등 주요기업의 지역 내 이전 및 투자확대에 힘입어 단기간에 급성장함

-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확대추세, 삼성전자 사업본부의 아산탕정 이전 및 대규모 설비투자 추진 등으로 충남은 향후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다만, 충남지역은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등의 역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제약하고 있음
- 따라서 소재・부품・장비업체 등 관련 업체 유치를 통한 집단화가 필요한 실정임

● 자동차 산업의 경우, 2004년 이후부터 아산 현대자동차가 연간 30만대의 완성차와 28만대의 엔진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서산 동희오토에서 연간 23만대의 완성차를 생산・수출하고 있음

- 기아자동차가 경기도 소하리에서 서산 일반산업단지(120만평 조성 중)로 이전하게 되면 울산 다음의 대량생산능력을 갖추게 됨
- 이처럼 완성차 업체의 지역 내 입지를 계기로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협력업체가 천안, 아산, 서산지역을 중심으로 입주하고 있음
- 그러나 완성차 산업에 비해 부품산업의 집적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로, 향후 지속적인 자동차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연관산업 및 부품업체들의 지속적인 지역 내 입주가 필요한 실정임

(2) 도내 지역간 불균형 성장 심화

북부권과 비북부권 사이의 경제불균형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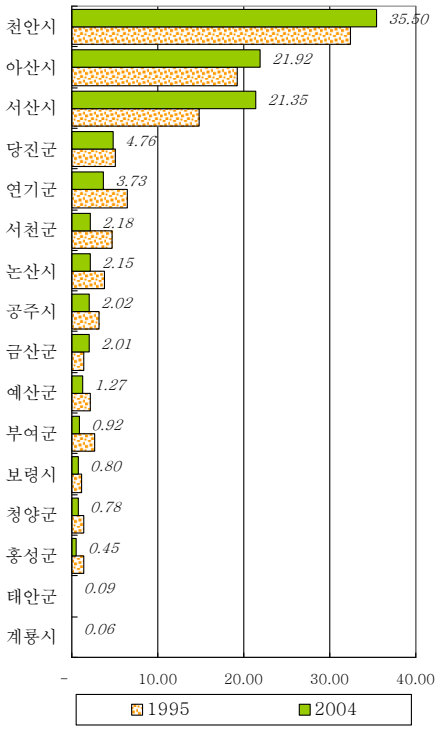
● 충남 북부권 중심으로 산업활동이 집중되어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

- 충남 전체 제조업의 54.9%가 천안, 아산, 서산 등 북부권에 입지해 있으며, 향후에도 산업집적은 가속화될 전망
- 2004년 생산액 기준으로 북부권의 천안, 아산, 서산이 각각 35.5%, 21.9%, 21.3%로 충남 전체 생산액의 78.7%를 차지
-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추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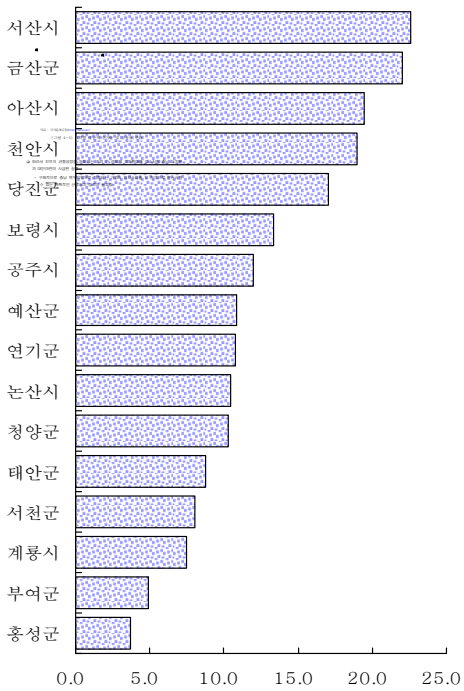
● 상대적으로 북부권 이외 지역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주도할 선도산업이 부재함

- 제조업 생산액이 낮은 지역으로는 부여(0.9%), 보령(0.8%), 청양(0.8%), 홍성(0.5%), 태안(0.1%), 계룡(0.1%) 등으로 대부분 서해안의 관광 중심지역이거나, 내륙의 농축산업 중심지역이 이에 해당함

[지역별 생산액 점유율]



[최근 10년간 생산액 증가율(1995-2004)]



(3) 수도권 이전기업의 지역 내 입지수요 증가

입지요인 및 입지경쟁력 개선에 따른 기업선호도 증가

- 기업의 입지수요 결정에는 다양한 측면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지가, 임금, 인프라, 기술 등 투입요소의 차이가 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데 일차적인 영향을 미침
  - 이외에 기업환경, 정부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요인들이 기업의 입지결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함
  - 즉, 투입요소와 행태적·정책적 요소가 결합하여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를 결정함
- 이와 관련하여 2000~2005년 기간 동안 수도권 소재 기업 중 총 844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였음(한국토지공사, 2006)
  - 이 중 14%에 해당하는 126개 기업이 충남, 특히 충남 서북부 지역으로 이전하였는데, 이는 강원지역(314개소) 다음으로 높은 수치임
  - 특히, 지방으로 이전한 종업원 규모 100인 이상업체는 총 102개소로, 이 중 28%에 해당하는 29개소가 충남지역으로 이전하였음(강원 19개소)
- 이처럼 수도권 소재 기업이 충남지역을 선호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타지역 비해 양호한 입지요인에 기인한 것임
  - 첫째,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충남의 지가는 기업으로 하여금 저렴한 공장부지 확보를 가능케 함
  - 둘째,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정책은 수도권 내 공장의 신·증설을 어렵게 함
  - 셋째, 정부의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지원정책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는 기업의 이전결정을 용이하게 함
  - 넷째, 기업 활동 시 여전히 수도권 의존도가 높아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행태 때문임
  - ·기업 및 산업활동의 입지는 기존 집적지를 중심으로 주변으로 확산되는 패턴, 즉 '경로 의존적(path dependent)' 발전패턴을 따르는 경향 존재

2. 사회적 여건변화 전망

(1) 세종시 및 도청 소재 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여건변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발전의 계기 마련

- 세종시 건설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지방분권, 수도권 발전전략과 함께 21세기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임
  - 세종시는 다기능 복합형 자족도시로서 충남 공주·연기지역에 30~5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건설될 계획임
  - 공공기관의 이전규모는 중앙행정기관 12부 4청 2청과 18개 국책연구원이며, 총 이전 인원은 11,962명에 달함
- 세종시가 충청권에 입지함에 따라 충남도는 지역발전의 선도지역으로서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도시건설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및 공공기관의 이전은 충청남도에 행정의 중심지 기능부여 및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함
- 충남 도청이전의 주목적은 지역 내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임
  - 도청이전은 신 도청사 및 관련 시설물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이 충남 지역 내에서 이루어짐을 의미함
  - 따라서 도청이전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에 유·무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 외에도 도청이전에 따른 무형적 파급효과는 도정의 구심성 및 상징성 확보, 지역정체성 제고 등으로 지역의 개발 잠재력 함양과 경쟁력을 촉진하는 사회환경 여건적 요소로 파악될 수 있음
  -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인적, 물적 잠재자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개발 및 발굴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함

- 아울러 지역의 총체적인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이면서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재정의 운영 틀을 구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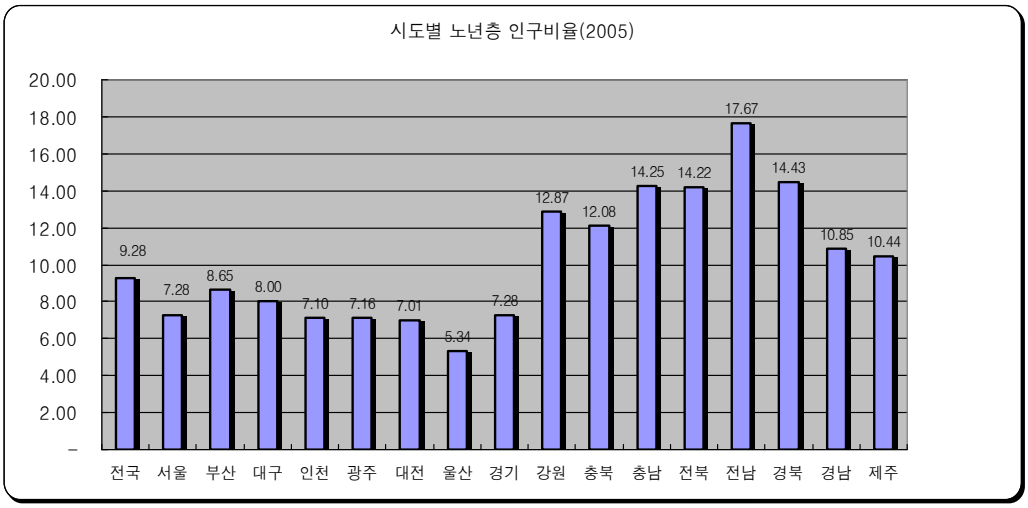
-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충남지역 내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가 발생될 것이라는 점임
  - 국가 및 도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게 될 신도시들이 개발됨에 따라 지역간 및 지역 내의 인구이동이 발생될 것은 자명함
  - 또한 신도시를 중심으로 고차원적인 사회 · 문화적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다양한 변화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지역민들의 소비패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다시 지역의 생산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

(2)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진입전망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의 성장률 저하 우려

-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
  - 이미 2000년에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2%로 유엔이 규정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함
  - 2019년경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출산율이 하락하는 저출산 사회(Low Fertility Society)에서 주로 발생하며, 평균수명의 연장이 또 하나의 원인임

- 2005년 현재, 충남의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비율은 14.25%로 전남,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음
  - 충남의 경우 이미 2005년에 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14%이상)로 진입



자료 : 통계청(http://kosis.nso.go.kr), 「인구총조사」, 2005

(그림 4-2) 각 시도별 노년층 인구비율

- 2020년 충남의 노령인구 비중은 18.0%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며, 2030년에는 초고령 사회(24.3%)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유년층 인구(0-14세)는 2005년 18.5%에서 2020년 12.4%로 감소될 전망임
  - 따라서 유년층 인구가 감소로 인해 향후 생산가능연령인구(15-64세)도 그에 비례하여 감소할 것임

<표 4-4> 충남의 유년 및 노년층 인구 전망

(단위 : %)

구 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30
유년인구구성비	21.2	20.0	18.5	16.3	13.8	12.4	11.5
노령인구구성비	10.0	12.1	14.2	15.5	16.5	18.0	24.3

자료 : 통계청(http://www.nso.go.kr),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각 년도

- 우리사회의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의 성장률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64.3%를 정점으로 2030년 62.6%로 떨어지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 전체 취업자 수도 2030년 이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KDI, 2002)

- 즉,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 수의 하락은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결국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킬 것임
- 이는 비단 국민경제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충청남도의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음

(3) 지방자치와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 증대

산업개발 둘러싼 지자체간 경쟁심화 및 환경에 대한 국민관심 증대

- 지방자치제는 중앙집권화에서 지방분권화로, 획일적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자율과 책임이 동시에 강조되는 사회가 도래하게 됨을 뜻함
  -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따른 자율화의 정착은 모든 정책결정과정에서 더욱 나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지만,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그리고 지방정부 상호간에 마찰을 초래할 우려도 있음
-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간의 유망산업 유치경쟁은 심화될 것임
  - 기술수준과 부가가치가 높으며 환경오염이 적은 지식기반산업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임
  - 한편, 경쟁적인 산업유치에 따라 지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우려가 높음
    - 동일 수계 상에 위치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간의 산업개발에 대해 이해상충 문제가 첨예해질 것이며, 오염물을 발생하는 업종들의 입지는 더욱 어려워질 것임
    - 대구 위천 산업단지의 지정과 관련한 지역간 갈등과 수도권내 공해업종의 집단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난제가 이를 반증함
-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되면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임
  - 따라서 세계적인 환경보전 움직임의 대비와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과 환경을 조화한 산업입지 및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박영철 · 류승한 · 황승미, 2004)

3. 산업입지 여건변화 전망

1) 기업 해외이전 전망

對중국 투자 급증 및 기업이전 러시

-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는 투자금액 기준으로 2000년 약 $781백만에서 2010년 $3,621백만로 매년 평균 29.1%씩 증가하고 있음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대중국 투자는 1999년 $3억 6천만 수준으로 격감하다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음
  - 이러한 투자 증가세에 힘입어 중국은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 투자대상국으로 변모함

<표 4-5>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추이

(단위 : $백만, 건수, %)

구분	2000	2005	2010	연평균 증가율 ('00-'10)
신고건수	1,452	4,898	2,414	8.8
신고금액	1,038	3,702	4,423	27.3
송금횟수	2,192	9,830	3,734	9.3
투자금액	781	2,857	3,621	29.1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국가별 해외투자통계, 각 년도

- 이처럼 대중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배경에는 '90년대 들어 생산비용 절감 및 신시장 개척, 과도한 국내규제 등의 이유로 중국으로 이전하려는 국내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임
  - 국내 기업의 대중투자는 여전히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절감형 투자가 내수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추구형 투자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남(KIEP, 2004)

- 주목할 만한 사실은 대중국 투자동기가 대기업의 경우는 내수시장 진출이며, 중소기업의 경우는 저렴한 인건비에 있다는 것임
- 그러나 최근 대기업들의 중국진출이 늘어나면서 이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납품업체의 중국진출'이 대중투자의 중요한 동기로 부각되고 있음

● 대중국 투자의 증가는 우리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국내산업 구조조정 촉진, 수출확대 유발, 모기업 생산의 전문화 및 고부가가치화 촉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국내 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대중투자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국내 산업 공동화 촉발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것도 사실임
- 또한 일부 특정산업 혹은 지역에서 기업의 중국이전이 집중될 경우 심각한 경제·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소지도 있음

2) 수도권 규제정책 전망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가속화

● 그간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각종 행위제한과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한 권역 및 공간구조 조정이라는 양대 축으로 추진되어 왔음

- 수도권 규제의 주요내용은 정비권역 및 행위제한, 공장총량제, 대학규제, 조세 및 부담금의 차등부과 등임

●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수도권 정책기조는 규제에서 기업투자 및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는 바, 구체적인 규제완화 대책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공장신설·증설·이전규제 개선책으로 산업단지 내(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에서는 공장 규모·업종과 관계없이 공장 신설·증설·이전을 허용

-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는 공장 신설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되, 권역별로(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 증설·이전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

- 성장관리권역에서는 모든 첨단업종 기존공장의 증설범위를 확대*하고, 첨단업종 외의 공장도 기존부지 내의 증설을 허용

• 공업지역 내 : 3천㎡ 이내(14개업종은 100% 이내) → 규모제한 폐지

• 공업지역 외 : 14개업종만 100% 이내 → 모든 첨단업종에 대해 100% 이내 증설

-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허용 확대

• 공업지역 내 : 첨단업종(1천㎡ → 100%이내), 기존부지내 증설(10개 업종 → 전체 업종)

• 공업지역 외 : 첨단업종(1천㎡ → 50%이내)

- 이전 가능(과밀·자연→성장권역 내 공업지역) 업종도 확대(8개 → 전체)

- 둘째, 공장과 산업단지에 대한 입지규제 개선으로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토록 확정된 지구에서는 산업단지총량규제를 배제하고, 서울시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허용

-「수정법」의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공장과「산집법」의 공장 신·증설규제 대상을 일원화

• 공장총량제 : 연면적 200㎡ → 500㎡ 이상/ 신·증설 규제 : 창고·사무실 면적 제외

- 셋째, 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으로 환경규제방식을 입지규제중심 → 총량제·배출규제중심으로 전환

- 오염총량제 의무화시행방안 확정('08.11) 및 관련 입법 추진('09.4)

- 수질오염 총량관리 실시 지역의 경우 입지규제 완화

•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에 대해 개발사업 허용범위 확대('09.3)

-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전체 면적의 25%)으로 지정된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 국가안보, 환경보전 등 중첩적인 규제로 주민생활이 불편한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등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

- 지방이전 대상이 아닌 수도권내 공공법인 사무소의 신·증축 허용

- 서울시내 대형 건축물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금융중심지내 금융업소, 산업단지내 R&D시설에 대해서는 면제

- 수도권내 기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취·등록세 중과(3배)제도 개선

<표 4-6> 수도권 정책 추이

추진단계	연도	시책명	주관
문제인식기	'64 '69	·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 · 대도시 인구 및 시책의 조정대책	건설부
시책형성기	'70 '73	· 수도권 인구과밀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 · 대도시 인구분산책	건설부 경제기획원
정비추진기	'77 '82 '84	· 수도권 인구재배치 기본계획 ·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 · 수도권정비계획 기본계획(1984-1996)	건설부
시책전환기	'94 '97 '06	·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전면개정 ·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확정 · 고시	건설교통부

자료 : 「수도권 규제의 쟁점과 정책방향」 Keri(2006)의 내용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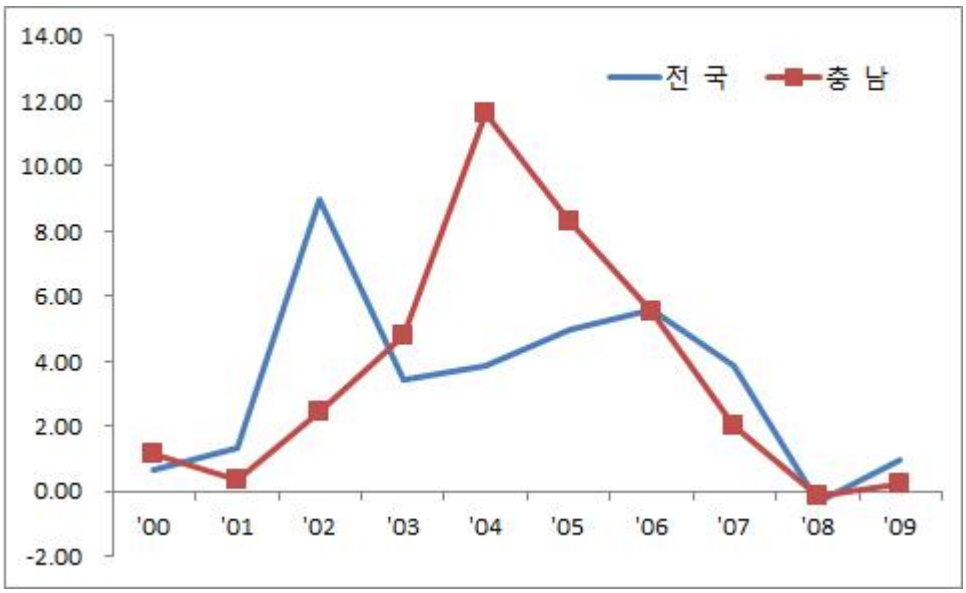
- 이러한 일련의 수도권 규제완화조치는 충남지역의 기업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수도권 기업의 충남 지역 내 이전이 증가한데는 수도권 규제가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주지의 사실임
  - 따라서 향후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의 가속화는 충남의 수도권 기업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

3) 지가전망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가격 급등

- 기업이나 산업활동의 입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물리적 조건과 생산요소로 구분됨
  - 물리적 조건은 도로, 항만, 주택, 공업단지 등의 인프라와 관련됨
  - 생산요소 조건은 토지, 노동, 자본, 기술 등의 요소와 관련됨

- 특히, 투입요소 중 토지와 관련한 구입비용은 기업의 최초 생산활동에 필요한 고정비용이므로 기업의 입지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
  - 토지가격은 행정적·사회적·경제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음
  - 특히 정부정책에 따라 해당 토지를 비롯한 대규모 인근 지역 토지가 개발되는 경우, 토지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오는 것이 일반적임
  - 즉, 공공계획에 의한 각종 개발재료와 토지의 상대적 희소성이 토지가격을 앙등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됨
- 충남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 및 대기업입주 등으로 인해 관련 지역의 지가가 급등한 것에 힘입어 2004년, 2005년 두 해 동안 전국 최고의 지가 상승률을 보였음
  - 전국평균 지가변동률이 2004년 3.86%, 2005년 4.99%로 나타났으나, 충남지역의 지가변동률은 2004년 11.65%, 2005년 8.32%로 전국에 비해 큰 폭으로 지가가 상승했음을 보였음
  - 이후 점차 전국평균에 가까운 지가변동률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세종시 출범과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등의 영향으로 또 다시 지가변동률이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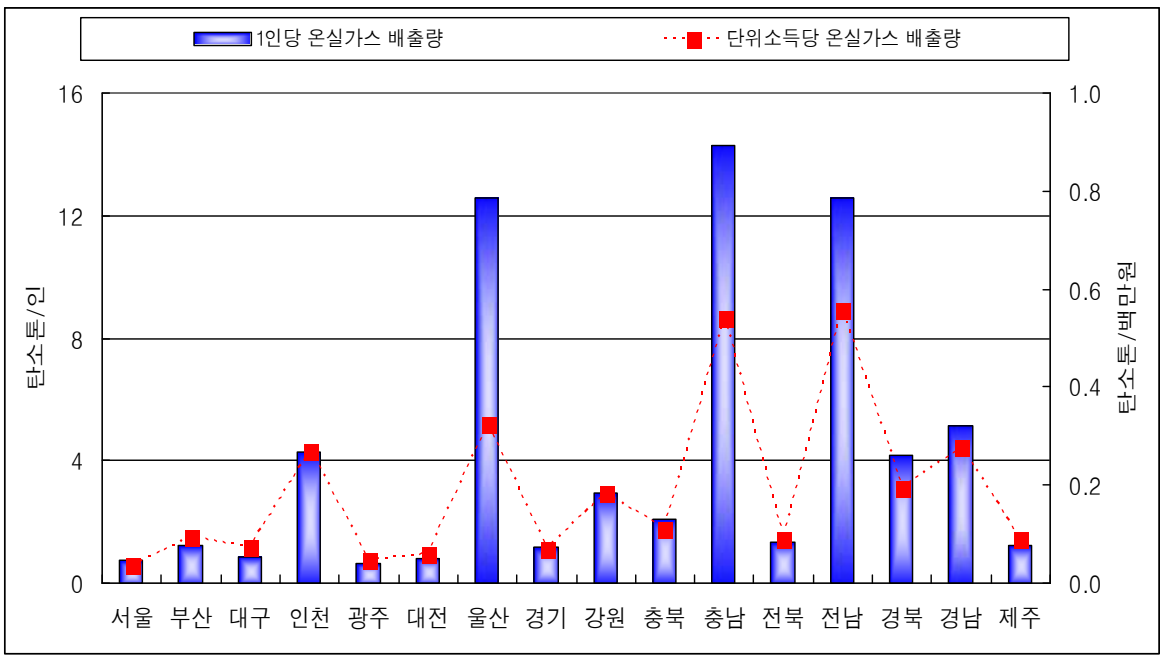
(그림 4-3) 충남 지역 지가변동률 추이

- 이러한 지가의 상승은 충남지역으로 입주하려는 기업들의 토지구입비용 상승을 의미함
  - 특히 수도권 기업들의 충남 지역 내 입지수요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던 저렴한 지가 메리트는 감소할 것임

4) 녹색성장 전망

환경(Green)과 성장(Growth)의 조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 要

- 그동안 충남지역은 제조업의 비약적 성장을 토대로 양적인 측면에서 고도성장을 이루어왔음
  - 그러나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1인당 및 소득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충남지역이 그동안 질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임



- 관련하여 온실가스의 의무적 감축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차원에서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제 수단이 적극 모색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기후변화는 충남지역의 지속성장(sustained growth)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할 핵심적인 여건변화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여건변화를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sustainable growth) 성장을 가능케 하는 '국가의 녹색성장전략(Green Growth National Growth Strategy)'을 적극 수용하여 환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야 말로 충남지역이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환경(Green)과 성장(Growth)이 조화되는 다시 말해, 양적 성장 보다는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적극 고려해야만 함
- 이를 위해서는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저탄소 경제(Low Carbon Economy)'를 지향하고, 동시에 주력산업의 '녹색화(Greening)'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을 집적화해야함
  - 아울러 자원순환·생산성 제고 및 자원순환산업의 성장동력화를 통한 자원순환형 경제·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생산기반 마련이 요구됨

5)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 증대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 공급의 중요성 대두

- 최근 들어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환경관련 압력이 강화되고 있음
  - 대내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관심 및 환경의식이 증대함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 대외적으로는 환경보호를 이유로 선진국에서 일방적 무역규제의 강화를 시도하는 등 산업환경에 관한 여건이 급변하고 있음
- 산업입지 측면에서도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 개발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개선노력이 구체화됨

- 정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소규모·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 공급을 확대키로 함(2004. 4.)
- 공장 설립은 가급적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로 유도하고, 관리지역에 개별공장이 입지할 경우에도 가급적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공장설립가능지역' 등으로 유도키로 함

-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입지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으로 인한 환경상의 문제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충남지역도 예외가 아님
  - 장항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집단간 상이한 가치관을 둘러싼 환경갈등의 전형적인 사례임
  - 즉,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개발을 고수하는 집단과 환경보호를 우선하는 집단간에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음

- 향후에도 환경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활동 공간에 있어서도 환경친화적인 입지공급이 요구됨
  - 경관 및 생태를 최대한 고려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산업입지를 통해 집단간 이해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4. 소결

1) 요 약

국내외 경제, 사회, 산업입지 여건변화의 가속화

- 대외적으로는 경제의 세계화 및 지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시장개방과 유연성을 강조하는 시장경제시스템의 운용이 요망됨
  - 생산요소의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이 빈번해져 국내외 시장에서의 생산 및 교역활동에 큰 변화가 예상됨
  - 동북아 경제권역 내 국가간 교역 및 투자가 증대하는 등 경제의존도가 더욱 커질 것임

-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중투자 및 수출입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국으로의 기업 이전도 활발함

- 대내적으로는 9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부문에서 요소투입 위주의 양적성장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음
  - 또한 국내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와 맞물려 경제의 양극화가 경제 각 부문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 중임
  - 이에 따라 국민경제를 선도할 신 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이 요망됨

- 충남 내부적으로는 북부권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중이며, 다양한 측면에서 산업입지 관련 여건이 변화하고 있음
  - 특히 충남의 산업입지 여건은 지가, 지리적 인접성, 정부정책 등의 측면에서 수도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그 영향을 받고 있음
  - 또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어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 공급의 중요성이 대두됨

2) 시사점

다양한 여건변화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산업입지방안 수립해야...

- 현재 국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및 이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산업의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가 아닌 산업공동화(hollowing-out)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즉, 국내 제조업의 활력약화와 함께 기업이 중국으로 이전됨으로써 국내 기반이 소멸할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하는 신산업의 창출이나 산업의 고도화 없이 산업구조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는 것임

- 따라서 대중국 투자를 국내산업의 구조조정과 모기업 생산의 전문화 및 고부가가치화 촉진의 계기로 삼아 '다품종 소량생산'과 '경박단소한 제품 생산' 등 지식기반경제에 부합하는 생산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됨

-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국제환경규제 정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산업입지와 환경이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임
  - 특히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지역 내 주민집단간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environmentally friendly) 산업입지 계획 및 개발이 요구됨
  - 나아가 기존 산업단지의 환경문제로 인한 인접주민과의 갈등해소 및 단일기업위주의 청정생산 기술개발 적용의 한계극복을 위해 자원순환형 산업단지 구축을 고려할만 함
- IT 및 자동차 산업의 경우 충남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지역산업구조가 양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
  - 이처럼 IT 및 자동차 산업은 충남의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산업이나, 소재·부품·장비 등의 역외의존도가 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따라서 관련 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집적화할 필요성이 있음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산업용지 공급은 수요규모의 변화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

- 사회 · 경제적 여건의 변화나 기술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산업활동의 토지이용의 변화를 초래함
  - 사회 · 경제 내 모든 활동은 토지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이는 바로 토지가 사회 · 경제 내 생산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을 가리킴
- 따라서 장래 발생하게 될 사회 ·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토지수요를 용도별로 예측하고, 그에 맞는 토지공급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왜냐하면 토지가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공급되는 경우, 자원의 유휴시설(idle capital)을 발생시키기 때문임
  - 반대로 수요에 비해 과소하게 공급되는 경우에는 혼잡(congestion)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임
  - 따라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토지의 공급은 장래 수요 규모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함

- 또한 지역경제 측면에서 토지수요를 결정할 때는 지역의 산업구조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왜냐하면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산업들의 구조특성에 따라 토지수요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임
  - 그리고 산업의 생산활동에 주안점을 둔 토지이용을 언급하는 경우, 토지수요는 결국 기업들의 입지수요와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음

본 장에서는 지역 내 산업별 경제활동과 입지수요의 문제를 동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이용하여 장래 충청남도 권역별 산업입지 수요를 예측하고자 함

- 본 장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지역의 산업구조와 입지수요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이용하여 장래 충청남도 내 권역별 산업입지수요를 예측하고자 함

Ⅴ. 충남 산업입지 수요추정

1. 수요추정의 방법과 예측기법
2. 수요추정 자료와 결과
3. 소결

1. 수요추정의 방법과 예측기법

1) 수요추정의 방법

(1) 부지면적 과거치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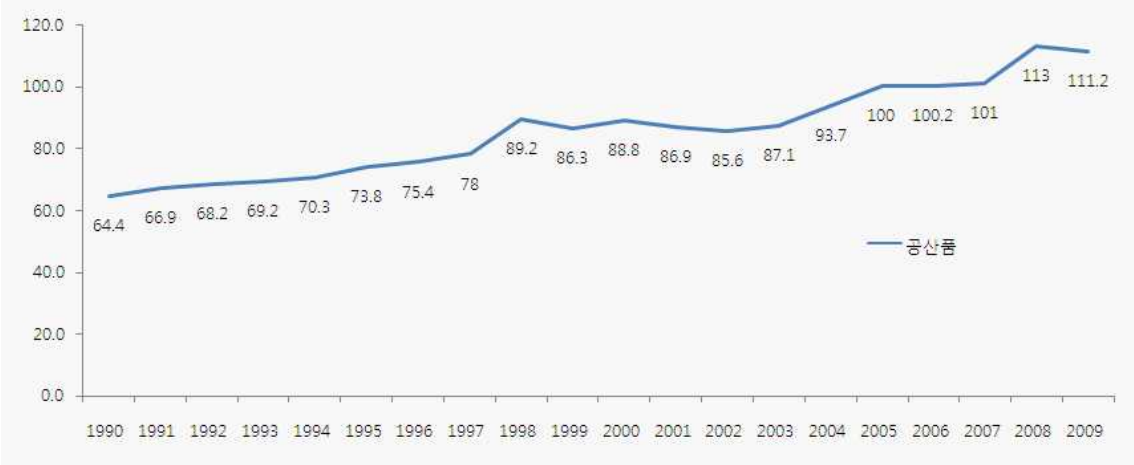
「광공업통계조사」의 부지면적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산업용지 수요를 추정

-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 시계열 자료(1984~2003년)를 이용
- 생산기술이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실질 생산액 (혹은 고용) 원단위 부지면적의 변화에 기인한 산업입지 수요 추정상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장점이 존재
- 부지면적에 대한 2004년부터의 자료(한국산업단지공단의 「FEMIS」)가 존재하나, 「광공업통계조사」는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체를 포함하지 않고 「FEMIS」는 500m2 미만의 건축면적을 가지고 있는 공장을 반드시 포함하지는 않음으로 인한 두 자료 간의 불일치 문제가 존재

(2) 생산액 추정과 생산액 원단위 부지면적을 이용

실질 생산액 추정치와 실질 생산액 원단위 부지면적을 이용하여 산업입지 수요를 추정

-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충남 제조업의 실질 생산액(백만원, 2005년 가격기준)을 예측하고 실질 생산액(백만원) 당 부지면적(m^2)을 계산하여 산업입지에 대한 수요를 추정
  - 명목 생산액을 실질 생산액으로 전환하기 위한 물가지수는 공산품에 대한 생산자물가지수를 이용함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각 년도

(그림 5-1) 공산품에 대한 생산자물가지수

- 부지면적 자체의 예측을 통한 보다 직접적인 산업입지 수요추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광공업통계조사」가 2004년부터 부지면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2011~2020년 기간에 대한 추정에는 부적합

- 생산액과 부지면적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자료가 2003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기술의 변화에 따른 생산요소로서의 토지의 투입비율변화를 반영하는데 있어 한계가 존재

  - 부지면적에 대한 최근의 자료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FEMIS」가 존재하나 생산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생산액 원단위 부지면적의 산정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대신에 고용 원단위 부지면적의 산정은 가능함

- 2008년부터는 「광공업통계조사」가 종사자수 기준 10인 이상의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의 생산액 자료-2008년과 2009년의 자료-의 이용에 제약이 발생

  -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체만을 이용해 분석할 수 있으나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체수의 비중이 상당(「전국사업체조사」 2009년 자료에 의하면, 종사자수 5인 이상의 충남 소재 제조업체 4,606개 가운데 37.4%에 달하는 1,721개 업체가 종사자수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업체에 해당)하고 이들에 의한 전체 생산액에서의 변화가 초래됨을 고려할 때,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사업체를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음

  - 종사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를 분석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전국사업체조사」에서 2008년과 2009년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종사자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수를 확

인하고 이들에 대한 평균 실질 생산액을 2006년 혹은 2007년의 「광공업통계조사」를 이용해 계산한 후에, 이 두 수치를 이용해 이들–종사자수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사업체들–에 의한 2008년과 2009년의 실질 생산액을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음 :

$$\sum_{y=2008}^{2009}\sum_{e=5}^{9} \text{사업체 1개소 당 실질 생산액}_{e,2006} \times \text{사업체수}_{e,y}$$

- 1998년과 2003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종사자수 5인 미만의 사업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나, 다른 연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들에 대한 생산액 시계열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종사자수 5인 미만의 사업체들–은 분석에서 제외됨

(3) 고용 추정과 고용 원단위 부지면적을 이용

고용 추정치와 고용 원단위 부지면적을 이용하여 산업입지 수요를 추정

-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충남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예측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의 「FEMIS」 자료를 이용해 고용 1인당 부지면적을 계산하여 산업입지에 대한 수요를 추정

-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체에 의한 산업입지 수요가 포함될 수 있으며 보다 최근의 원단위 부지면적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
  - 「전국사업체조사」는 종사자수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를 전수로 하고 있으며, 「FEMIS」는 2004년부터 분기별로 공장용지면적과 고용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500m2 미만의 건축면적을 가지고 있는 공장은 「FEMIS」에 반드시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소규모 공장에 대한 자료의 일관적이지 못한 연도별 혹은 지역(시군구)별 불포함 여부는 부지면적 추정상의 오류를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

- 「전국사업체조사」가 「광공업통계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의 시계열 자료라는 한계가 존재
  - 「전국사업체조사」는 1981년과 1991년, 그리고 1993년부터는 매년 조사되었기 때문에 1990년과 1992년의 자료가 부재한 실정임

- 고용 원단위 부지면적 산정시 고용에 대한 범위설정에 한계가 존재
  - 고용을 정의함에 있어 상용직 종사자만을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일용직이나 임시직 혹은 무급가족종사자도 함께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고용 원단위 부지면적이 상이하며, 고용에 대한 추정에서도 상용직 종사자만을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건축허가면적의 추정치를 이용

공업용 건축허가면적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산업입지 수요를 추정

- 국토해양부의 「건축허가면적」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공업용 건축에 대한 허가면적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산업입지에 대한 수요를 추정
- 시차의 불일치-실제 공장건축이 이뤄진 연도와 허가가 이뤄진 연도와의 불일치-와 더불어 광업용 건축에 대한 허가면적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한 산업입지 수요 추정상의 오류 발생 가능성 존재
-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시군구별 (산업입지 수요의) 추정에는 한계가 존재

2) 예측기법

변수의 추세를 예측하는 기법으로는 단순 추세법,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비선형 추세법을 이용

- 단순 추세법
  - 단순 추세에 의한 추정은 연도별 부지면적 자체를 시간(연도)에 대한 함수로 정의하고 이를 통상최소자승(OLS)에 의해 추정함

-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method)
  - 본 연구에서 t시점의 이동평균에 의한 변수값-이를 테면, 부지면적-은 t-2, t-1, t, t+1, t+2, t+3시점의 변수값들의 평균치이며, 분석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검토하기 위해 이동평균의 계산을 위한 구간(window)을 달리한 결과를 추가로 제시함
-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 method)
  - 지수평활법은 단순 지수평활법, 이중 지수평활법, Holt-Winter 지수평활법 등이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 지수평활법을 이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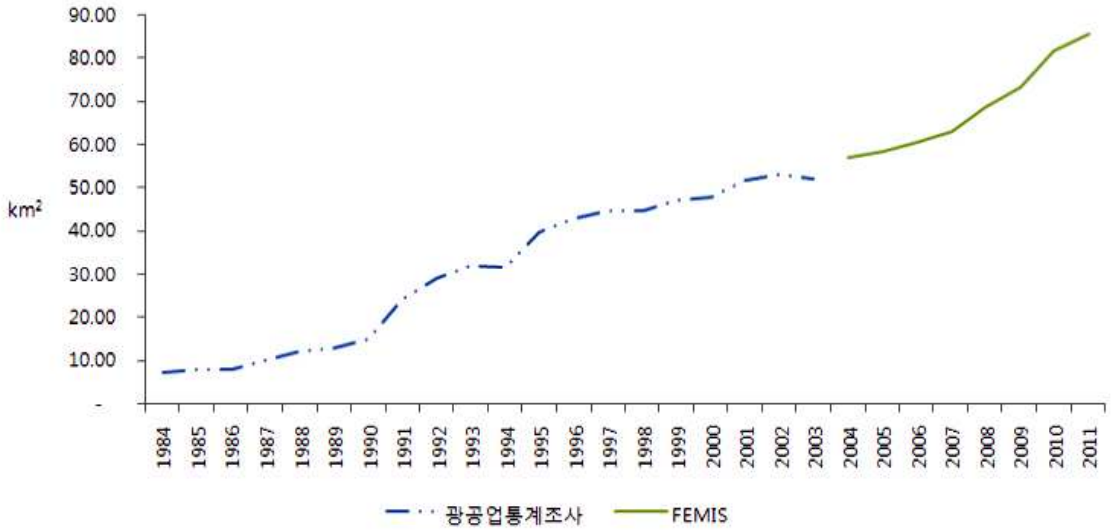
2. 수요추정 자료와 결과

1) 부지면적 과거치를 이용

(1) 수요추정을 위한 자료

충남 제조업 부지면적은 1984년 7.18㎢에서 2003년 51.99㎢로 44.81㎢만큼 증가하였으며(통계청 자료), 2011년에는 85.58㎢까지 증가함(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 부지면적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자료로는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FEMIS」를 고려할 수 있음
  -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는 2003년까지만 부지면적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FEMIS」는 2004년부터 자료를 제공함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각 년도; 한국산업단지공단, FEMIS, 각 년도

(그림 5-2) 연도별 충남 제조업 부지면적

- 하지만, 「광공업통계조사」는 종사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FEMIS」의 경우 부지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는 조사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자료를 하나의 시계열 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적합함
- 「광공업통계조사」에 의하면 충남 제조업 부지면적은 1984년 7.18㎢에서 2003년 51.99㎢로 44.81㎢만큼 증가하였으며, 「FEMIS」에서는 2004년 56.73㎢에서 2011년 85.58㎢로 28.85㎢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 수요추정 결과

부지면적 과거치를 이용한 추정결과에 의하면, 충남 제조업 산업입지(계획입지)의 수요는 연평균 1.91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충남 전체의 제조업 부지면적 수요는 2020년에 102.8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광공업통계조사」의 1984~2003년 자료를 이용한 충남 제조업 부지면적의 추정은 2020년에 단순 추세법에 의한 105.43㎢, 이동평균법에 의한 102.99㎢, 지수평활법에 의한 100.25㎢로 나타나며, 평균적으로 102.8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표 5-1> 부지면적에 대한 추세연장법을 이용한 충남 제조업 부지면적의 추세

(단위 : m^2)

변수	추정법	2000	2010	2020
부지면적	단순추세	47,609,481	77,184,792	105,425,880
	이동평균		76,081,456	102,989,000
	지수평활		73,281,848	100,254,000
	평균		75,516,032	102,889,627

주 : 추정은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 1984~2003년의 자료를 이용함

- 2020년까지 충남 제조업 산업입지(계획입지)의 연간 수요는 1.916㎢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 충남 제조업 부지면적에 대한 수요는 2000~2010년의 기간에 연평균 2.79㎢의 증가(연평균 4.72%의 성장)를 나타내는 반면, 2011~2020년의 기간에는 연평균 2.74㎢의 증가(연평균 3.14%의 성장)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며 계획입지에 대한 수요는 1.916㎢(전체 부지면적 수요의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표 5-2> 부지면적에 대한 추세연장법을 이용한 충남 제조업 산업입지 수요의 기간별 연평균 증가(성장률)

(단위 : km^2, %)

변수	추정법	2000 ~ 2010		2011 ~ 2020	
		연평균 증가	연평균 성장률	연평균 증가	연평균 성장률
부지면적 (계획입지)	단순추세	2.958	4.95	2.824 (1.977)	3.17
	이동평균	2.847	4.80	2.691 (1.884)	3.07
	지수평활	2.567	4.41	2.697 (1.888)	3.18
	평균	2.791	4.72	2.737 (1.916)	3.14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계획입지(전체 부지면적 수요의 70%)를 나타냄

- 계획입지에 대한 연평균 수요를 예측기법별로 살펴보면, 단순 추세법이 1.977㎢로 가장 크게 예측하고 이동평균법과 지수평활법은 각각 1.884㎢와 1.888㎢로 예측함

개별 시군에 대한 산업입지 수요추정의 결과에 의하면, 서산시가 연평균 0.42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은 천안시, 아산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충남 개별 시군의 산업입지(계획입지) 수요의 추정은 충남 전체에 대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되, 계룡시와 태안군의 경우 각각 논산시와 서산시에 포함하여 추정한 후에 최근의 비율에 따라 배분함
  - 제조업 부지면적에 대한 자료가 계룡시의 경우 1990년부터 이용가능하며 태안군은 1988년부터 자료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들이 속해 있는 지역-계룡시의 경우 논산시, 태안군의 경우 서산시-에 포함하여 함께 제조업 부지면적 추세를 추정한 후에 「FEMIS」의 2007~2011년 자료를 이용해 계룡시와 논산시 혹은 태안군과 서산시의 최근의 제조업 부지면적 비율을 적용해 지역별 산업입지 수요를 결정함
  - 최근의 제조업 부지면적 비율은 계룡시와 논산시의 경우 각각 2.20%(면적으로는 0.3㎢)와 97.80%(15.6㎢)로 나타나며 태안군과 서산시의 경우 각각 3.65%(1.9㎢)와 96.35%(50.7㎢)로 나타남
- 개별 시군의 산업입지(계획입지)균 수요 연평는 서산시가 0.427km2로 가장 높게 나타

나고, 그 다음은 천안(0.367㎢), 아산(0.36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권역별로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을 포함하는 북부권이 1.420㎢, 보령, 서천, 태안을 포함하는 서해안권이 0.093㎢, 공주, 계룡, 연기, 청양, 홍성, 예산을 포함하는 내륙권이 0.238㎢, 그리고 논산, 금산, 부여를 포함하는 금강권이 0.165㎢로 나타남

(그림 5-3) 충남 개별 시군의 계획입지 연평균 수요(㎢)

2) 생산액 추정과 생산액 원단위 부지면적을 이용

(1) 원단위 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2003년 기준 충남의 실질 생산액 원단위 부지면적은 0.91476㎡/백만원, 건물연면적은 0.27734㎡/백만원으로 나타남

- 실질 생산액 원단위 면적(㎡/백만원)

  -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 2003년 자료를 이용하여 실질 생산액 백만원 당 부지면적과 건물연면적을 광역시도별로 계산할 수 있으며, 충남의 실질 생산액 원단위 부지면적은 0.91476㎡/백만원, 건물연면적은 0.27734㎡/백만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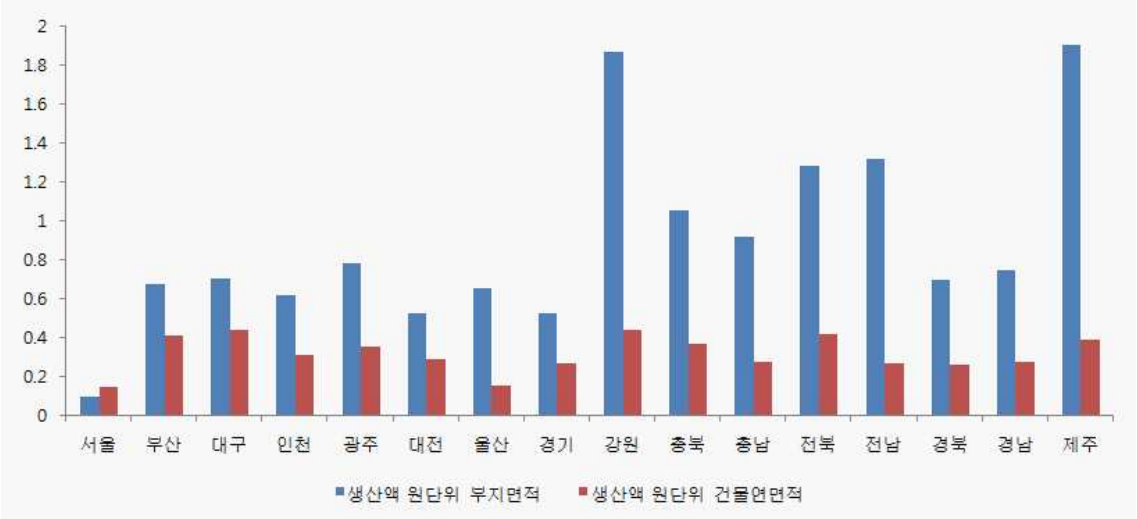
<표 5-3>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한 광역시도별 원단위 면적

(단위 : m^2/명, m^2/백만원)

	고용 원단위		실질 생산액 원단위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서울	16.32	25.57	0.09714	0.15225
부산	91.49	55.40	0.67781	0.41045
대구	108.31	68.22	0.70474	0.44391
인천	127.74	63.70	0.62112	0.30971
광주	158.17	71.94	0.78186	0.35562
대전	135.19	74.60	0.52381	0.28905
울산	442.68	106.38	0.65483	0.15737
경기	118.42	60.77	0.52490	0.26938
강원	442.23	104.24	1.86750	0.44018
충북	306.23	107.39	1.05418	0.36968
충남	340.57	103.26	0.91476	0.27734
전북	328.01	107.82	1.28313	0.42179
전남	768.69	159.82	1.31704	0.27383
경북	287.25	109.98	0.69486	0.26605
경남	196.02	73.06	0.74642	0.27822
제주	334.92	69.36	1.90126	0.39375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2003

- 실질 생산액 원단위 부지면적을 광역시도별로 비교하면, 제주, 강원, 전남, 전북, 충북, 충남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서울은 실질 생산액 원단위 부지면적이 0.09714㎡/백만원으로 제주도를 포함하는 16개 지역 가운데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부지면적보다 건물연면적이 큰 유일한 지역에 해당함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가로 인해 이 지역에서의 생산이 비토지-집약적으로 이뤄짐을 함축함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2003

(그림 5-4) 실질 생산액 원단위 부지면적과 건물연면적(m2/백만원)

2003년 기준 충남의 고용 1인당 부지면적은 340.57㎡/명, 건물연면적은 103.26㎡/명으로 나타남

- 고용 원단위 면적(㎡/명)
  - 실질 생산액 대신에 고용을 이용한 원단위 면적, 즉 충남의 고용 1인당 부지면적은 340.57㎡/명, 건물연면적은 103.26㎡/명으로 나타남
  - 제주를 포함한 16개 지역에서 고용 원단위 부지면적이 가장 큰 곳은 전남이며, 그 다음은 울산, 강원, 충남, 제주 등의 순으로 실질 생산액 원단위 부지면적의 결과와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남
  - 서울은 실질 생산액 원단위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용 원단위 부지면적보다 건물연면적이 큰 유일한 지역으로 나타남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2003

(그림 5-5) 고용 원단위 부지면적과 건물연면적(㎡/명)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10년 자료를 이용한 충남의 고용 1인당 부지면적은 340.04㎡/명으로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것과 유사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FEMIS」 2010년 자료를 이용한 충남의 고용 원단위 면적은 340.04m^2/명으로 나타나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 2003년 자료를 이용한 결과(340.57m^2/명)와 유사
  - 부지면적을 포함하는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 가운데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03년 자료이며, 이를 이용한 산업입지 수요추정은 생산기술이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생산요소로서의 토지의 투입비율 변화에 기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음
  - 하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10년 자료를 이용한 고용 원단위 부지면적은 통계청의 2003년 자료를 이용한 것과 유사하여, 후자를 이용한 산업입지 수요추정에 큰 문제가 없음을 제시함
  - 고용 원단위 부지면적을 지역 간에 비교하면, 전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은 강원, 제주, 전북, 충북, 충남, 울산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5-4>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자료를 이용한 광역시도별 고용 원단위 면적

(단위 : m^2, 명, m^2/명)

	부지면적		고용		고용 원단위 부지면적
	개별 입지	계획 입지	개별 입지	계획 입지	
서울	2,886,983	769,149	117,485	46,490	22.30
부산	11,258,606	9,315,191	93,559	65,477	129.37
대구	4,092,623	10,443,396	34,069	85,541	121.53
인천	12,103,442	8,064,375	84,825	103,687	106.98
광주	2,922,448	9,223,216	21,424	53,729	161.61
대전	2,262,467	5,488,016	14,948	31,164	168.08
울산	4,759,468	41,408,719	21,841	118,068	329.99
경기	98,848,996	33,555,670	665,365	303,489	136.66
강원	12,879,951	5,438,117	21,962	21,738	419.18
충북	34,564,182	16,750,291	82,991	67,540	340.89
충남	53,083,623	28,416,602	139,822	99,859	340.04
전북	11,804,276	26,398,983	29,083	63,061	414.60
전남	15,272,913	46,981,786	36,925	66,375	602.66
경북	35,838,509	42,735,282	116,162	165,891	278.58
경남	37,224,762	38,795,565	170,351	178,390	217.99
제주	2,398,915	241,118	5,699	622	417.66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FEMIS, 2010

충남의 연도별 공장용지는 2004~2010년 기간에 24.77㎢만큼 증가하여 연평균 4.13㎢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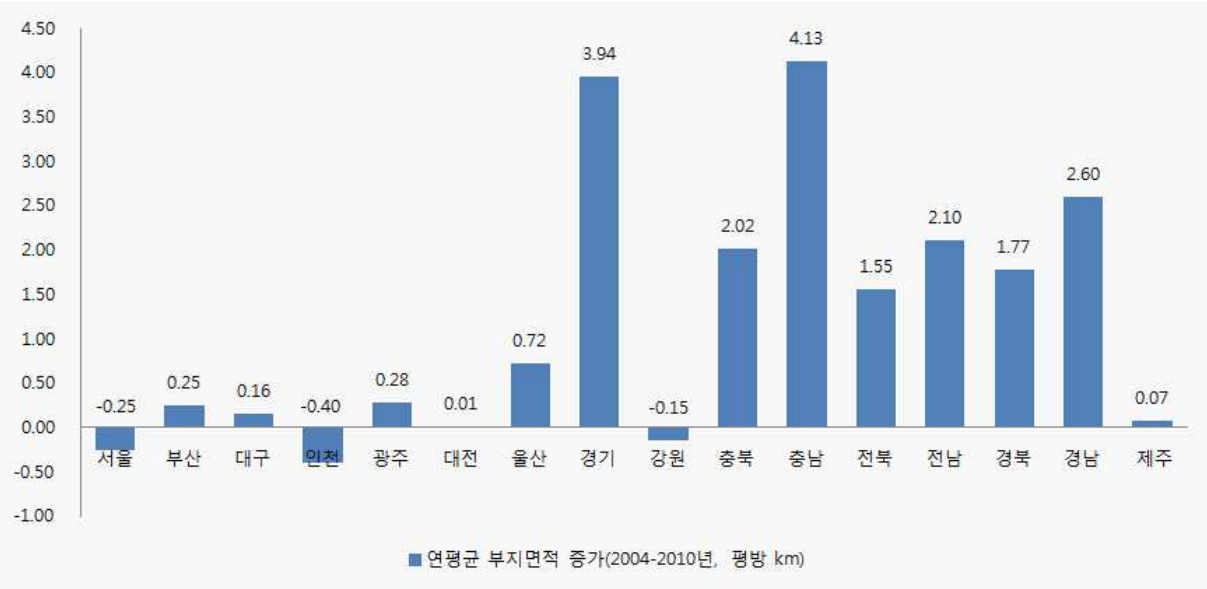
- 충남 내 공장용지의 연평균 4.13㎢ 증가는 전국의 18.80㎢ 증가에서 22.0%를 차지
  - 충남의 이러한 공장용지 증가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하며, 이는 최근에 충남의 산업입지 수요가 전국에서 제일 큼을 의미함

<표 5-5> 연도별 공장용지(부지면적) 현황

(단위 : km^2)

지역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서울	5.19	4.53	4.32	4.13	3.93	3.74	3.66
부산	19.06	19.23	17.46	18.12	19.27	19.77	20.57
대구	13.58	12.57	13.42	13.00	13.63	13.91	14.54
인천	22.54	22.42	20.31	20.06	20.04	20.13	20.17
광주	10.46	10.78	12.32	12.36	11.36	11.42	12.15
대전	7.70	7.57	6.81	7.12	7.51	7.55	7.75
울산	41.82	42.11	42.14	42.85	44.21	45.78	46.17
경기	108.74	111.71	112.65	120.81	124.56	129.80	132.40
강원	19.19	18.32	18.35	17.04	17.15	17.60	18.32
충북	39.21	40.58	42.24	44.30	45.72	48.87	51.31
충남	56.73	58.28	60.18	62.92	68.65	73.19	81.50
전북	28.91	30.47	31.15	32.75	35.03	36.69	38.20
전남	49.65	51.15	50.84	52.60	55.82	59.25	62.25
경북	67.94	68.46	69.94	72.05	73.69	76.51	78.57
경남	60.45	62.24	63.60	67.80	70.03	73.72	76.02
제주	2.23	2.30	2.35	2.42	2.52	2.53	2.64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FEMIS, 2004-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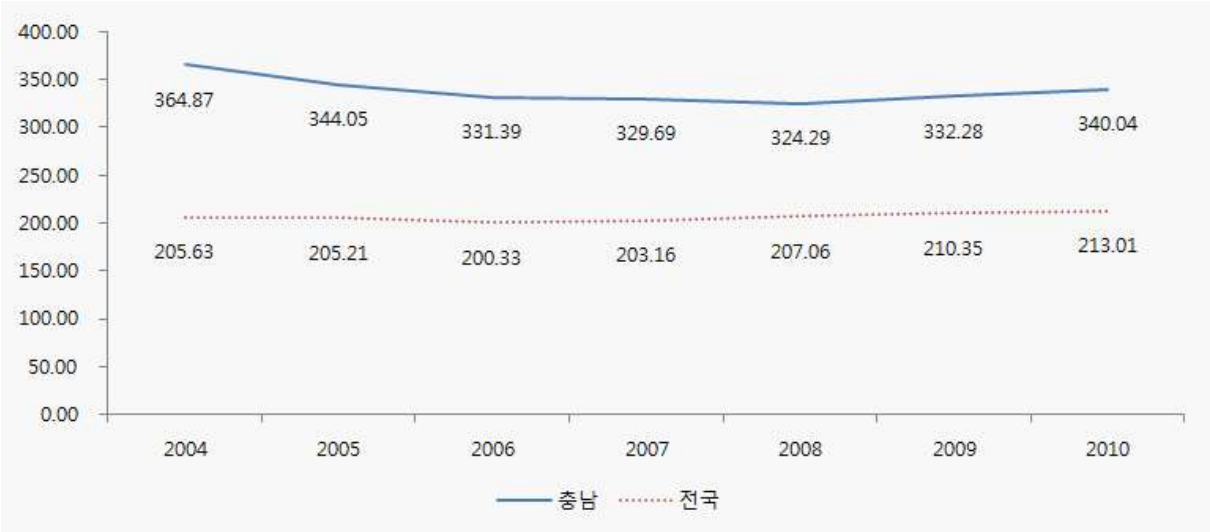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FEMIS, 2004-2010

(그림 5-6) 연평균 공장용지(부지면적) 증가(2004-2010년, ㎢)

충남의 연도별 고용 원단위 부지면적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하며, 이는 전국적인 추세와 유사

-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 연도별 고용 원단위 부지면적의 추세를 살펴보면, 충남의 경우 2004년의 364.87㎡/명에서 2008년의 324.29㎡/명까지 감소하다가 이후에는 증가하는 추세
  - 같은 기간 전국의 수치를 살펴보면, 2004년의 205.63㎡/명에서 2005년 205.21㎡/명, 그리고 2006년 200.33㎡/명으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 213.01㎡/명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최근에 고용 원단위 부지면적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는 실질 생산액 원단위 부지면적이 2010년 전후로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앞에서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FEMIS, 2004-2010

(그림 5-7) 고용 원단위 부지면적(㎡/명) 추세

- 충남의 실질 생산액 원단위 부지면적은 2000년 1.0803㎡/백만원에서 2010년 0.7501㎡/백만원, 2020년 0.6840㎡/백만원으로 감소하는 것을 가정함

(2) 실질 생산액의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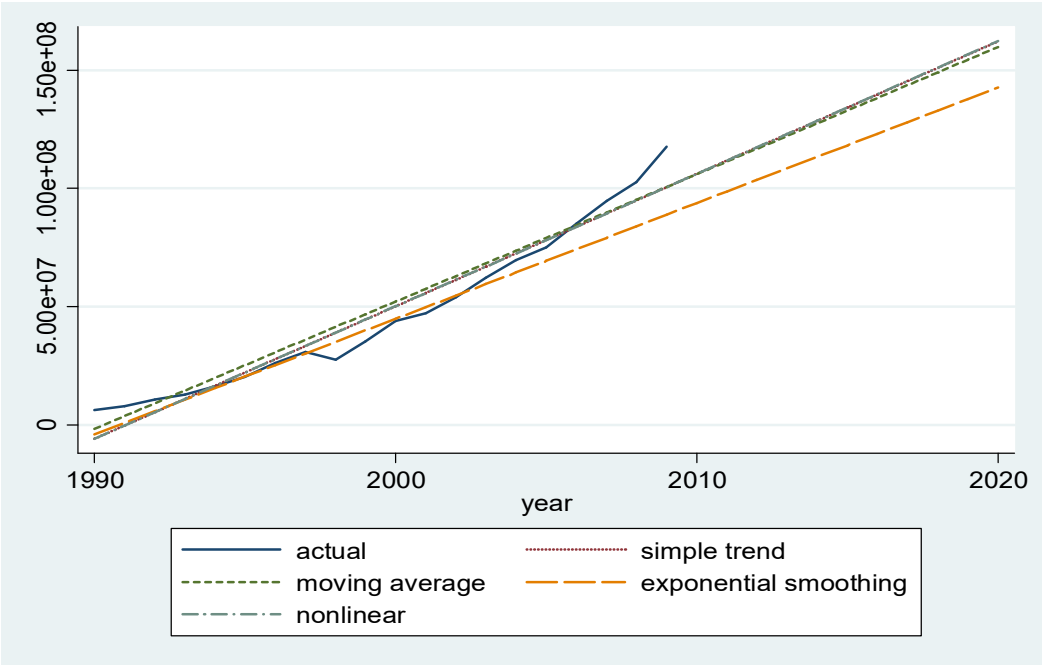
분석의 기간을 20년(1990-2009)으로 한정한 충남 제조업 실질 생산액 연간 증가액의 추정치는 4,887,272백만원 ~ 5,602,786백만원

- 1990~2009년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한 충남 제조업의 실질 생산액 연간 증가액의 추정치는 4,887,272백만원에서 5,602,786백만원으로 나타남
  - 지수평활법을 이용하는 경우에 실질 생산액의 연간 증가액이 가장 작은 4,887,272백만원으로 나타나며, 단순 추세법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실질 생산액 연간 증가액 추정치는 각각 5,597,827백만원과 5,379,467백만원으로 나타남

<표 5-6> 분석의 기간을 20년(1990-2009)으로 한정한 충남 제조업 실질 생산액의 연간 증가에 대한 추정결과

	단순추세	이동평균	지수평활
Year	5,597,827	5,379,467	4,887,272
	(15.25)**	(22.30)**	(10.81)**
상수항	-1.1145e+10	-1.0707e+10	-9.7296e+09
	(15.19)**	(22.18)**	(10.76)**
관측수	20	20	20
Adj. R^2	0.9492	0.9707	0.9160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robust t-값이고,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추정된 계수의 값이 영(0)과 다름을 나타내며, 분석기간은 1990년부터 2009년까지를 포함함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1990-2009

(그림 5-8) 분석기간을 20년(1990-2009)으로 한정한 충남 제조업 실질 생산액 추세(백만원)

- 충남 제조업 실질 생산액은 2000년에 44,067십억원에서 2010년 101,994십억원, 2020년에 154,876십억원으로 추정
  - 2020년 추정치는 단순 추세법이 162,146십억원, 이동평균법이 159,807십억원, 그리고 지수평활법이 142,675십억원으로 나타남

<표 5-7> 충남 제조업 실질 생산액의 연도별 추정치

(단위 : 백만원)

	2000	2010	2020
단순추세	44,067,320	106,168,280	162,146,560
이동평균		106,013,288	159,807,952
지수평활		93,802,416	142,675,136
평균		101,994,661	154,876,549

- 기간을 2000~2010년과 2011~2020년으로 구분하여 기간별 연평균 성장률을 살펴보면, 2000~2010년에는 연평균 8.75%로 실질 생산액이 증가하였고 2011~2020년에는 연평균 4.27%로 증가
  - 예측기법별로는 단순 추세법에 의한 추정치의 연평균 성장률이 2010~2020년의 기간에 4.33%로 가장 높으며, 이동평균법에 의한 경우는 4.19%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5-8> 충남 제조업 실질 생산액의 기간별 연평균 성장률

(단위 : %)

	2000~2010	2011~2020
단순추세	9.19	4.33
이동평균	9.18	4.19
지수평활	7.85	4.28
평균	8.75	4.27

-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을 포함하는 북부권의 제조업 실질 생산액 연간 증가액에 대한 추정치는 단순 추세법에 의한 경우 4,961,882백만원에 해당하며, 그 다음은 내륙권, 금강권, 서해안권의 순으로 추정치가 크게 나타남

<표 5-9> 분석의 기간을 20년(1990-2009)으로 한정한 권역별 제조업 실질 생산액의 연간 증가에 대한 추정결과의 요약

(단위 : 백만원)

지역	단순추세	이동평균	지수평활
충남 전체	5,597,827	5,379,467	4,887,272
권역별			
북부권	4,961,882	4,779,300	4,296,606
서해안권	124,453	117,793	119,560
내륙권	316,972	299,203	295,110
금강권	194,520	183,171	175,997

주 : 북부권은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서해안권은 보령, 서천, 태안, 내륙권은 공주, 계룡, 연기, 청양, 홍성, 예산, 금강권은 논산, 금산, 부여를 포함함

(3) 산업입지(계획입지) 수요추정

감소추세를 반영한 실질 생산액 원단위 부지면적-즉, 1.08㎡/백만원(2000년), 0.68㎡/백만원(2020년)-을 가정하여 적용

- 실질 생산액 원단위 부지면적(㎡/백만원)
  - 일반적으로 생산요소로서 토지의 생산성은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가정할 수 있으며, 이는 실질 생산액 원단위 부지면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함을 의미함
  -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충남의 실질 생산액 원단위 부지면적은 비록 단기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기는 하지만 조사가 시작된 1982년 이래로 장기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00년에 충남 제조업의 실질 생산액 원단위 부지면적은 1.08㎡/백만원이었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FEMIS」에 나타난 고용 원단위 부지면적의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실질 생산액 원단위 부지면적이 2010년에 0.75㎡/백만원, 그리고 2020년에 0.68㎡/백만원이 되는 것으로 가정함

산업입지(계획입지) 수요추정을 위해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비율을 70:30으로 가정함

- 계획입지와 개별입지 간 비율
  - 충남은 신생기업이나 이전기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계획입지를 유도하고 있고 최근에 계획입지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반영해 계획입지의 비율을 70%로 가정함

충남 계획입지(부지면적)의 연간 수요는 1.91㎢ ~ 2.19㎢로 추세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임

- 충남 전체의 연간 계획입지(부지면적)에 대한 수요예측의 결과
  - 분석기간을 20년(1990~2009)으로 하는 경우 충남 제조업 부지면적(개별 입지 + 계획입지)의 연간 수요는 2.72㎢ ~ 3.13㎢로 나타나며, 전체 부지에서 70%를 계획입지로 가정하면 계획입지의 연간 수요는 1.91㎢ ~ 2.19㎢로 추정(평균적으로는 2.06㎢)됨
  - 예측기법별 계획입지의 연간 수요는 단순 추세법에 의한 경우 2.189㎢, 이동평균법에 의한 경우 2.085㎢, 그리고 지수평활법에 의한 경우 1.906㎢로 예측됨

<표 5-10> 충남 제조업 부지면적(개별 입지 + 계획입지) 수요의 연도별 추정치

(단위 : m^2)

	2000	2010	2020
단순추세	47,609,495	79,642,135	110,908,247
이동평균		79,525,868	109,308,639
지수평활		70,365,882	97,589,793
평균		76,511,295	105,935,560

- 부지면적 수요에 대한 기간별 연평균 성장률은 2000~2010년의 경우 연평균 4.86%, 2010~2020년의 경우 연평균 3.31%로 나타남

<표 5-11> 생산액 원단위를 이용한 충남 제조업 산업입지 수요의 기간별 연평균 변화와 성장률

(단위 : km^2, %)

변수	추정법	2000 ~ 2010		2011 ~ 2020	
		연평균 증가	연평균 성장률	연평균 증가	연평균 성장률
부지면적 (계획입지)	단순추세	3.203	5.28	3.127 (2.189)	3.37
	이동평균	3.192	5.26	2.978 (2.085)	3.23
	지수평활	2.276	3.98	2.722 (1.906)	3.32
	평균	2.890	4.86	2.942 (2.059)	3.31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계획입지(전체 부지면적의 70%)를 나타냄

3. 소결

충남 제조업 계획입지(부지면적)의 연간 수요는 평균적으로 1.916㎢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 충남 제조업 산업입지의 수요에 대한 추정은 과거 부지면적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거나 실질 생산액의 추정과 (실질 생산액) 원단위 부지면적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과거 부지면적을 이용하는 경우 최근의 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함
  - 실질 생산액의 추정과 (실질 생산액) 원단위 부지면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단위 부지면적에 대한 추가적인 추정이 필요함
  - 하지만, 실질 생산액의 추정과 원단위 부지면적을 이용하는 충남 제조업 산업입지 수요의 추정은 원단위 부지면적에 대한 가정이 변함에 따라 결과가 심하게 달라지고 원단위 부지면적의 추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과거 부지면적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충남 제조업 산업입지 수요의 예측결과에 기초하여 충남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수정함

<표 5-12> 충남 전체와 권역 및 시군별 계획입지(부지면적)에 대한 연간 수요 예측결과의 요약

(단위 : km^2)

충남 전체	1.916						
북부권	**1.420**	**서해안권**	**0.093**	**내륙권**	**0.238**	**금강권**	**0.165**
천안	0.367	보령	0.043	공주	0.039	논산	0.050
아산	0.360	서천	0.033	계룡	0.001	금산	0.080
서산	0.427	태안	0.016	연기	0.103	부여	0.035
당진	0.265			청양	0.028		
				홍성	0.015		
				예산	0.052		

Ⅵ. 충남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정계획

1.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입지 공급
2.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충남 적용방안
3.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기본방향
4. 충남 산업입지 수급계획

1.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입지 공급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공급규모와 함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인 수요도 고려해야 함

- 충남 산업용지 공급규모 산정에 있어서 수요예측 결과 이외에 지역의 특성에 따른 정책적인 수요도 고려해야 할 부분임
  - 주요 산업입지 관련 법제 중 충남 지역의 내용에 따라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산업단지 방향이 제시됨
  - 충남 지역의 경우, 규모가 큰 국가산업단지가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의 실수요자 개발이 활발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 국제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지정, 세종시 및 내포신도시(도청이전) 개발 등 산업입지 수요와 관련한 다양한 영향요인이 있음
  - 이에 따라, 정책적 수요를 고려한 산업입지 공급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도내 4개 시군에 5개소(고정, 대죽자원, 석문, 장항, 아산)의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음

- 국가 산업단지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일반 산업단지에 비해 규모가 크고 장기적으로 개발되고 있음
  - 서산에 위치한 대죽자원 국가 산업단지의 경우, 국제석유시장의 불안정성 및 산유국의 정세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조성한 비축단지로 정책적 수요에 따라 조성되었음
  - 석문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1991년 지정되었으나, 실질적인 개발은 최근에 시작되었으며, 장항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군장 국가산업단지로 1989년 지정되었다가 해제되고, 2008년 재지정 되어 추진 중임
  - 국가의 전략적인 목표에 따라 개발된 국가산업단지는 일반적인 수요와는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는 정책적 수요로 산업입지 공급계획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에너지, 화학, 전자, 자동차, 제철 분야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충남 북부권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서산은 에너지, 화학, 아산은 전자, 자동차, 당진은 제철 분야의 실수요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정된 이후 조성중이거나 미개발인 산업단지라도 분양률은 100%임
  - 주로 대기업들의 입주에 따른 실수요자 개발로 인접 산업단지에 해당 분야 업체들의 추가적인 수요를 발생시킴

황해경제자유구역 - 당진 송악지구, 아산 인주지구

- 충남 지역 내 당진 송악지구와 아산 인주지구 10,069천㎡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상 산업유통시설용지는 1,746천㎡임
  - 향후 세부 개발계획안 수립시 산업유통시설용지의 구체적인 면적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유치산업은 자동차부품과 전자정보, R&D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 천안, 연기(세종시)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는 대전 대덕특구로 기능지구는 세종시, 천안, 청원(오송, 오창)으로 결정됨
  - 충남은 천안과 연기(세종시)의 두 지역이 기능지구로 결정됨에 따라, 산업, 금융, 교육, 연구 등이 입지할 것임
  - 천안지역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영상미디어 분야, 2차 전지, 축전지 분야를 특화산업으로 제안함

(서해안권) 임해산업단지 - 산업입지법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특화산업단지 - 산업집적법

- 상위 산업입지 관련 법상 제시하고 있는 서해안권의 임해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특화산업단지 등의 정책적 수요도 고려해야 함
  - 서해안지역에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임해산업단지, 내륙지역에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산업을 수용하기 위한 적정규모의 산업단지 개발
  - 산업의 지역별 특화와 연계강화를 목적으로 산업집적법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중소규모의 특화산업단지 개발
  -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적 수요를 고려한 공급계획 수립이 필요함

세종시 건설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업종 변화 - 대체산업단지
대전에서 내포 신도시로의 도청이전에 따른 연관 산업 이전

-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 지역이 세종시로 편입되는 행정구역 변화는 향후 충남의 산업입지공급계획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
  - 세종시와 주변지역에 입지한 산업단지의 경우, 업종변경 등의 변화로 재정비되고 있으며, 향후 행정구역 상 충남에서 독립될 것임
  - 따라서, 충남의 산업입지공급계획에서 수요, 공급면적 산정시, 이 부분을 별도로 고려해야 할 것임
- 충남도청이 이전되는 내포신도시 개발로 최근 홍성, 예산지역의 산업입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홍성, 예산 지역은 내륙지역으로 과거에는 수요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등을 위해 이전하는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과거추세에 따른 수요예측으로 볼 때, 실질적인 수요보다 적게 추정될 수 있음

2.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충남 적용방안

1)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 요약

산업입지 공급계획은 바람직한 산업입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산업입지 공급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

- 국토해양부장관의 공급계획 수립지침 작성과 시·도지사의 공급계획 수립의 법적근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항임
- 시·도의 산업여건, 시·군·구별 지역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산업입지분야의 전략계획임
  - 계획의 실효성을 위해 산업입지 수요와 공급실적을 검토, 5년 주기로 수정·보완하는 계획임
  -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지역별 및 입지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지정 및 주요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음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 수요자 중심의 산업입지계획, 지역산업 육성정책 고려, 친환경적 산업입지, 5년 단위 평가·수정·보완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산업입지계획과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포괄하여 수립함
- 친환경적 산업입지로 개발방향을 제시하며, 계획입지 위주의 산업입지공급체계를 구축함
  - 광역녹지축, 생태계보전지역, 농지, 임야, 보전가치가 높은 경관 등은 공급대상에서 배제
- 계획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의 수정·보완을 실시함

계획수립 유의사항 : 공급규모를 최소치와 최대치로 제시 (유연성 확보), 수정이 필요한 부분 발췌하여 보완

- 공급계획은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하되, 미래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임을 고려하여 유연성확보를 위한 최소치와 최대치로 제시(±5%)
- 공급계획 정비시 기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함
  - 공급계획 변경시는 기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함

산업입지 수요추정의 기본원칙 : 산업시설용지를 기준으로 신뢰성 있는 기관의 20년 이상의 자료를 사용, 과거 추세치에 의한 방법과 생산액 원단위에 의한 방법 사용

- 산업입지 수요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른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추정하며,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시설용지를 기준으로 함
  - 분석을 위한 자료는 신뢰성 있는 기관의 최근 20년 이상의 자료를 사용하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료출처를 명시
- 산업입지 수요추정 방법은 과거 추세치에 의한 방법과 원단위에 의한 방법에 따르되, 실증적 추정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음
- 산업입지의 순수요 면적은 추세치에 의한 수요추정 면적과 원단위에 의한 추정 면적 중에서 최소치와 최대치로 제시
  - 시·군·구별/업종별 공장부지의 순수요 면적을 추정
  - 정책적 수요, 외국인 투자 유치수요(FDI) 등은 별도로 관리

산업입지 공급면적 =
[순수요 면적 + 선공급 면적 + 재개발 재정비 면적]
- [미분양 면적 + 해외이전면적 + 휴·폐업 면적]

- 산업입지 공급면적은 순수요 면적에 추가수요면적을 감안하여 산정함
  - 순수요 면적 : 추세치, 원단위 방법 등에 의한 순수요 면적
  - 선공급 면적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간 동안 공급의 공백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기업의 입지수요와 공급 간의 시간적 불균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되는 면적으로 계획입지에 대해서 3년치 수요를 선공급
  - 재개발·재정비 면적 : 20년 이상 경과 산업단지 또는 도시지역 확산에 따른 업종 재배치 등으로 재개발, 재정비가 필요한 면적
  - 미분양 면적 :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 가운데 기업수요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만 선공급 된 면적으로 간주
  - 해외이전 면적 : 향후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에 의해 발생되는 이전적지의 면적
  - 휴·폐업 면적 : 휴업 및 폐업한 공장의 면적
- 입지유형별(계획입지, 개별입지)로 공급계획을 수립하며, 도지역의 경우 계획입지 비율을 70%로 산정함

2) 수요추정 결과를 고려한 산업입지공급규모 산정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의 수요조사 결과에 제시된
충남 지역의 수요는 각각 연평균 1.0㎢, 1.7㎢~2.1㎢

- 국토해양부 '산업단지 공급관리대책(2011)'에서, 2010년 6월 국토연구원의 분석결과로 2020년까지 전국에서 연평균 약 9.0㎢의 수요를 제시
  - 충남지역의 경우 2020년까지 산업용지 수요는 14.4㎢, 이 중 계획입지비율 70%를 고려할 경우, 계획입지에 대한 산업용지 수요는 10.08㎢로 제시함(연평균 1㎢)

- 선공급 면적을 고려한 공급 필요면적으로는 최대 18.8㎢로 제시함
- 충남지역은 기 지정된 산업단지의 공급가능 면적(2010년 6월 기준, 24.9㎢)를 고려할 때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한 지역으로 나타남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실시한 '전국 산업입지 수요조사 결과(2010)'에서 2009년~2014년까지의 공장용지 수요는 120.8㎢~149.4㎢로 나타남
  - 시도별로는 경기(26.1㎢~32.8㎢), 경남(20.3㎢~25.5㎢), 경북(12.7㎢~16.9㎢) 이어 충남(13.5㎢~16.7㎢)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
  - 2009년~2014년까지의 충남지역 계획입지 수요는 10.2㎢~12.3㎢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연평균 1.7㎢~2.1㎢의 수요를 의미함

충남 지역 수요추정 결과
연평균 계획입지의 수요는 1.916㎢로 나타남

- 국토해양부의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0년 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 충남 지역의 연간 계획입지 수요는 1.916㎢로 나타남

- 충남 지역은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최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 수 증가율도 전국 최상위임
  - 2000년~2010년 동안 GRDP의 연평균 증가율이 9.40%로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역임
  - GRDP의 전국 평균이 4.41%임을 고려할 때, 두 배가 넘는 결과임
  - 2000년~2009년 동안 충남 지역 제조업체 수(종사자 10인 이상)의 연평균 증가율은 4.20%로 전국 최상위임
  - 제조업체 수 증가율의 전국 평균이 1.41%임

- 따라서,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분석하여 제시한 연평균 계획입지 수요 1.916㎢는 충남 지역경제 현황을 반영하고 있음

충남 지역의 산업입지 공급규모 산정 결과 2011년~2020년까지 계획입지 수요는 24.908㎢이며, 추가 공급규모는 6.982㎢임

- 산업입지공급규모 수립지침에 따라 순수요 면적과 선공급 면적, 재개발재정비 면적을 합산한 결과는 24.908㎢임
  - 순수요 면적 : 1.916㎢ × 10년 = 19.16㎢
  - 선공급 면적 : 1.916㎢ × 3년 = 5.75㎢
  - 재개발, 재정비 면적 : 없음
  - 2011년~2020년 계획입지 수요 : 19.16㎢ + 5.75㎢ = 24.91㎢
- 미분양 면적과 해외이전면적, 휴폐업면적을 합산한 공급가능 면적은 17.93㎢임
  - 미분양 면적은 기 지정된 산업단지의 분양면적 중 분양이 완료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로 17.93㎢임
  - 해외이전면적과 휴폐업면적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 따라서, 향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추가 공급규모는 6.98㎢로 추정함
  - 24.91㎢ - 17.93㎢ = 6.98㎢

3.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기본방향

과거 공장용지 공급추이와 최근 산업입지 여건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공급계획 수립

- 과거 공장용지 공급추이를 고려한 권역별 공급규모 분배, 최근 산업입지 여건변화에 따른 증감추세를 반영한 시군별 분배
  - 지속적인 산업입지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계획을 수립
  - 산업입지의 공급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공급규모를 분배 후, 실수요에 따라 시군에서 탄력적으로 공급

- 내포신도시, 세종시 등에 따른 여건변화를 반영한 공급계획 수립

개별입지의 계획입지 유도, 지역산업육성정책을 고려한 산업집적 유도 등 효율적인 산업입지 관리

- 충남의 계획입지 비율은 2011년 4/4분기 기준(www.femis.go.kr) 35.62%로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 상 제시된 목표 70%에 비해 낮음
  - 계획입지(산업단지)의 경우, 오폐수 시설 등 환경적인 규제가 많은 반면, 지구단위 개별입지는 규제가 적음
  - 개별입지의 경우,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고려하여 입지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개별입지의 계획입지 유도를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등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정책이 필요
- 지역산업육성정책에 따라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집적을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산업입지 관리가 필요

수요창출과 수요대응을 고려한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

-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이 도내 입지하는 경우, 실수요자 개발 방식으로 산업단지가 지정되고 있음
  - 실수요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은 인접 지역에 새로운 수요창출을 발생시킴
  -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민간부문의 기업요구를 수용하고 추가적인 수요에 대응

환경관리체계구축, 지역별 환경용량을 고려한 환경 친화적 생태산업단지 조성

- 수요가 있는 지역에 산업단지를 공급하되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로 개발되어야 함

- 경쟁적인 산업단지 개발은 과도한 개발로 미분양사태의 초래와 환경문제의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음
- 앞으로 소득수준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산업단지의 개발은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이 매우 어렵게 될 것임
- 산업정책, 입지정책, 환경정책의 합리적 연계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환경용량을 감안한 산업입지 개발이 추진되어야 함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정주여건을 고려한 산업단지 공급계획 수립

- 기존 산업단지 정책은 산업용지, 도로, 항만, 수자원, 정력 등 물리적 입지여건 공급에 치중하고, 사회, 경제, 문화적인 입지여건은 간과해온 경향이 있음
  - 앞으로의 산업입지 공급은 단순 노동력의 확보나 생산 및 판매활동에 필요한 물리적 하부구조 보다는 정보 및 서비스 접근의 용이성과 환경의 쾌적성 확보에 치중할 필요가 있음
  - 작업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넓은 작업공간, 편리하고 쾌적한 작업 및 주변환경이 필요하며, 주거환경으로는 단순한 주거수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단위의 질 높은 사회적, 문화적 도시환경이 포함되어야 함

4. 충남 산업입지 수급계획

1) 계획의 비전

-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구현
  - 충남 산업입지수급계획의 비전은 산업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산업입지 수요예측과 공급가능지 분석을 바탕으로 도의 산업정책 및 육성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2) 계획의 목표

- 산업집적기반 구축과 산업경쟁력 강화
  -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전략적으로 산업의 집적을 유도함과 아울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토지(산업용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간 균형개발
  - 공간적으로 한정된 토지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균형 있는 개발을 도모
- 수요자 중심의 산업입지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
  - 기업의 현실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발하되, 경관 및 생태 등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산업입지 개발을 추구

(그림 6-1)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비전 및 목표

- 비전 :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구현
  - 산업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산업입지 수요예측과 공급가능지 분석을 바탕으로 도의 산업정책 및 육성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목표 및 추진전략
  - 산업집적기반 구축과 산업경쟁력 강화
    -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전략적으로 산업의 집적을 유도함과 아울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토지(산업용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간 균형개발
    - 공간적으로 한정된 토지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균형 있는 개발을 도모
  - 수요자 중심의 산업입지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
    - 기업의 현실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발하되, 경관 및 생태 등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산업입지 개발을 추구

3) 추진전략 및 계획과제

산업입지 공급 유연성 확보

- 저렴한 임대용지 확보 및 임대산업단지 조성
  - 지역 내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업의 입지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임대산업단지와 임대공장을 공급함으로써 산업입지 공급의 유연성 확보

신개념 생산공간 조성

- 기업지원 관련 생산환경 조성
  - 주거, 생산, 연구, 정보, 업무, 상업, 유통기능 등을 동일한 단지 내에 유치함으로써 집적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생산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 지식기반산업단지(전문화 및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해 물리적 하부구조 보다는 정보 및 서비스 접근의 용이성과 환경의 쾌적성을 도모하는 지식기반산업단지(전문화 및 소규모 특화단지)조성
- 생산공간의 경쟁력 강화
  - 인력공급, 교육훈련 및 창업보육 지원, 산·학·연 연계촉진과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 지원 활성화

환경 친화적인 산업입지 개발

- 지역별 환경용량 파악 및 환경성 검토
  - 산업입지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지역별 환경용량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environmentally friendly) 산업입지개발 추진
- 주민참여형 산업입지 의사결정체계 구축
  -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집단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산업입지개발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도록 의사결정과정에 해당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
- 환경관리체계 구축
  - 자연환경과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환경관리방안 수립과 산업입지개발 전단계에 걸친 일관된 환경관리체계 구축
- 생태산업단지(Eco-Industrial Park, EIP) 조성
  - 기업 간 생태학적 연계를 통해 물질 및 에너지의 사용과 오염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유기적 관계로 구성된 산업단지를 조성

외국인투자 촉진기반 조성

- 입지정보 시스템 운영
  - 외투기업의 부지수요과 충남도의 입지제공 정보를 연계하여 실시간 입지정보 시스템 운영

- 투자유치 기반 조성
  - 외투기업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투자자유지역을 지정하여 업종별 전문화단지, 핵심기업 연계단지 등을 추가적으로 조성하고, 외투기업의 투자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유지역개발기금 조성
-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조직 구성
  - 조직의 창의성, 효율성, 유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유치 전담T/F팀에 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잠재 투자자 탐색 및 유치활동 전개

수요 대응적 산업입지 공급

- 지역별・업종별・입지유형별 수요조사
  - 충남지역 내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주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성지역 및 지역별 단지규모 등을 결정
- 수요 대응적인 산업용지 공급체계 구축
  - 향후의 산업수요, 지역내외의 경제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인 산업용지 공급체계 구축 및 운영
-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 기업의 현실수요에 부합한 적정입지의 확보가 가능토록 실수요자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입지경쟁력을 제고

상생 산업단지 조성

- 산업단지 종사하는 근로자가 도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는 물론 입주기업과 주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입지 심의기준 마련 및 조례제정 등 산생산업단지 조성 기반 구축

<표 6-1> 충남 산업입지 공급의 추진전략 및 계획과제

추 진 전 략	계 획 과 제
산업입지 공급유연성 확보	• 저렴한 임대용지 확보 및 임대산업단지 조성
신개념 생산공간 조성	• 기업지원 관련 생산환경 조성 • 지식기반산업단지(전문화 및 소규모 특화단지) 조성 • 생산공간의 경쟁력 강화
환경 친화적인 산업입지개발	• 지역별 환경용량 파악 및 환경성 검토 • 주민참여형 산업입지 의사결정체계 구축 • 환경관리체계 구축 • 자원순환형 산업단지 조성
외국인투자 촉진기반 조성	• 투자유치 기반조성(외투기업전용 업종별 전문화단지 조성) •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조직 구성 • 입지정보 시스템 운영
수요 대응적 산업입지 공급	• 지역별·업종별·입지유형별 수요조사 • 수요 대응적인 산업용지 공급체계 구축 •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상생 산업단지 조성	•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 추진체계 구축(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시군추진위원회) • 종합계획, 추진계획 수립, 평가 및 보완

북부권은 환황해경제권 생산·교역의 거점으로 충남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유도

- 북부권 내륙지역에 정보·기술집약적 첨단산업을 배치하되 산업단지간·지역간 산업협력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대덕R&D특구 등과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 2012)
  - 아산만권 주변으로 전자정보기기, 자동차, 정밀화학, 바이오, 철강 등 전략산업의 생산 및 R&D 기능 중심의 첨단산업 집적지를 조성하여 디스플레이산업과 자동차부품산업에서의 집적의 경제(agglomeration economies)가 실현되도록 발전을 유도

서해안권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도하고 첨단 신산업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산업입지 공급

- 항만 배후지 및 서해안고속도로 IC 연접부를 중심으로 신산업 집적지를 조성(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 2012)
  - 타 업종에 비해 지역 내 공장용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석유 및 화학제품, 금속제품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조성
  - 당진의 철강산업과 연계하여 소규모 조선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산업은 기업 간에 자원·에너지·부산물을 순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생태산업단지 형태로 조성
  - 아울러 환경문제를 감안하여 자원순환형 또는 오염 무배출형(zero-emission) 등과 같은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내륙권은 첨단문화산업 및 농·축산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산업입지 공급

- 충남의 중서부 지역에 인구 10만의 다기능 내포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거점을 형성하고 주변지역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 2012)
  - 석유 및 화학제품, 유리 및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업종의 공장용지 수요가 많으므로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조성
  - 홍성, 청양, 예산 지역에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BT산업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농·축산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연기, 공주 지역에는 천안과 연계하여 문화컨텐츠 전문단지, 벤처단지를 조성

금강권은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산업입지 공급

- 역사·문화자원, 경관·환경자원, 토지자원, 다양한 농촌 어메니티자원 등을 활용하여 복합적인 녹색성장기반을 구축(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 2012)
  - 논산과 금산에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각 군수산업단지와 인삼·약초 바이오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부여에는 문화·컨텐츠 전문단지를 조성

4) 충남 산업용지 공급규모

※ 충남 산업단지 공급규모는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를 포함한 순수 공장용지(산업용지)를 대상으로 산정함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연평균 총 공급규모,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 공급규모를 추정함

- 산업용지의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연평균 총 수요는 2.736㎢로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북부권 2.028㎢, 서해안권 0.133㎢, 내륙권 0.340㎢, 금강권 0.235㎢로 나타남
  - 수요에 따른 산업용지의 총 공급 규모는 다시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계획입지 비율을 70%, 개별입지 비율을 30%로 추정한 결과는 다음 표에 제시함

<표 6-2> 권역별 산업용지 연평균 공급규모(수요추정 결과)

(단위 : ㎢/년)

구분	충남 계	북부권	서해안권	내륙권	금강권
총 공급규모	2.736	2.028	0.133	0.340	0.235
계획입지	1.916	1.420	0.093	0.238	0.165
개별입지	0.820	0.608	0.040	0.102	0.070

주 : 북부권은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서해안권은 보령, 서천, 태안, 내륙권은 공주, 계룡, 연기, 청양, 홍성, 예산, 금강권은 논산, 금산, 부여를 포함함

충남의 향후 2020년까지 산업용지 공급면적은 33,108㎢로 추정되었으며, 계획입지 24.908㎢, 개별입지 8,200㎢임

- 충남의 향후 2020년까지 산업용지 공급면적은 추정된 연평균 공급규모와 산업입지공급규모 수립지침에 따라 산정한 결과로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음
  - 산업입지공급규모 수립지침에 따라 2020년까지 향후 10년과 선공급 3년을 적용한 결과임(재개발, 재정비 수요 없음)
  - 충남 전체 공급규모는 33.108㎢로 계획입지 24.908㎢, 개별입지 8.200㎢로 산정됨
  - 권역별로는 북부권 공급규모가 충남전체 공급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남

<표 6-3> 향후 2020년까지 충남 권역별 산업용지 공급규모(수요추정 결과)

(단위 : ㎢)

구분	충남 계	북부권	서해안권	내륙권	금강권
총 공급규모	33.108	24.540	1.609	4.114	2.845
계획입지	24.908	18.460	1.209	3.094	2.145
개별입지	8.200	6.080	0.400	1.020	0.700

2020년 누적 계획입지 공급규모 추정결과 충남 전체 72.034㎢이며, 북부권이 50.578㎢로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4분기 현재까지 계획입지로 공급된 산업용지의 규모는 충남 전체 47.126㎢로 향후 공급규모를 고려할 경우 2020년 누적 공급규모는 72.034㎢가 될 것으로 나타남
  - 북부권의 2020년 누적 공급규모는 50.579㎢로 충남 전체 공급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누적 공급규모는 다음의 표에 제시함
  - 그러나, 제시된 결과는 수요추정의 결과만을 반영한 것으로 공급계획 수립시에는 최근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조정될 것임

<표 6-4> 향후 2020년까지 충남 권역별 계획입지 누적 공급규모(수요추정 결과)

(단위 : ㎢)

구분	충남 계	북부권	서해안권	내륙권	금강권
누적 공급규모 (2020)	72.034	50.578	5.579	10.960	4.917
계획입지 공급규모 (2011-2020)	24.908	18.460	1.209	3.094	2.145
기 공급규모 (조성중·미개발 제외)	47.126	32.118	4.370	7.866	2.772

주 : 기 공급규모는 2011년 4분기 현재까지 분양 완료된 면적을 의미함

5) 충남 산업단지 공급계획

(1) 권역별 공급계획

권역별 공급계획은 기 공급가능 규모와 최근 권역의 여건변화, 상위 계획,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수립함

- 2011년 말 미분양 면적은 8.335㎢로서 계획입지 공급계획(2011~2020) 규모 수요추정 면적(24.908㎢)에서 차감 적용
  - 권역별로는 북부권 5.459㎢, 서해안권 0.368㎢, 내륙권 2.508㎢로 나타남
- 북부권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기 지정된 공급규모가 크고, 지가상승 등의 수요 감소 요인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도내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반면, 내륙권은 내포신도시,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사업 등과 연관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최근 예산을 중심으로 내포신도시 인접 지역인 홍성, 청양 등의 산업입지 수요가 급증
  - 세종시와 관련하여 인접 지역인 공주를 중심으로 산업입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지구 연구 성과 상용화를 위한 입지수요 예측됨

- 이에 따라, 조정된 충남 권역별 공급계획은 다음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음
  -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권 수요 중 일부를 서해안권과 내륙권, 금강권으로 분배함
  - 내륙권 수요를 반영하여 북부권과 서해안권, 금강권의 일부 수요를 내륙권으로 분배함

<표 6-5> 2012~2020년 충남 권역별 산업입지 공급계획

(단위 : ㎢)

구분	충남 계	북부권	서해안권	내륙권	금강권
총 공급규모 (2012-2020)	24.773	13.738	1.976	5.640	3.419
계획입지	16.573	9.361	1.342	3.355	2.515
개별입지	8.200	4.377	0.634	2.285	0.904

- 공급계획에 따른 2020년 계획입지 누적 공급규모는 북부권 52.745㎢, 서해안권 7.569㎢, 내륙권 15.364㎢, 금강권 5.947㎢로 나타남

<표 6-6> 향후 2020년까지 충남 권역별 공급계획상 산업입지 누적 공급규모

(단위 : ㎢)

구분		충남 계	북부권	서해안권	내륙권	금강권
계획입지	기 공급	65.052	43.384	6.227	12.009	3.432
	2012-2020 공급	16.573	9.361	1.342	3.355	2.515
	2020년 누적	81.625	52.745	7.569	15.364	5.947
개별입지	기 공급	55.097	39.847	2.108	8.414	4.729
	2012-2020 공급	8.200	4.377	0.634	2.285	0.904
	2020년 누적	63.297	44.224	2.742	10.699	5.633
2020년 누적 계		144.922	96.969	10.311	26.063	11.580

주 : 계획입지 기 공급은 2011년 4분기 기준 분양대상면적(미개발 포함). 개별입지 기 공급은 FEMIS(2011년 4분기 기준) 자료

권역별 공급규모는 총량적인 의미에서 수립된 계획으로, 산업입지 여건변화에 따라 권역내 시군 간 분배는 조정이 가능함

- 산업입지 수요는 기반시설, 지가, 특정산업의 집적 등 다양한 요인으로 변화될 수 있으며, 충남 지역의 경우 실수요자 개발이 활발함에 따라 시군의 공급규모 분배는 수정될 가능성이 많음
  - 따라서, 권역별 공급계획은 총량적인 의미에서 제시된 것이며, 시군간 분배는 조정이 가능함

권역별 공급규모를 총량으로, 최근의 산업입지 현황, 여건변화, 정책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급규모를 분배함

- 최근 산업입지 현황, 여건변화, 정책수요 등에 따라 권역별 총량을 분배하고, 공급가능 면적(기 지정된 산업단지 중 미분양 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함

연차별 공급계획은 향후 여건변화에 따른 산업입지 공급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내포신도시, 세종시 등 내륙권 수요에 대비하여 분배함

- 연차별 공급계획은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2012년, 2013~2015년과 2016~2020년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세종시와 내포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되는 2012년, 2013년 전후의 산업입지 수요를 고려하여, 2013~2015년에 공급규모의 비중을 60%로 산정함
  - 평택당진항의 2단계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이후 관련 수요가 증가될 것을 고려함
- 권역별 공급계획의 공급면적은 수요분석에 따른 결과로 실제 산업입지 수요에 따라 권역 내외에서 시군 간 협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공급시기 또한 조정 가능함
  - 제시된 공급계획은 미래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임을 고려하여 공급규모의 ±5%에서 유연성을 가짐

<표 6-7> 권역별 산업입지 수급계획(계획입지)

(단위 : ㎢, %)

구분	수요추정 면적	미분양 면적		추가공급 면적		공급계획			2012-2020년 공급 계	
						2012	2013~2015	2016~2020		
계	24.908	8.335	100	16.573	100	6.619	5.973	3.981	16.573	100
북부권	18.460	5.459	65.5	13.001	78.4	5.037	2.595	1.729	9.361	56.5
서해안권	1.209	0.368	4.4	0.841	5.1	0.246	0.658	0.438	1.342	8.1
내륙권	3.094	2.508	30.1	0.586	3.5	1.046	1.385	0.924	3.355	20.2
금강권	2.145	0.000	0.0	2.145	12.9	0.290	1.335	0.890	2.515	15.2

<표 6-8> 권역별 산업입지 수급계획(개별입지)

(단위 : ㎢, %)

구분	수요추정 면적		공급계획			2012-2020년 공급 계	
			2012	2013~2015	2016~2020		
충남 계	8.200	100.0	0.918	2.732	4.550	8.200	100.0
북부권	6.080	74.1	0.491	1.458	2.428	4.377	53.4
서해안권	0.400	4.9	0.070	0.213	0.351	0.634	7.7
내륙권	1.020	12.4	0.256	0.761	1.268	2.285	27.9
금강권	0.700	8.6	0.101	0.300	0.503	0.904	11.0

충청남도 산업입지 중장기 기본계획(2006), 충남 산업입지 공급계획(2009)의 결과와 비교

- 충남의 산업입지 관련 공급계획은 2006년, 2009년 수립되었으며, 2012년은 2009년 수립된 공급계획의 수정계획임
  - 각각의 계획에서 제시한 권역별 산업용지(계획입지)는 다음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음
  - 2006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충남 전체의 2011~2020년 산업입지(계획입지) 공급규모

는 49.9㎢ 임

- 2009년 공급계획에서는 2011-2018년 30.3㎢로 2006년 기본계획 보다 줄었음
- 그러나 2012년 수정계획에 제시된 산업입지 규모는 16.6㎢로 앞선 두 계획보다 적게 나타남
- 이는 공급계획 수립에 있어서 2011년 이전에 지정되었으나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일부 정책적 목적을 가진 대규모의 산업단지가 존재하기 때문임(미분양 8.3㎢)

<표 6-9> 기 수립된 공급계획에서의 권역별 산업용지(계획입지) 규모 비교

(단위 : ㎢)

구분	충청남도 산업입지 중장기 기본계획(2006)		충남 산업입지 공급계획 (2009)		충남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정계획(2012~2020)	
	2011~2015	2016~2020	2011~2015	2016~2018	2012~2015	2016~2020
충남 계	33.339	16.604	26.267	3.997	12.592	3.981
북부권	17.824	12.038	13.415	2.175	7.632	1.729
서해안권	9.193	0.165	3.234	0.591	0.904	0.438
내륙권	3.783	2.087	4.805	0.727	2.431	0.924
금강권	2.539	2.314	4.813	0.504	1.625	0.890